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Safety Report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Safety Report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예가 드물 정도로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압축성장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에 들어 한국의 경제규모는 GDP 기준 세계 10위권에 이를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비롯하여 각종 안전사고 소식을 접할 때면, 성장 이면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안전 취약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UN은 2015년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를 통해 재난안전 위험 요인에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이러한 국제공조에 부응하고 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자 안전 지표·통계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최근 부각되는 안전 이슈를 포괄하기 위하여 2022년 안전지표 개편 연구를 실시하여 총 60개의 안전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는 개편된 안전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안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안전 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요인 등 4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지표의 측정 결과와 최근 추세 및 시계열 비교 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표 이해를 위한 관련 통계와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도 함께 수록하여 우리나라 안전 현황을 폭넓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데에 작은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지표 개편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정지범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과 통계개발원의 민경아 사무관, 조진혜 주무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Contents

PART 1 개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08
2. 안전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10

PART 2 영역별 측정결과

1. 위해 · 환경요인

범죄발생률	15	위험기상일수	2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16	미세먼지(PM2.5) 농도	23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17	대기 중 오존 오염도	24
성폭력 발생건수	18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25
화재 건수	19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26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0	야간보행 안전도	27
온실가스 배출량	21	사회안전 인식도	28

2. 취약요인

등록장애인 수	30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8
노령화지수	31	우울감 경험률	39
독거노인 비율	32	사회적 고립도	40
국내 체류 외국인 수	3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1
지니계수	34	음주운전 경험률	42
실업률	35	월간 음주율	43
범죄피해율	36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44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37		

3. 대응역량

경찰 1인당 주민 수	4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51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47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52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48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53
총 병원 병상 수	49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54
안전띠 착용률	50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55

4. 피해(영향)요인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손상 사망률)	57	자연재난 인명피해	67
운수사고 사망률	58	자연재난 피해액	68
낙상 사망률	59	사회재난 인명피해	69
익수사고 사망률	60	사회재난 피해액	70
가해에 의한 사망률	61	산업재해 사망률	71
중독 사망률	62	산업재해율	72
화재 사망률	63	보이스피싱 피해액	73
자살률	64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74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	65	식중독 발생건수	75
낙상 입원율	66	온열질환자 수	76
운수사고 입원율	66		

PART 3 부 록

1. OECD 국제비교	78
2. 안전지표 자료출처	92
3. 참고문헌	102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Safety Report 2022

PART 1

개 요 >>>>

작성배경 및 목적	08
안전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10

작성배경 및 목적

안전(Safety)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권을 토대로 1989년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WHO 선언¹⁾이 있었다. 이후 안전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상태가 통제되는 상태이며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원(WHO, 1998)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발전하였다.

안전(Safety) 사고(Accident)는 손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손상은 생물학적 혹은 물리적 손상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심리적 혹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²⁾. 2021년 질병이외의 원인, 즉 사고사 등의 손상사망자는 총 26,147명(8.2%)으로 매일 7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특히 손상은 전 연령층에서 주요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 손실 등의 미래가치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도 변화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피해 중 상당수는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에서 기인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승강기 추락사고, 물류창고 대형 화재,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태원 압사사고까지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있어 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폭한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온열 및 한랭질환 환자, 폭우에 의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안전 문제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동학대, 젠더폭력, 사이버범죄 등 범죄피해 뉴스들이 여러 곳에 들려오고 있다.

1) 안전에 관련된 첫 국제회의로, 안전공동체 선언(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을 채택하였다.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개념은 이 선언에 기초로 함.

2)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사고와 손상에 대한 용어 정리함.



우리나라는 1,200종이 넘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해 내고 있으나, 현재 안전관련 통계 및 지표가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존재하며, 각 지표의 포괄범위 또한 다양하여 안전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응·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안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문제인식 및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안전 영역의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17」과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1」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재해재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보건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로 강화된 산업안전, 다양한 유형과 진화된 수법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등 이전의 안전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들 새로운 위험요인과 각 이슈들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정책성과를 포괄하기에는 안전지표 체계의 노후화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변화상과 안전이슈 전반을 포괄할 안전지표로 개편하고, 정책 시의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국가단위 안전지표 분석보고서인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로 리뉴얼하게 되었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통상적으로 안전의 정의는 UN(1994)과 WHO(1998)에서 정의한 개념을 사용한다. 먼저, UN 안전보고서(1994)에서의 안전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필수조건이다. WHO(1998)³⁾에서의 안전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상황들이 관리되는 상태로 보고 있다.

안전지표 개편을 위해서는 안전 프레임워크의 재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워크 구성의 근간이 되는 이 안전개념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통적 안전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단순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까지로 확장하여 안전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신규지표 등 새로운 안전영역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안전 개념의 재정의

기 존(2021)	개 편(2022)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사고의 외인과 취약요인들이 관리되는 상태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이 관리되는 상태

기존의 안전 프레임워크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국제적 흐름에 맞게 ‘취약요인(vulnerability)’에서 ‘환경요인(노출, exposure)’을 분리하였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단계에서의 직·간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중·장기적 영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영향(impact)’ 개념을 도입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사전·사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대응역량(coping capacity)’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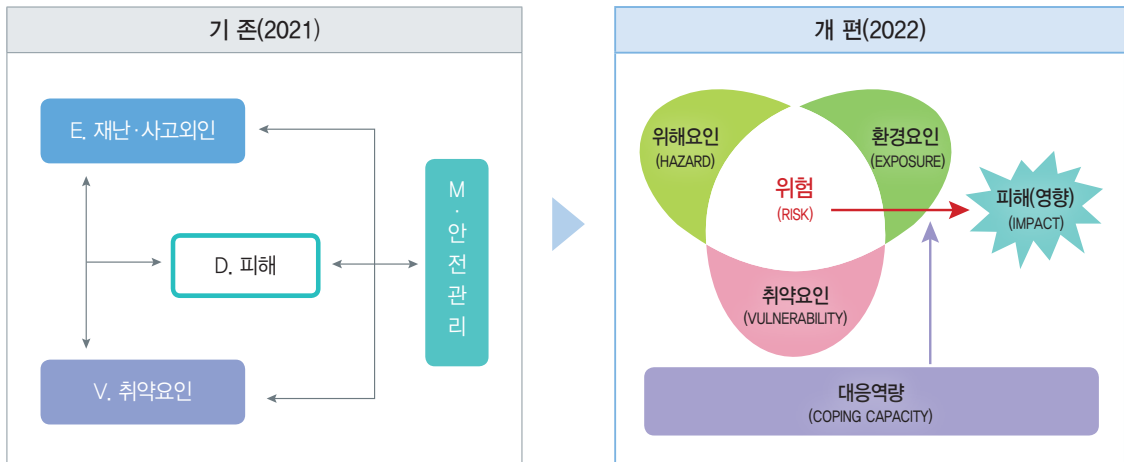
〈표〉 안전영역별 정의

영역명	정 의
위해요인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현상 또는 인간 활동
환경요인	위험한 장소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나 시설의 현황
취약요인	동일한 위해요인과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성질
대응역량	재난 위험을 관리하거나 감소시키고,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한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모든 능력, 속성 및 자원의 조합
피해(영향)요인	위험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

3) WHO,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 1998



〈그림〉 안전 프레임워크의 개편 결과



그 결과, 안전영역은 기존 3개 영역(재난·사고외인, 취약요인, 안전관리)에서 위해요인, 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요인의 5개 개념으로 확장·구성하였다. 그러나 위해요인과 환경요인의 일부 지표는 지표의 조작적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지표관리를 위해 두 요인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요인 4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확장된 안전 프레임워크에 맞춰,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재해재난, 안전 취약계층 등의 최근 주요 안전이슈와 관련된 신규지표 14개를 추가 발굴하였다. 또한, 이전 안전지표에서 활용도 낮은 지표 삭제·변경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60개 지표로 구성된 신규 안전지표를 마련하였다.

〈표〉 신규 발굴 안전지표

안전이슈	신규 발굴 안전지표	지표수
기후변화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중 오존 오염도,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5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보이스피싱 피해액	3
재해재난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사회재난 인명피해,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4
취약계층	국내 체류 외국인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

〈표〉 안전지표 개편 결과

(총 60개 지표)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요인	
1.1	범죄발생률	2.1	등록장애인 수	3.1	경찰 1인당 주민 수	4.1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2	노령화지수	3.2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4.2	운수사고 사망률
1.3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2.3	독거노인 비율	3.3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4.3	낙상 사망률
1.4	성폭력 발생건수	2.4	국내 체류 외국인수	3.4	총 병원 병상 수	4.4	익수사고 사망률
1.5	화재 건수	2.5	지니계수	3.5	안전띠 착용률	4.5	가해에 의한 사망률
1.6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6	실업률	3.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4.6	중독 사망률
1.7	온실가스 배출량	2.7	범죄피해율	3.7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4.7	화재 사망률
1.8	위험기상일수	2.8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3.8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4.8	자살률
1.9	미세먼지(PM2.5) 농도	2.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9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4.9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1.10	대기 중 오존 오염도	2.10	우울감 경험률	3.10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10	낙상 입원율
1.11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2.11	사회적 고립도			4.11	운수사고 입원율
1.12	체내 환경유해물질 (중금속) 노출 수준	2.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12	자연재난 인명피해
1.13	야간보행 안전도	2.13	음주운전 경험률			4.13	자연재난 피해액
1.14	사회안전 인식도	2.14	월간 음주율			4.14	사회재난 인명피해
		2.15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4.15	사회재난 피해액
						4.16	산업재해 사망률
						4.17	산업재해율
						4.18	보이스피싱 피해액
						4.19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4.20	식중독 발생건수
						4.21	온열질환자 수
14개		15개		10개		21개	

PART 2

Safety Report 2022



안전영역별 현황

제1장 위해 · 환경요인	15
제2장 취약요인	30
제3장 대응역량	46
제4장 피해(영향)요인	57



제 1장
위해·환경요인



범죄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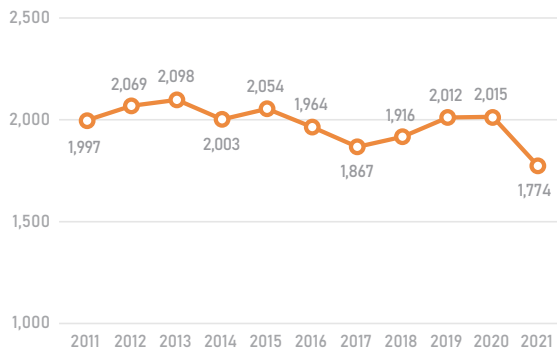


지표정의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
측정방법 (형법범죄 발생건수 ÷ 장래추계인구) × 100,000

-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를 의미하며,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2021년 우리나라 형법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에 비해 241건(12.0%) 감소하여 범죄위험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별로는 살인, 강도, 폭행, 절도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만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국가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간 비교가 쉽지 않지만, 살인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비교 가능하다. 살인범죄(단,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미포함) 발생률 비교 시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0.6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0.3건에 비해서는 두 배 높다.

형법 범죄발생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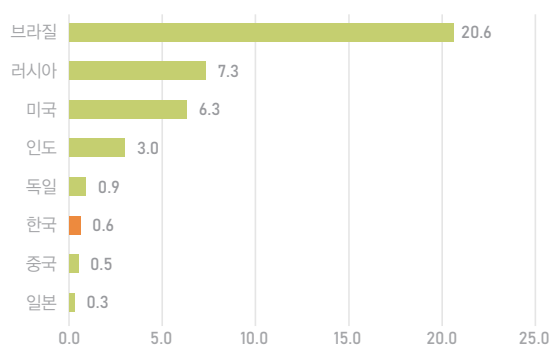
(단위: 건/10만명)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요국 살인범죄 발생률(2020)

(단위: 건/10만명)



출처: UNODC, 「UNODC Crime data」

주요 형법 범죄발생률(2011~2021)

(단위: 건/10만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형법범죄발생률	1,997	2,069	2,098	2,003	2,054	1,964	1,867	1,916	2,012	2,015	1,774
주요 형법 범죄	살 인	2.4	2.0	1.9	1.8	1.9	1.7	1.6	1.6	1.6	1.3
	강 도	8.1	5.3	4.0	3.2	2.9	2.3	1.9	1.6	1.3	1.0
	성폭력	44.1	42.5	53.4	58.8	60.9	57.3	63.9	62.2	61.9	63.6
	폭 행	246.9	255.2	250.9	288.9	316.8	336.0	322.2	318.8	313.1	231.0
	절 도	563.8	583.8	576.7	525.7	483.0	397.5	358.9	343.9	362.9	322.3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년기준)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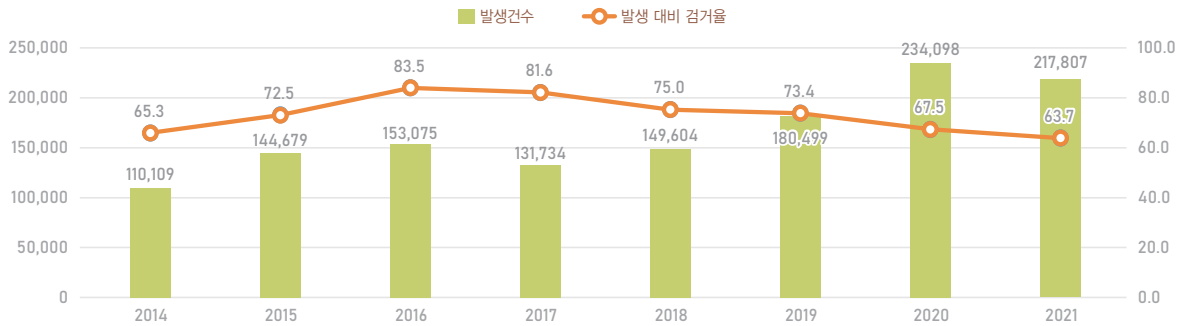


지표정의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됨
측정방법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불법콘텐츠범죄 발생건수의 합

-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며,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주요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로는 해킹, DDos, 악성프로그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등이, 불법콘텐츠범죄로는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등 해당된다.
- 2021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17,807건으로 전년 (234,098건) 대비 16,291건(7.0%) 감소하였다. 검거율 역시 67.5%에서 63.7%로 3.8%p 감소하였다.
- 사이버범죄 유형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2021년 기준 174,684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199,594건)보다는 12.5% 감소하였다. 반면, 불법콘텐츠범죄는 지속 증가추세로 전년(30,160건)보다 30.2% 증가한 39,278건이 발생하였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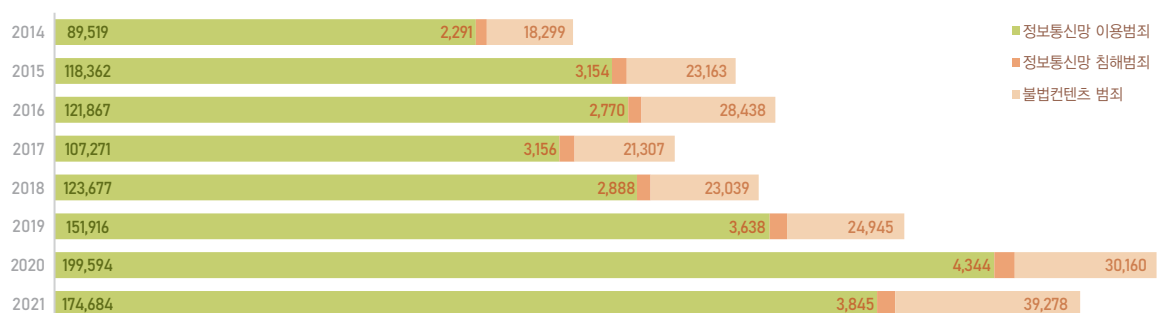
(단위: 건, %)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건수(2014~2021)

(단위: 건)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지표정의 인터넷 이용자 중 지난 1년간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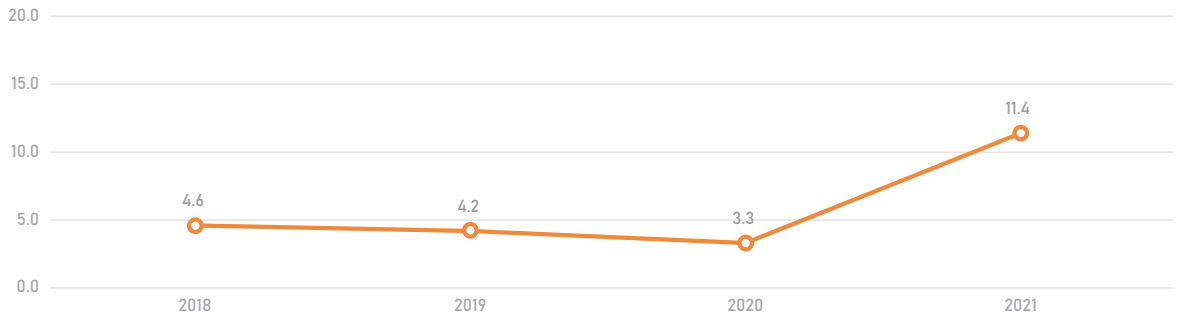
측정방법 최근 1개월내 인터넷 이용자(만12~69세) 중 지난 1년간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일상생활에서의 사이버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보보호의 중요성 역시 강화되고 있다.
- 인터넷 이용자 중 지난 1년간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2021년 11.4%로, 전년(3.3%) 대비 8.1%p 증가하였다. 침해사고 유형별로는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7.3%),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3.4%),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3.0%), 피싱/

파밍/스미싱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1.0%),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0.6%) 순으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감소추세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에 의한 인터넷 노출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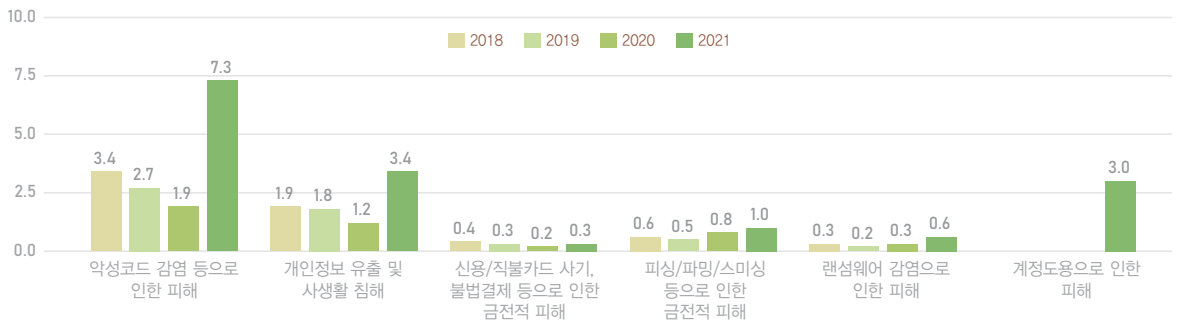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별 경험률(2018~2021)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주: 2021년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 추가

성폭력 발생건수



지표정의 경찰에 대한 신고 등에 의한 연간 성폭력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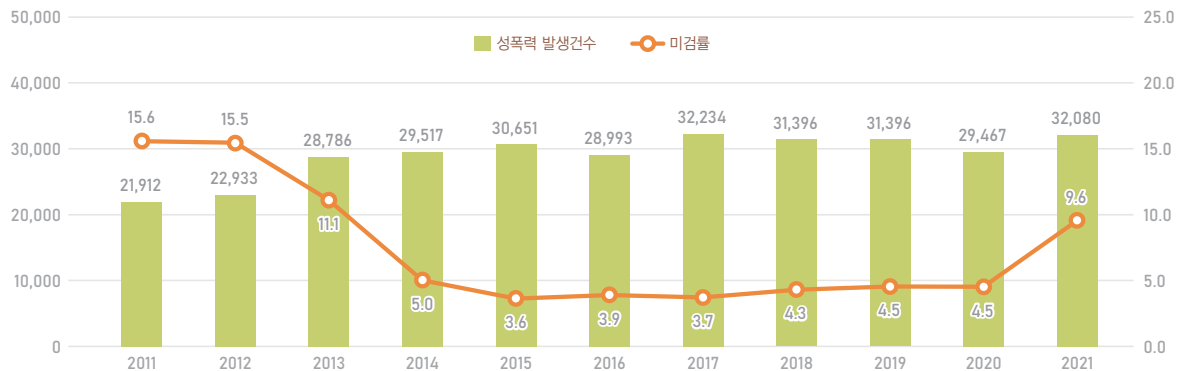
측정방법 연간 시도 경찰청에 신고된 성폭력 발생건수의 합

-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메세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 전국 각 시도 경찰청으로 신고된 성폭력 발생건수는 2021년 32,080건으로 전년(29,467건)보다 8.9% 증가하였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미검률은 2021년 9.6%로

전년(4.5%)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20,267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6,212건), 통신매체이용음란(5,067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53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강간 및 강제추행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폭력 발생건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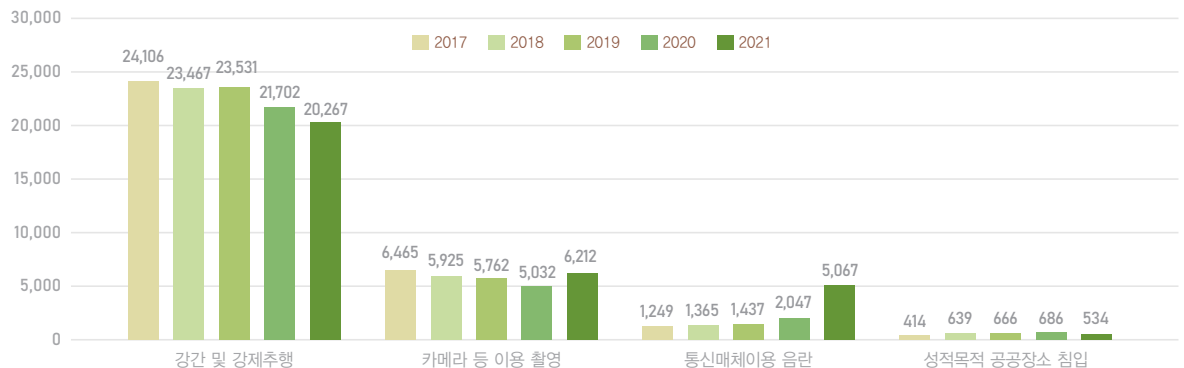
(단위: 건, %)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유형별 성폭력 발생건수(2017~2021)

(단위: 건)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화재 건수



지표정의 연간 전국 화재사고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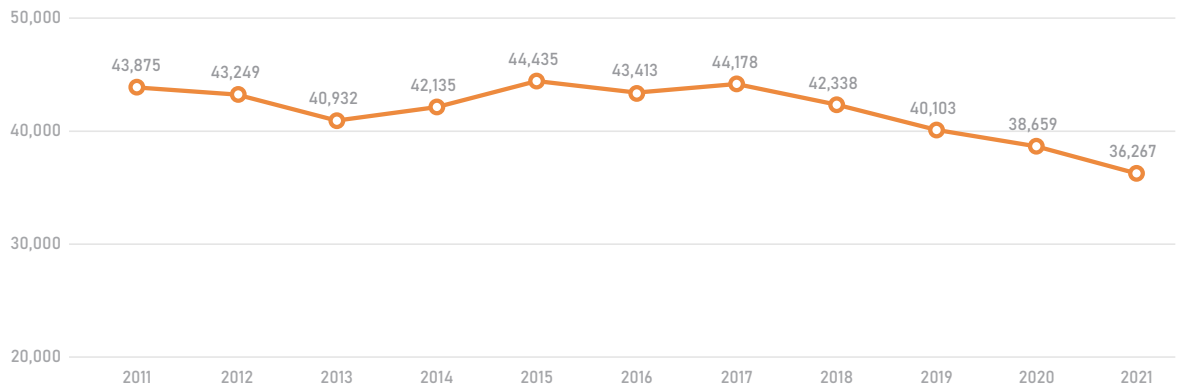
측정방법 연간(1.1~12.31.) 전국 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하는 건축물화재, 차량, 선박, 항공기화재, 옥외화재 등 모든 화재

- 2021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6,267건으로 전년(38,659건)대비 6.2% 감소하였다. 화재 건수는 2017년(44,178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조 991억으로 전년(6,005억)대비

83.0% 증가하였다. 2021년 발생화재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46.5%), 전기적 요인(26.1%), 기계적 요인(11.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화재 건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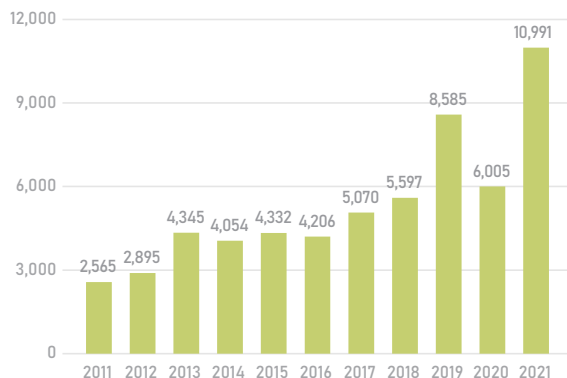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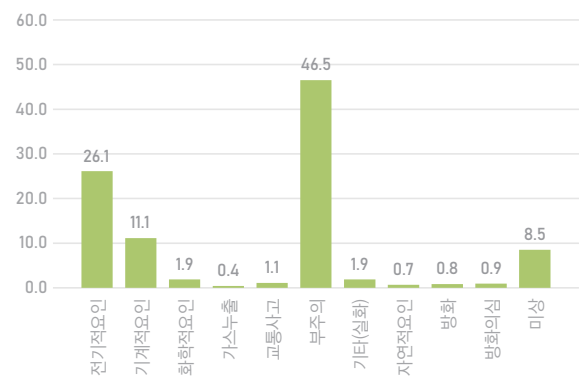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화재원인별 발생현황(2021)

(단위: %)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표정의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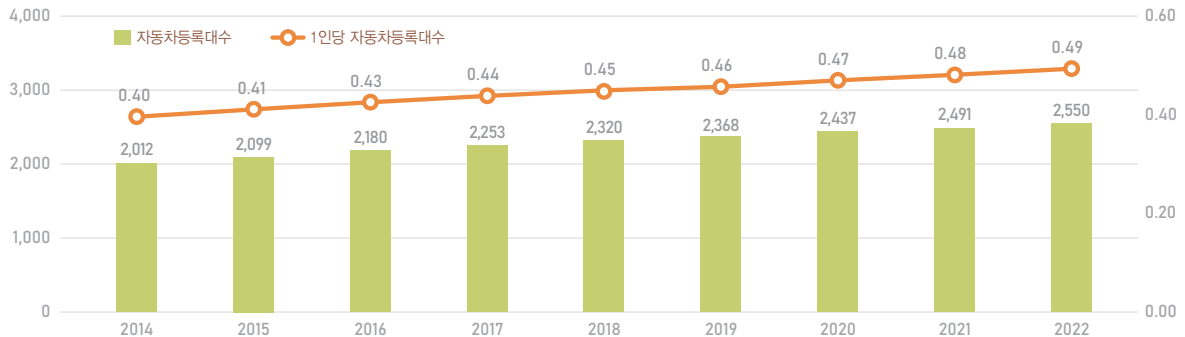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 장래추계인구

-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2,550만대로 전년(2,491만대) 대비 2.4%(59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49대로 전년(0.48대) 대비 2.1%(0.1대) 증가하였다.
- 그간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5년 100만대를 돌파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운행제한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는 전년대비 37.2%(43만대) 증가하였고, 전체 자동차 중 6.2%(159만대)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2014~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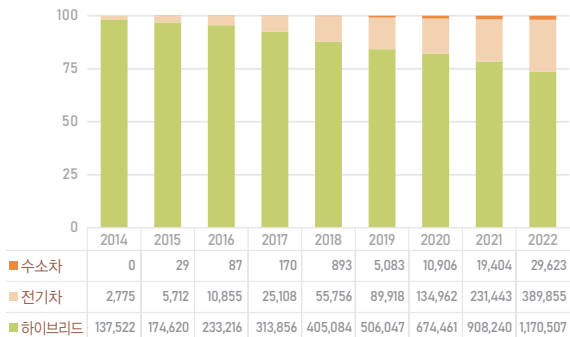
(단위: 만 대, 대/인)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친환경 자동차 등록현황(2014~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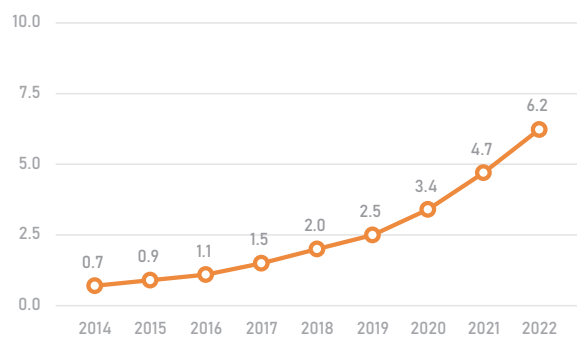
(단위: 대, %)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2014~2022)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정의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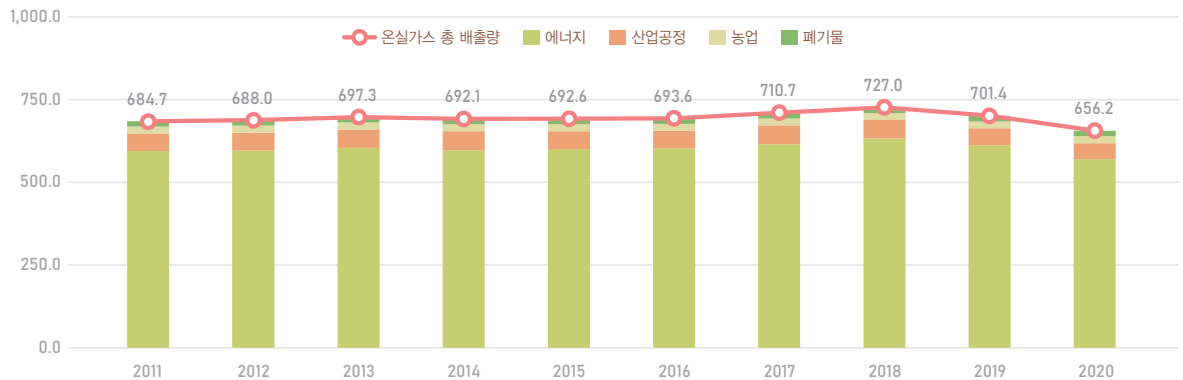
측정방법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계

- 온실가스는 지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지구환경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나, 산업발달로 인한 필요 이상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여 이상기후 현상과 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 202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56.2백만톤으로 전년

(701.4백만톤) 보다 6.4% 감소하였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액(GDP)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56.7톤으로 2019년 378.6톤에 비해 5.7%가 개선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7톤으로 2019년 13.5톤에 비해 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2011~2020)

(단위: 백만톤 CO₂ 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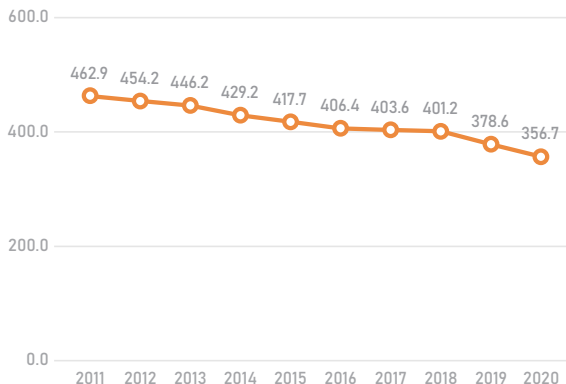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주: 톤 CO₂ eq.: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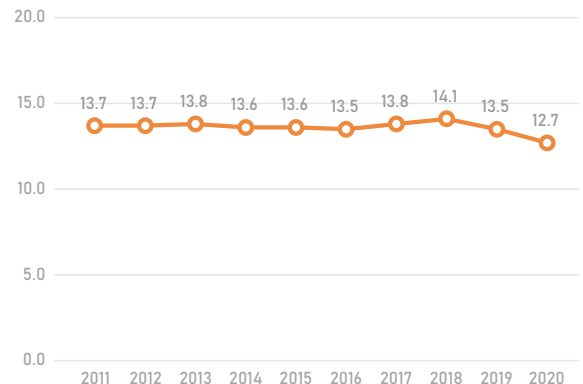
(단위: 톤 CO₂ eq./십억원)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1~2020)

(단위: 톤 CO₂ eq./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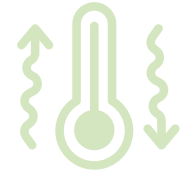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PART
2-1

위
해
·
환
경
요
인

위험기상일수



- 지표정의**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가 평년값 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를 보인 강풍, 폭염, 한파, 호우 일수
- 측정방법**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일수, 한파 10월에서 익년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일수, 호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30mm이상인 일수, 강풍은 최대풍속이 14m/s이상인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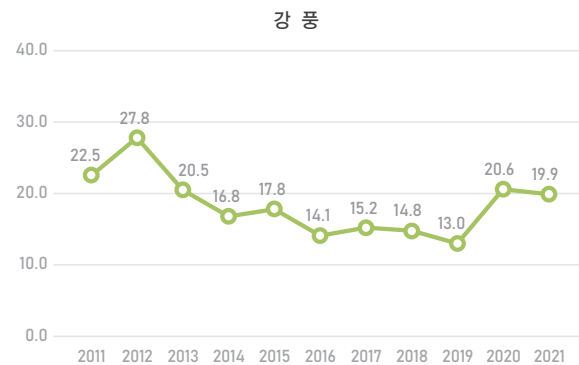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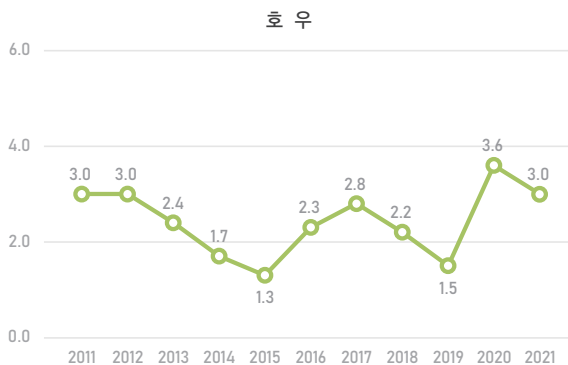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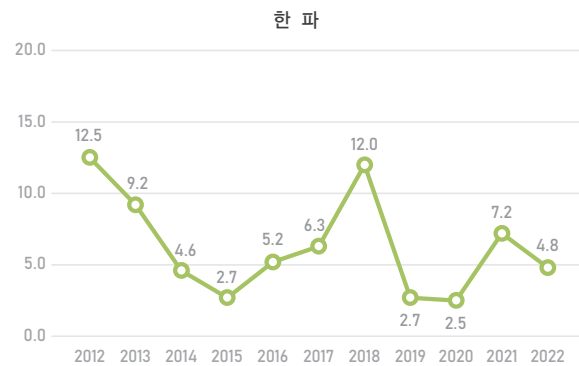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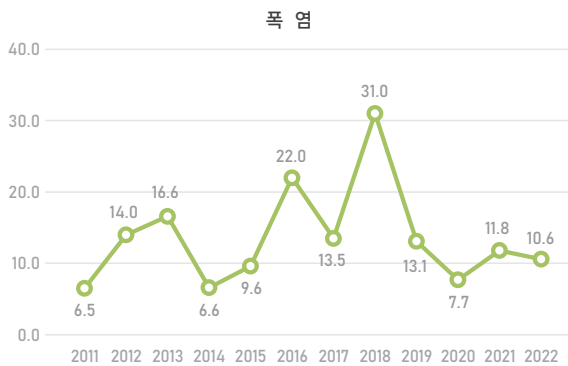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년값 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 폭염일수는 2022년 10.6일로 2021년(11.8일) 대비 1.2일 감소하였다. 2018년은 31.0일의 기록적인 폭염일수를 기록하여, 폭염사망자 48명을 포함하여 온열질환자가 4천명

이상 발생하였다.

- 한파일수는 2022년(2021년 10월~2022년 4월) 4.8일로 2021년(7.2일) 대비 2.4일 감소하였다.
- 호우일수는 2021년 3.0일로 2020년(3.6일) 대비 0.6일 감소하였고, 강풍일수는 2021년 19.9일로 2020년(20.6일) 대비 0.7일 감소하였다.

위험기상일수(2011~2022)

(단위: 일)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주: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일수, 한파는 10월에서 익년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일수, 호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30mm이상인 일수, 강풍은 최대풍속이 14m/s이상인 일수

미세먼지(PM2.5) 농도



지표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mu\text{m}$ 이하의 먼지)의 농도로 측정

측정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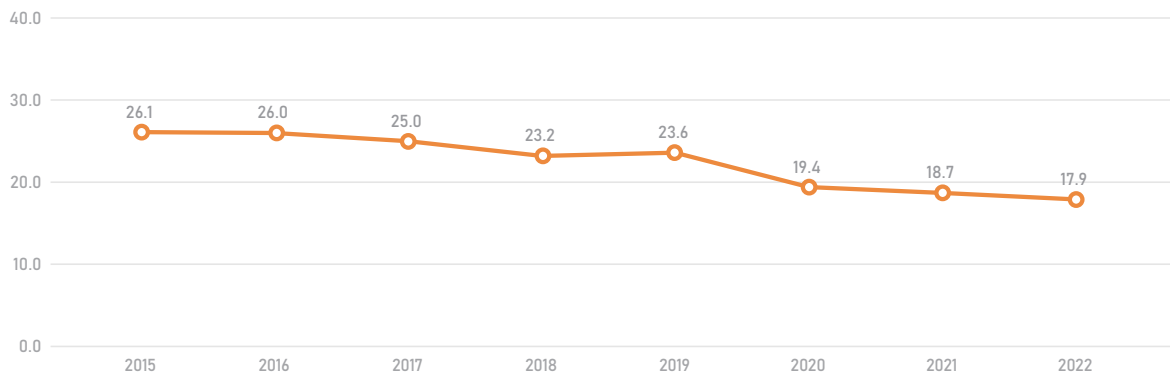
● 미세먼지는 숨 쉴 때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침투하여 단시간 흡입으로는 신체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지속적 노출시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어 대기오염에 의한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폐포까지 침투할 만큼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PM2.5)는 아동,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의 취약계층 보건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2020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2022년 미세먼지 농도는 $17.9\mu\text{g}/\text{m}^3$ 로 전년($18.7\mu\text{g}/\text{m}^3$)보다 $0.8\mu\text{g}/\text{m}^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2015~2019년 사이 $23\sim 26\mu\text{g}/\text{m}^3$ 내외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으나, 2020년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차량 이용의 감소와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미세먼지(PM2.5) 농도(2015~2022)

(단위: $\mu\text{g}/\text{m}^3$)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17개 시도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인구 가중평균하여 합산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환경부)

단 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 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경보 발령 및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③ 내일 $75\mu\text{g}/\text{m}^3$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 의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mu\text{g}/\text{m}^3$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 계	$2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 각	$4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mu\text{g}/\text{m}^3$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대기 중 오존 오염도



지표정의 연간 대기 중 평균 오존(O₃)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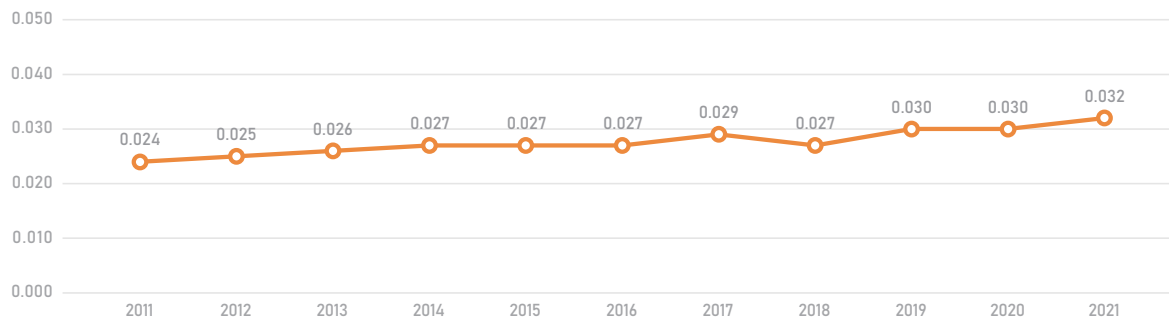
측정방법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으로 측정된 연간 평균 오존(O₃) 농도

- 대기 중 오존(ozon, O₃)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유독물질이 된다.
- 2021년 대기 중 오존 오염도는 전년(0.030ppm)보다 0.002ppm 증가한 0.032ppm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다. 오존 경보제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 경보를 발령하는데, 1995년 7월 서울지역에서 오존 경보제를 시범실시 이후 17개 시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현재까지 경보나 중대경보는 한번의 발령도 없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21일 증가한 67일 발령하였다.

대기 중 오존농도(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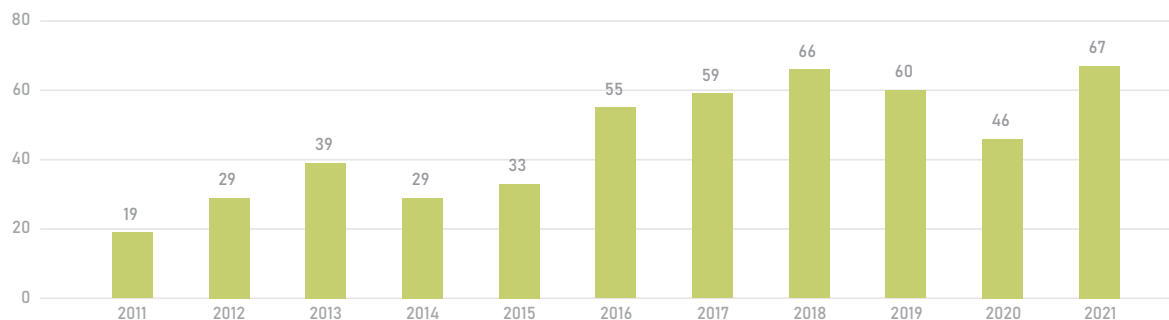
(단위: ppm)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2011~2021)

(단위: 일)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주: 오존경보제 시행 이후 오존경보 발령 사례는 없으며, 주의보 발령만 시행됨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지표정의 1인당 하루평균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측정방법 연간 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량 ÷ 장래추계인구 ÷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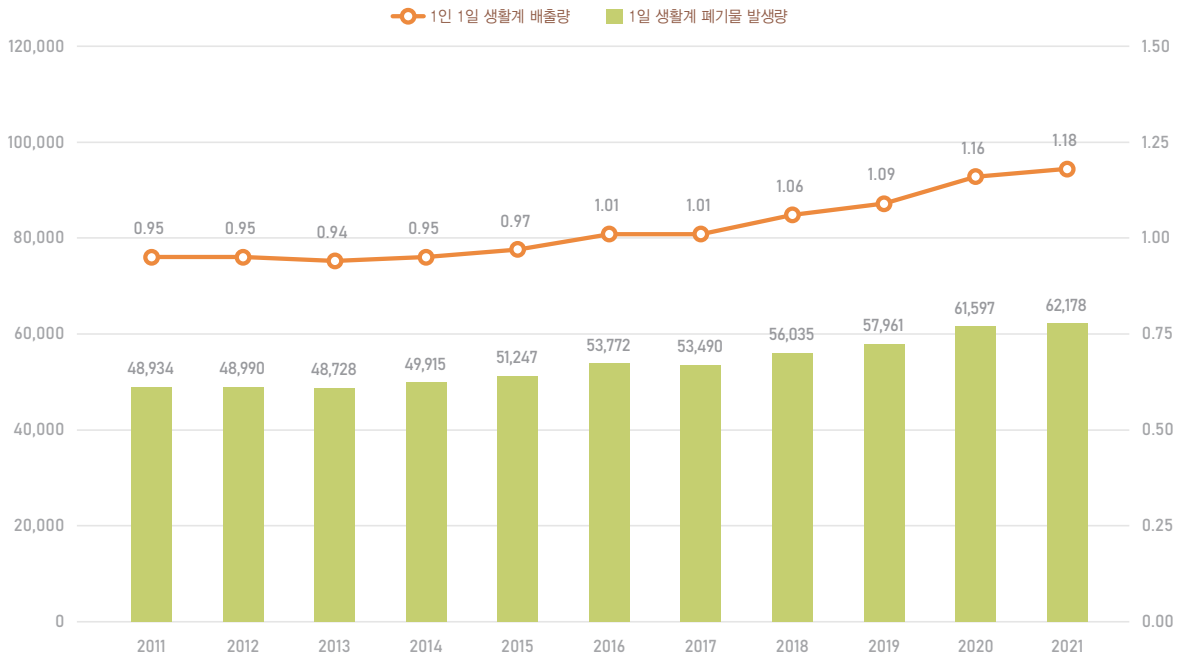
- 생활계 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는 작업이나 공사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의미하며, 특히 사업장 폐기물 중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즉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해당된다. 폐기물의 증가는 매립·소각·해양투기 등 처리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수질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도 연계되므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일 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62,178톤으로 2020년(61,597톤/일) 보다 0.9% 증가하였다. 1인 1일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1.18kg으로 전년(1.16kg) 대비 0.02kg, 1.7% 증가하였다. 그동안 생활계 폐기물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배 및 배달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일평균 6만톤을 넘어서게 되었다.

PART
2-1

위
해
·
환
경
요
인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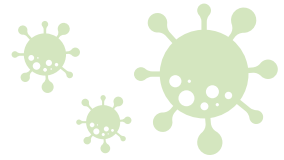
(단위: kg/일, 톤/일)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생활계 폐기물= 생활 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지표정의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환경오염물질(납, 수은, 카드뮴) 노출 수준
측정방법 성인 기준 혈액 및 소변 검사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농도의 평균

- 정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3년 단위로 국민을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수준, 원인, 경로의 현황 파악 등을 분석한다.
- 환경유해물질 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중금속 화합물에 노출되어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중금속 중독의 경우 직·산업적 또는 지역적 중독사고 발생에 의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납은 뼈에 침착되는 만성

중독을, 수은은 중추신경장애인 미나마타병을, 카드뮴은 신경 장애인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제4기(2018~2020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서 성인의 혈액 중 납 농도는 $1.51\mu\text{g}/\text{dL}$ 로 이전 조사(제1기~제3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혈액 중 수은의 농도는 $2.96\mu\text{g}/\text{L}$ 으로 제3기($2.75\mu\text{g}/\text{L}$)보다 $0.21\mu\text{g}/\text{L}$ 증가하였다. 성인의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0.35\mu\text{g}/\text{L}$ 로 제3기($0.36\mu\text{g}/\text{L}$)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농도

(단위: $\mu\text{g}/\text{dL}$, $\mu\text{g}/\text{L}$)



출처: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주: 성인 기준 수치로, 납과 수은은 혈액 중 농도이며 카드뮴은 소변 중 농도임.

생체시료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skewed) 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로그변환을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 그 값을 자연로그의 지수로 하는 기하평균을 대표값으로 제시함.

야간보행 안전도



지표정의 야간보행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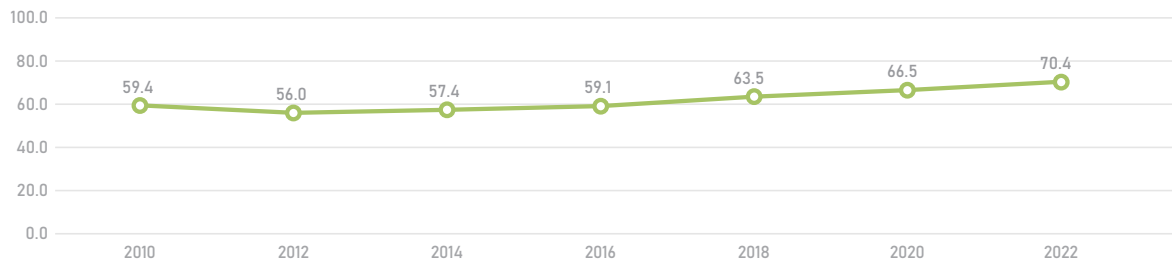
-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야간보행 안전도는 안전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 OECD Better Life Index(BLI)에서도 '가해에 의한 사망률'과 함께 안전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통계청 '사회조사'는 2018년까지는 집 근처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로 조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 4점척도로 묻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0년

66.5%로 기존의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은 2020년보다 3.9%p 증가한 70.4%로 나타나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84.9%)와 여자(56.0%)의 인식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야간보행 안전도(2010~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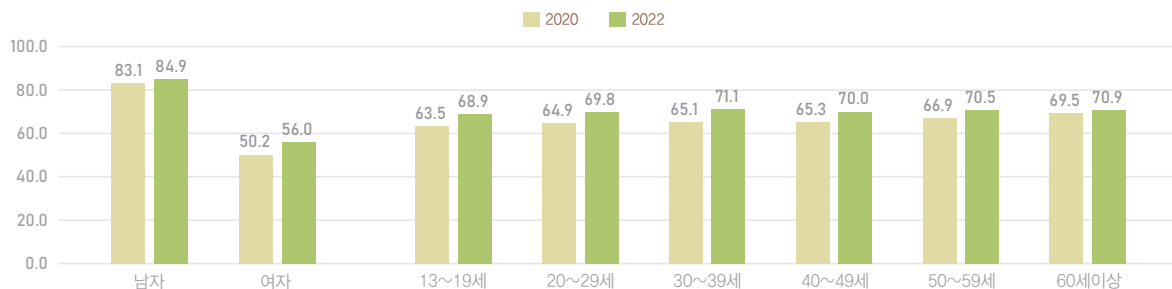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8년까지는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됨.

2010년까지는 15세이상, 2012년부터는 13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성별 · 연령별 야간보행 안전도(2020 · 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안전 인식도



지표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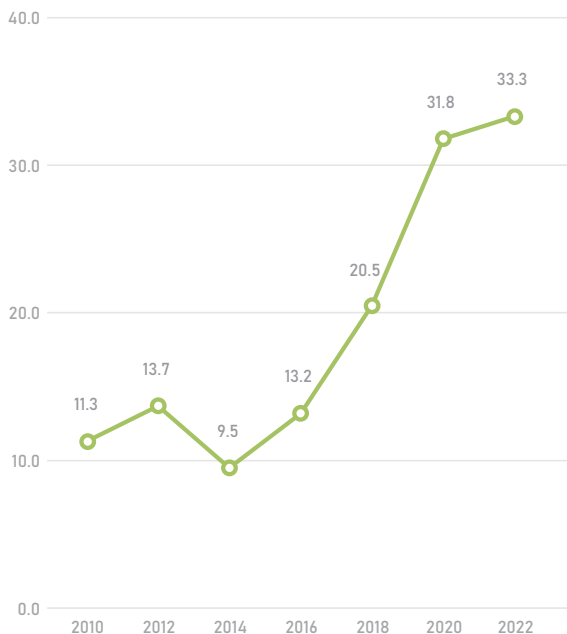
- 사회안전 인식도는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2022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33.3%로, 2020년 31.8%보다 1.5%p 증가하였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012년 13.7%에서 2014년 9.5%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20년(31.8%) 급격하게 다시 증가하였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2014년 4월)에 의한 영향이,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감염병 방역체계를 유지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안보(42.6%), 먹거리(41.4%), 식량안보(40.9%) 순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항목은 개인정보유출(53.2%), 신종질병(48.5%), 범죄(39.1%)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질병의 경우 2020년(52.9%)보다는 감소하였지만, 다른 항목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안전 인식도(2010~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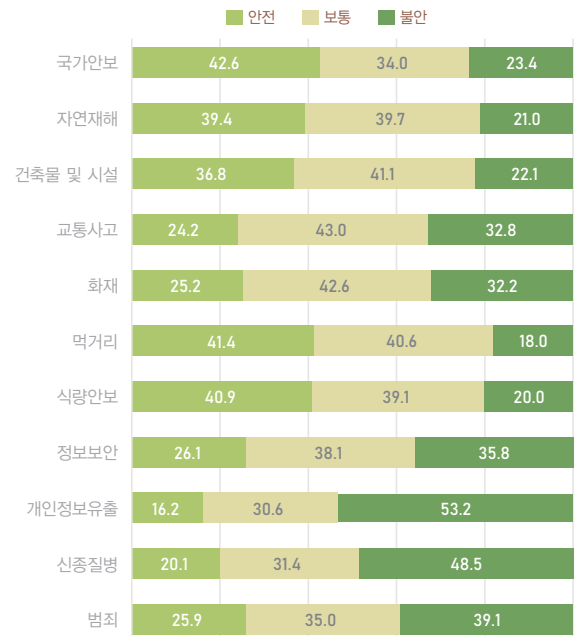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이상, 2012년부터는 13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세부항목별 안전과 불안에 대한 인식(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제 2장 취약요인



등록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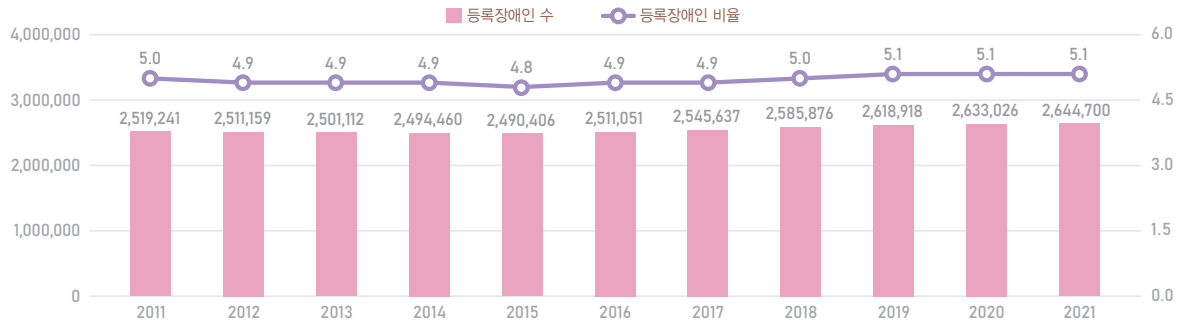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애인 등록 인구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심리·사회적 취약정도가 높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 2021년 등록장애인 수는 2,644,7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전년(2,633,026명)에 비해 11,674명, 0.4% 증가하였는데, 2011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부터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4%), 지적장애

(8.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57.8%로 여자(42.2%)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60~69세 (23.6%), 70~79세(21.9%), 80세이상(17.9%), 50~59세 (16.3%) 순으로 많으며,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 장애인의 51.3%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장애인구 중 노인 장애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 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우리사회가 심각한 고령화에 진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등록장애인 수와 등록장애인 비율(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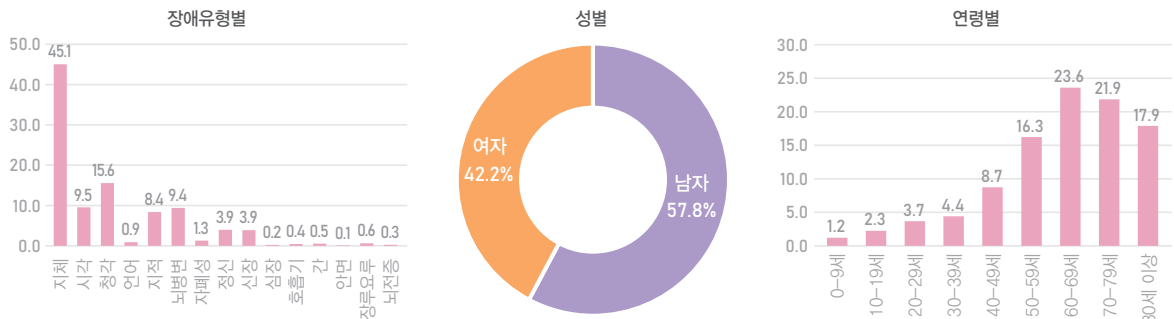
(단위: 명,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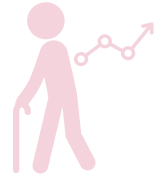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등록장애인 구성비(2021)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노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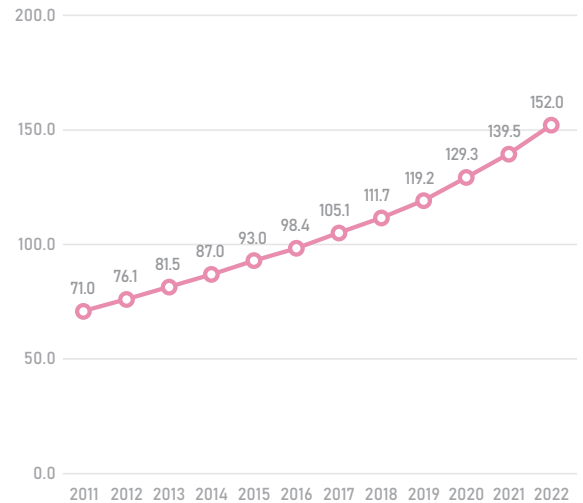


지표정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노인(65세 이상) 인구
측정방법 (노인(65세 이상) 인구 ÷ 유소년(0~14세) 인구) × 100

- 노인은 재난안전법(제3조)에서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과 함께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되어, 안전정책 서비스의 우선지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 당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서, 노령화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우리사회에 안전취약 계층인 노인인구가 많다는 의미이다.
- 2022년 노령화지수는 152.0으로 전년(139.5)보다 12.5 증가하여 2019년 이후 3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년 전인 2012년의 76.1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노인인구는 증가추세, 유소년인구는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2017년 전체인구대비 비중이 역전되었다. 노년부양비 역시 201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2년 24.6으로 전년(23.1)보다 6.5% 증가하였다.

노령화지수(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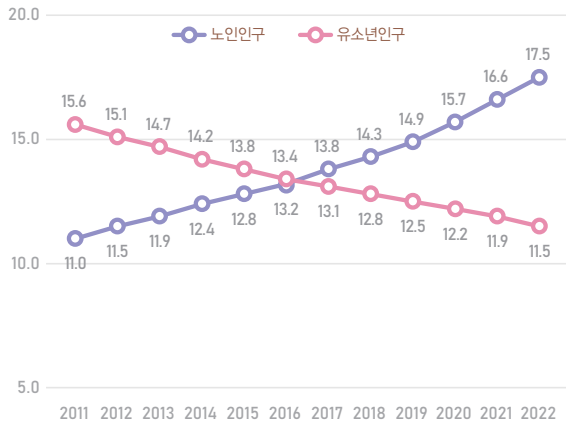
(단위: 명/유소년인구 100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2011~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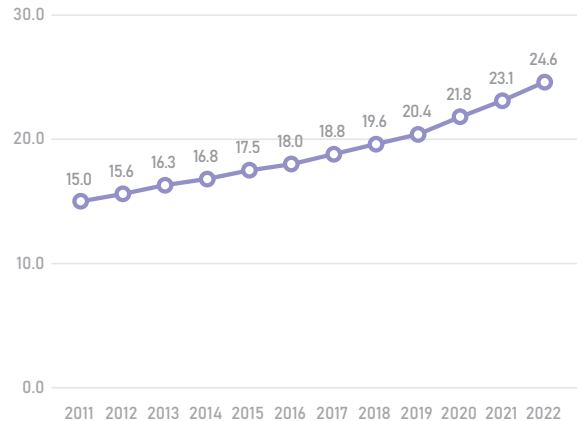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 유소년인구= 0~14세 인구

노년부양비(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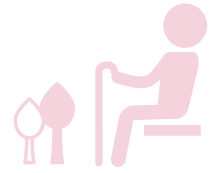
(단위: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노인부양비= 노인(65세이상)인구 ÷ 생산연령(15~64세)인구 × 100

독거노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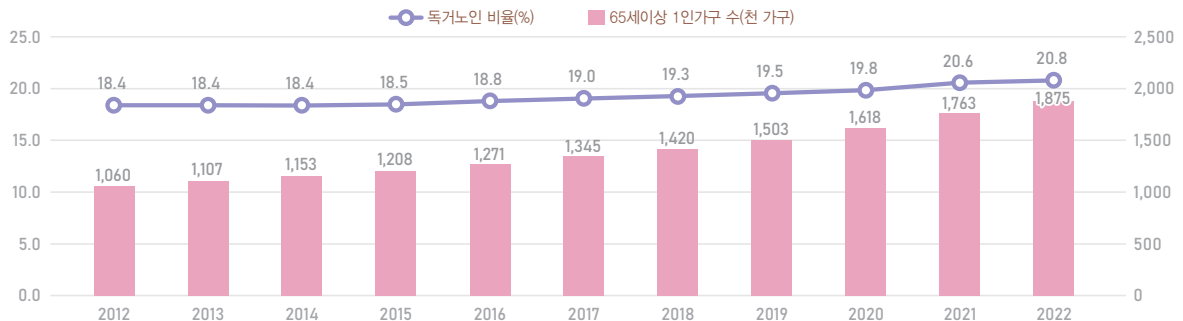
지표정의 65세 이상 추계인구 중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측정방법 (65세 이상 1인 가구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정책에 대한 많은 변화 요구와 함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인구 중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더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다.
- 65세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2022년 20.8%로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혼자 살고 있으며, 그 비율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구수로 보면 적지 않은 증가세다. 독거노인 가구수는 2022년 1,875천 가구로 10년 전인 2012년(1,060천 가구)대비 76.9% 증가한 수준이다.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부부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더 많은 만성적인 질환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이 보다 더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 비율(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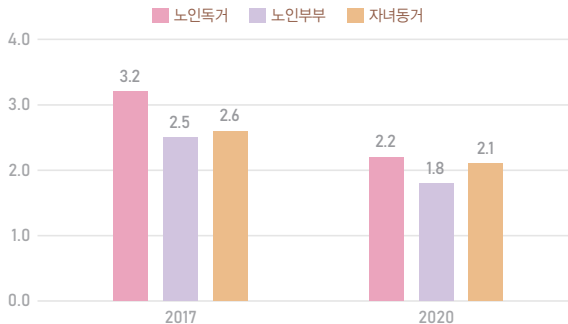
(단위: %, 천 가구)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노인가구 형태별 만성질환 개수(2017·2020)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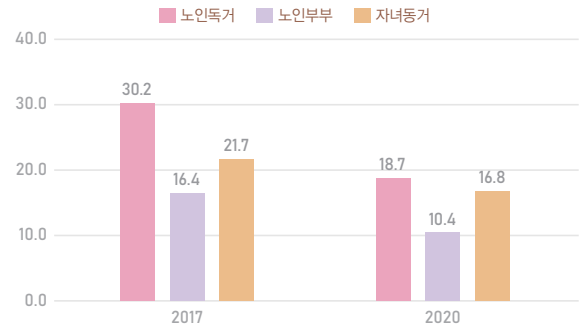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 만성질환 개수는 의사진단을 받은 질병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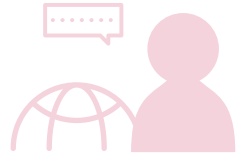
노인가구 형태별 우울증상 경험률(2017·2020)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지표정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 수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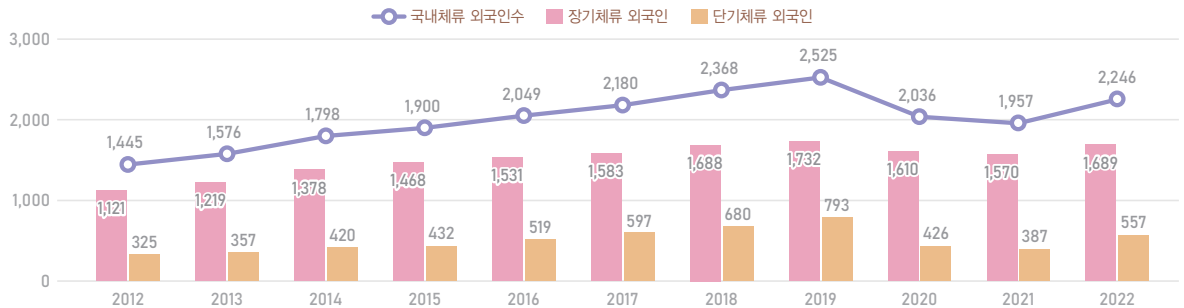
-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단기(90일 이내) 또는 장기체류(90일 초과) 중인 외국인 수의 합으로, 사회통합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 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246천명으로 전년(1,957천명)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이 전년대비 43.9%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코로나 19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2016년 이전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국가간 이동제한이 완화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7.8%(850천명)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10.5%(235천명), 태국 9.0%(202천명), 미국 7.0%(157천명), 우즈베키스탄 3.5%(79천명), 필리핀 2.5%(57천명), 일본 2.1%(47천명) 순이었다. 불법체류자는 2012년 178천명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411천명으로 나타나 10년동안 2배이상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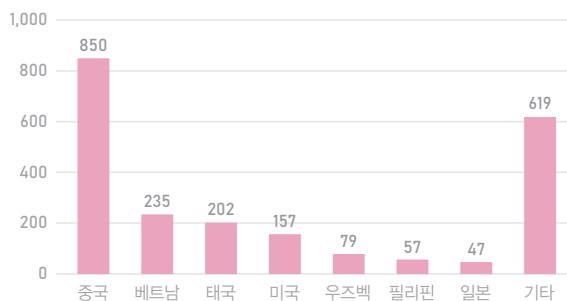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 국적별 체류외국인 수(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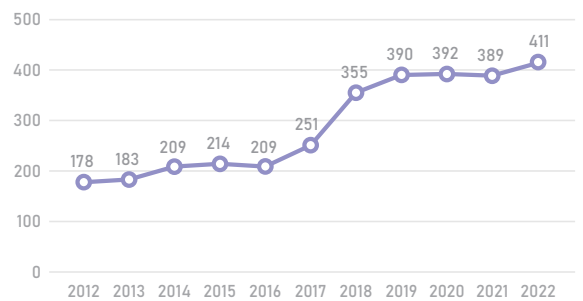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불법체류자 현황(2012~2022)

(단위: 천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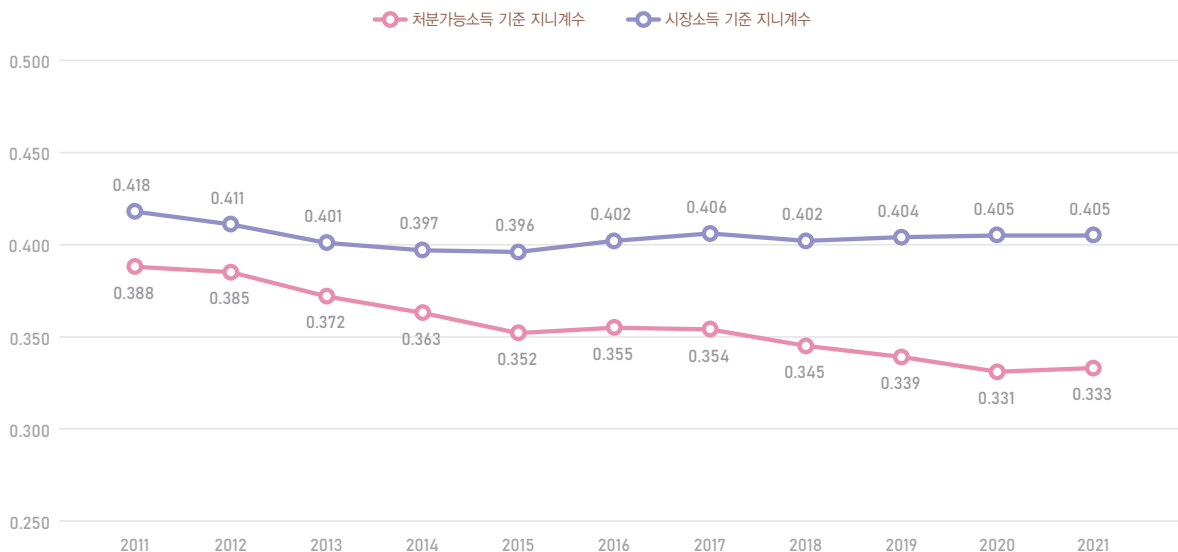
지표정의 0~1사이의 값을 가지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측정방법 X축에 인구를 소득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누적비율로 표시하고 Y축에 이들의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하여 이를 대응시킨 점들의 궤적(로렌츠곡선)과 대각선(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눔

-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로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불안 را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2021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0.331)에 비해 0.002 증가하였다. 세전소득인 시장소득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세금을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2011년과 2016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18과 0.402인데, 같은 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88과 0.355로 낮아진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간의 차이는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 즉,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2020년 처분가능소득 기준)를 비교하면, 한국(0.331)은 미국(0.375), 영국(0.355)보다는 낮고, 독일(0.296), 프랑스(0.292)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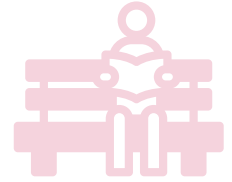
지니계수(2011~2021)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1: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주2: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만 15세 이상 실업자 수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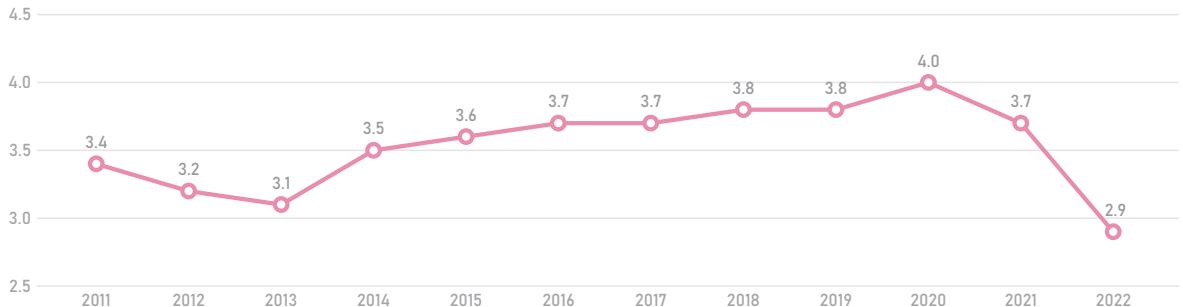
-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2022년 실업률은 2.9%로 전년(3.7%)보다 0.8%p 감소하였으며, 2020년 4.0% 이후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로 0.9%p 감소하였고, 여자는 3.1%로 0.7%p 감소하였다.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6.4%로 여전히 평균 실업률의 두배이상 높은 수준이나 마찬가지로 2020년(9.0%)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실업률은 2013년(3.1%)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4.0%)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본격화되자, 아동의 돌봄부재, 서비스업 불황 등 여러 이유로 여자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아졌으며 이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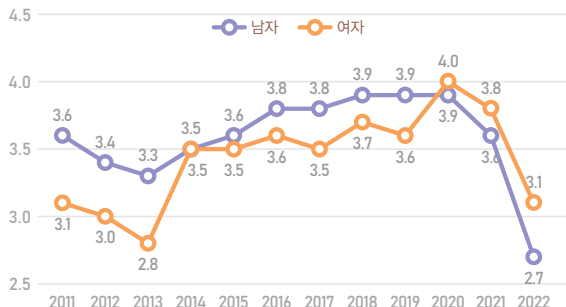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실업률(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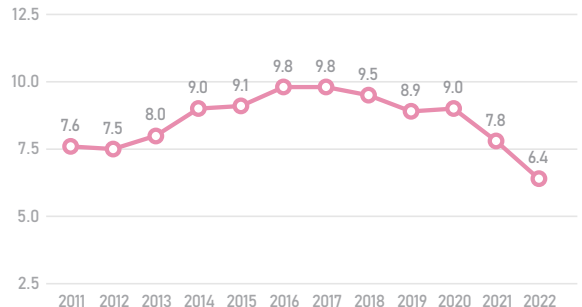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실업률(2011~2022)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범죄피해율



지표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 발생 건수
측정방법 (범죄피해건수(추정) ÷ 만 14세 이상 인구수)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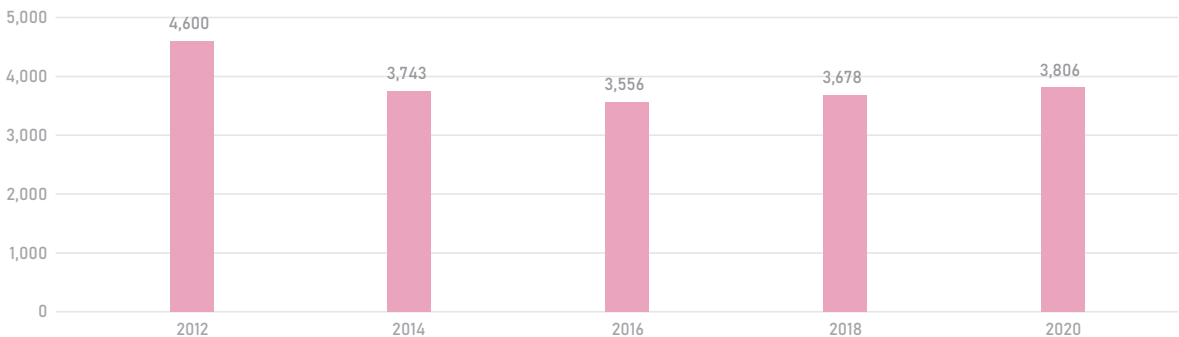
● 범죄피해율은 개인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범죄피해 경험을 응답한 결과로,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어도 사법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어도 기록으로 남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숨은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경찰청과 법무부의 공식범죄통계

상의 범죄발생률과는 차이가 있다.

● 2020년 범죄피해율은 인구10만명당 3,806건으로 2018년 3,678건대비 3.5%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 피해율은 878건으로 55.1% 증가한 반면, 재산범죄 피해율은 2,928건으로 5.9% 감소하였다.

범죄피해율(2012~2020)

(단위: 건/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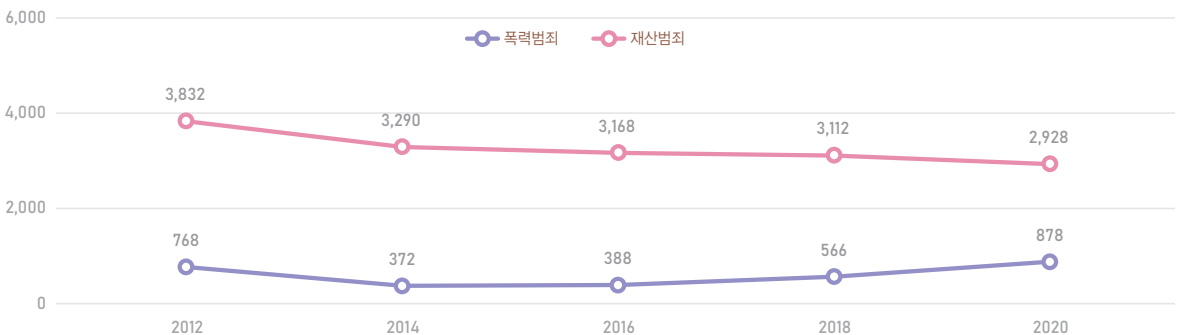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된 값임

유형별 범죄피해율(2012~2020)

(단위: 건/10만명)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전체 피해율은 조사대상자수 기준이고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피해율은 응답자수 기준이므로 유형별 피해율의 합이 전체 피해율의 합과 다를 수 있음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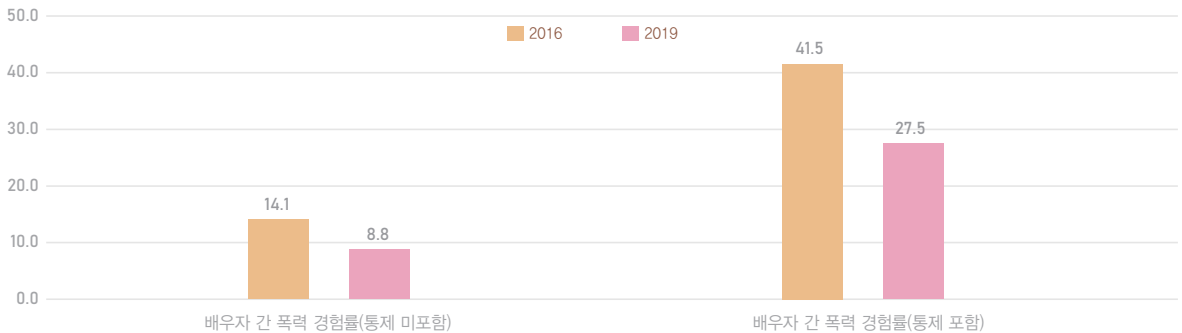
지표정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측정방법 만 19세이상 응답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 2019년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률은 8.8%로 2016년(14.1%) 대비 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통제까지 포함할 경우 폭력피해 경험률은 27.5%로 높아지며, 이는 3년 전 41.5%에 비해 14.0%p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2019년 기준, 통제(25.0%), 정서적 폭력(7.2%),

성적 폭력(2.6%), 신체적 폭력(1.5%), 경제적 폭력(1.0%)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피해 경험률이 높지만, 특히 신체적 폭력은 2배 이상, 성적 폭력은 7배 이상 여자가 남자보다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2016·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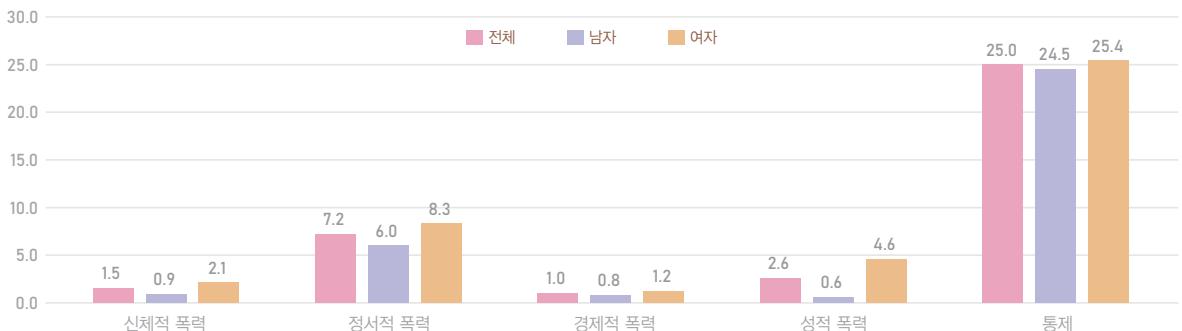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주: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통제 미포함):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통제 포함):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

성별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2019)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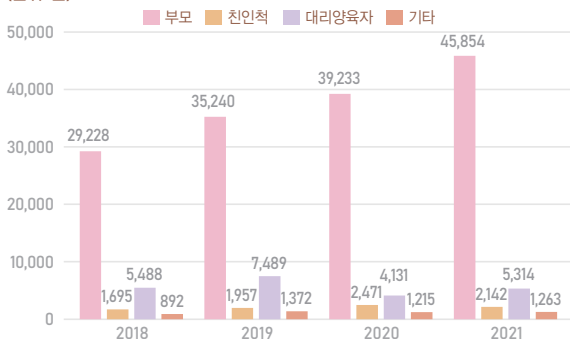
지표정의 해당연령 인구 대비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인구 수

측정방법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 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의 18세 미만 아동인구 대비 건수로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아동 10만명당 502.2건으로 2020년(401.6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늘어난 아동학대가 뒤늦게 드러난 영향으로 보인다. 아동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다. 최근에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대부분이며 방임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건수(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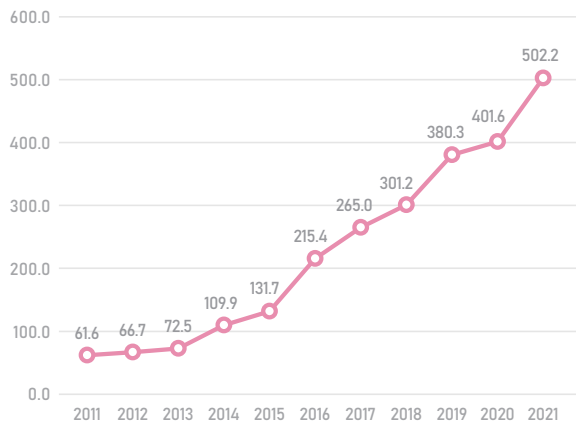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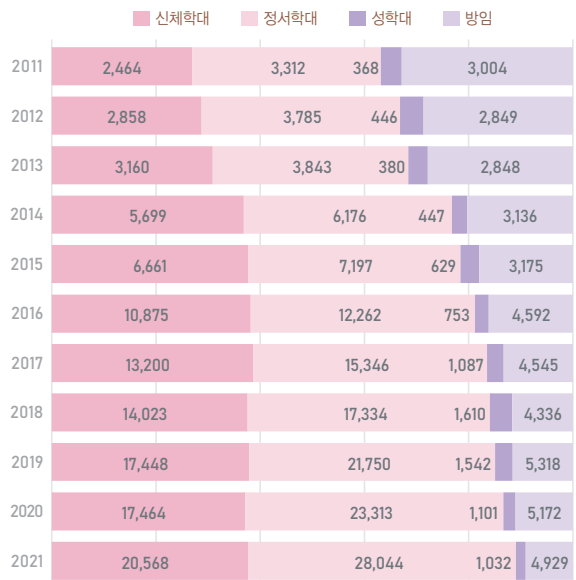
(단위: 건/10만명)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건수(2011~2021)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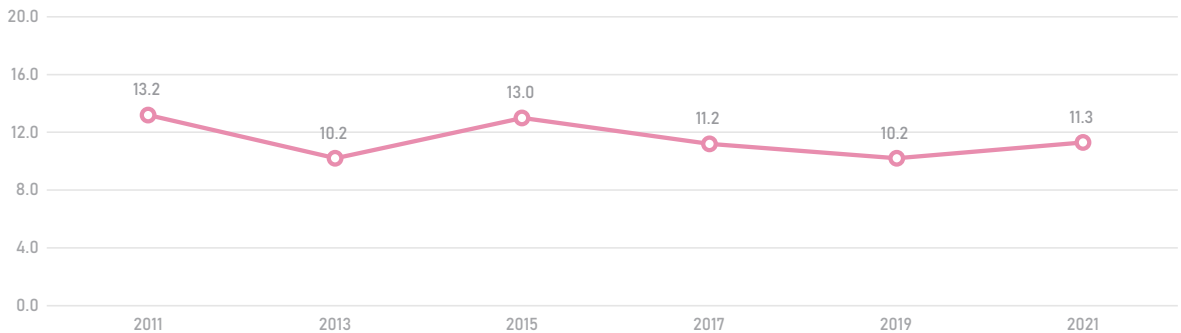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측정방법 19세 이상 응답자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우울감 경험률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정신적 안전상태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심각하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질환으로서의 우울증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 2021년 우울감 경험률은 11.3%로 2019년(10.2%) 대비

1.1%p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8.5%)보다 여자(14.1%)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며, 특히 2019년 대비 증가 폭도 여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와 70세 이상의 우울감 경험률이 다른 연령그룹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30~39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4%에서 12.8%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울감 경험률(201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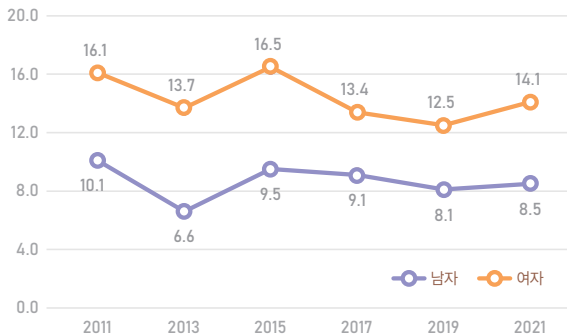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함

성별 우울감 경험률(201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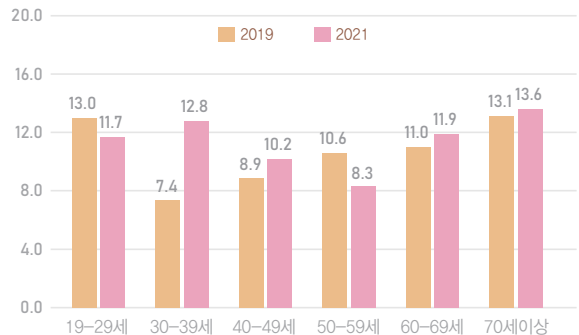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함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2019·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사회적 고립도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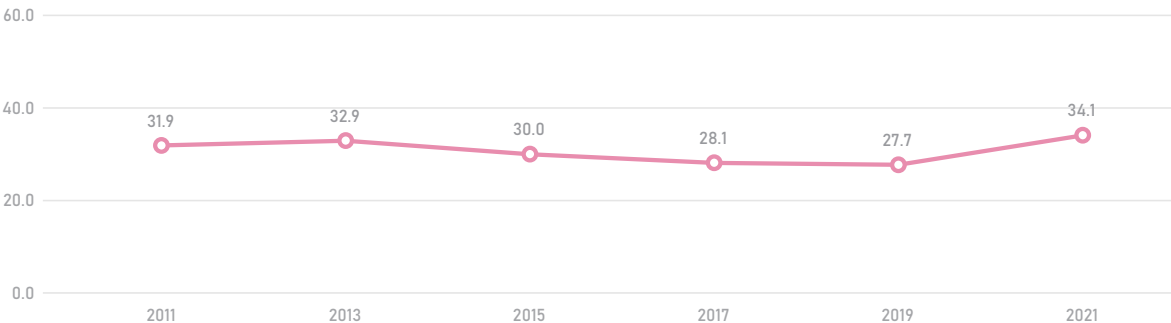
측정방법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 사회적 고립도는 위기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또는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019년 27.7%보다 6.4%p 증가하였다.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제한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2021년 기준 남자(36.6%)가 여자(31.6%)보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연령이 높아 질수록 사회적 고립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도(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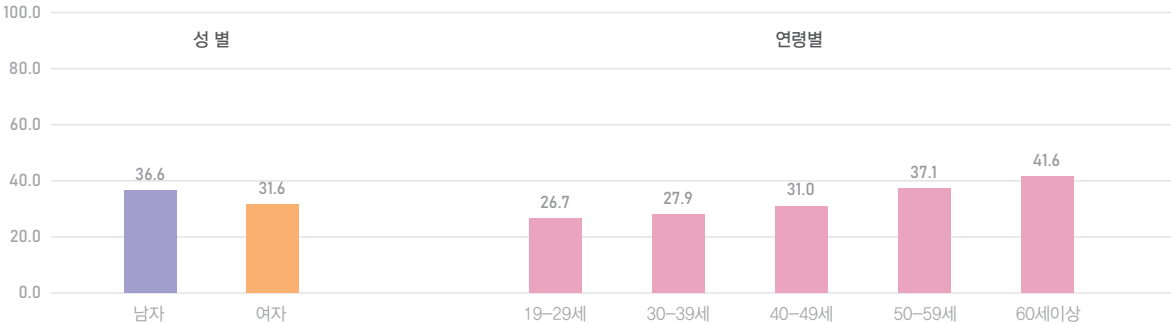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성별·연령별 사회적 고립도(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지표정의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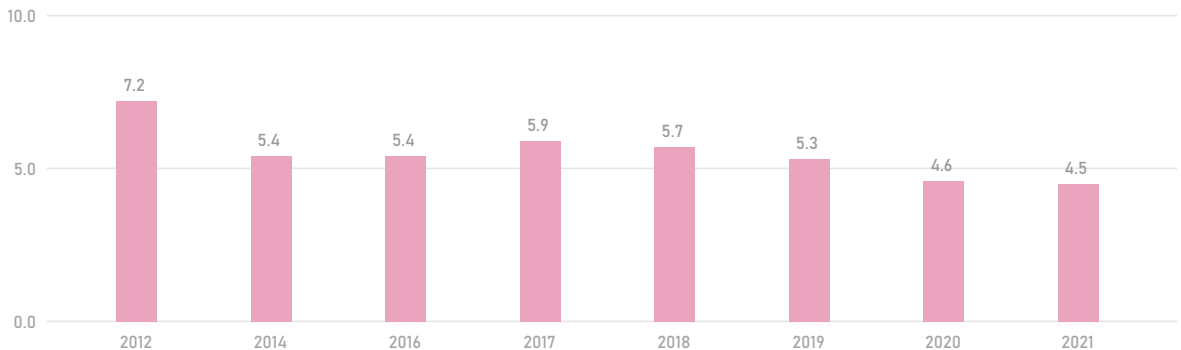
측정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 주거는 개인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1년 4.5%, 2020년(4.6%)대비 0.1%p 감소하였다. 2014년이후 5%대를

유지하다 최근 4%대에 진입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5.5%)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역시가 3.1%로 가장 낮다. 도지역은 2012년 9.5%에서 3.9%로 감소하여 도지역의 주거시설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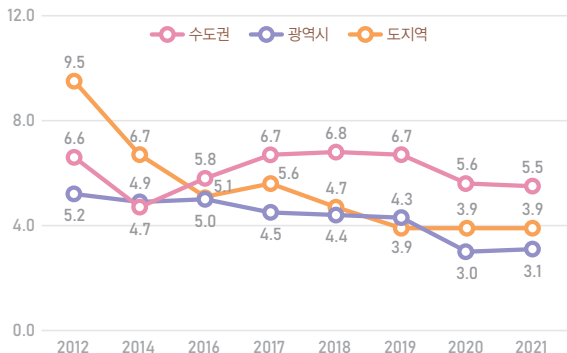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2012~2021)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11. 5.27.)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 및 면적기준

1인 가구(방 1개, 14㎡), 2인 가구(방 1개, 26㎡),
3인 가구(방 2개, 36㎡), 4인 가구(방 3개, 43㎡),
5인 가구(방 3개, 46㎡), 6인 가구(방 4개, 55㎡)

음주운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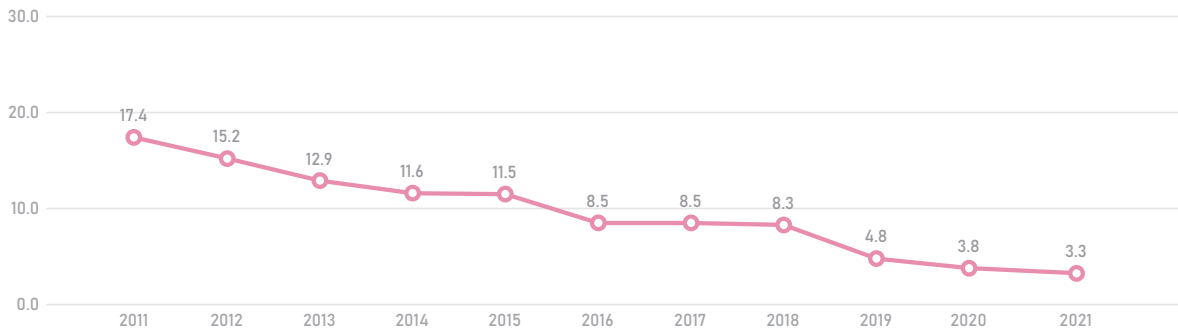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2021년 음주운전 경험률은 3.3%로 2020년(3.8%)보다 0.5%p 감소하였다. 2011년 17.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식개선, 강화된 관련법 개정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2012년 815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음주운전 경험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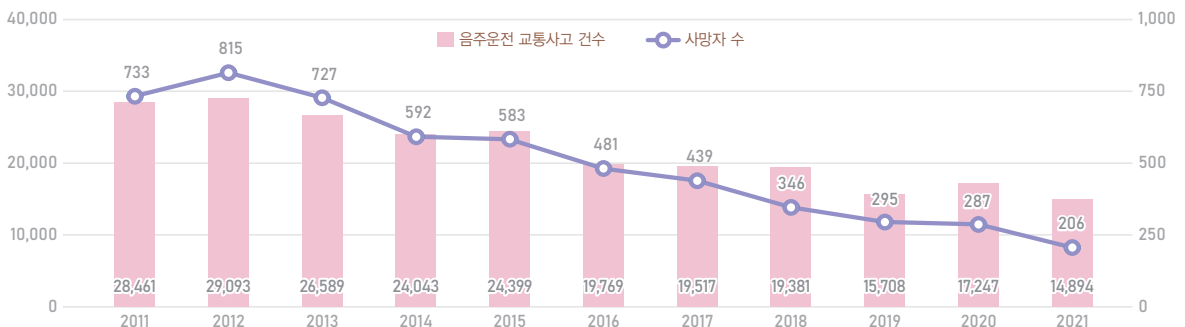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주운전 교통사고(2011~2021)

(단위: 건, 명)



출처: 경찰청 누리집, 정보공개>공공데이터>경찰통계자료>교통>음주운전교통사고현황

월간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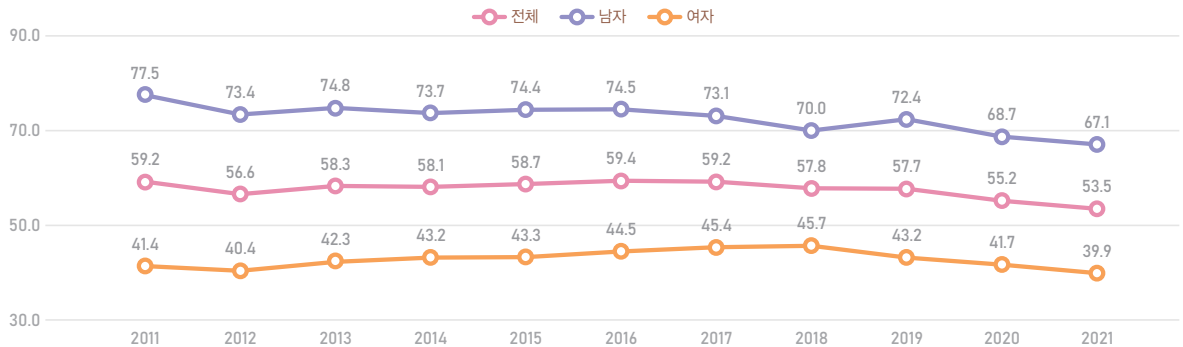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있지만, 과도할 경우 건강상의 영향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등의 안전사고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지표이다.
- 최근 1년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즉 월간음주율은 2021년 53.5%로 2020년(55.2%)보다 1.7%p 감소하였다.

남자는 68.7%에서 67.1%로 1.6%p 감소하였고, 여자는 41.7%에서 39.9%로 1.8%p 감소하여 여자의 감소폭이 더 컸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간음주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2018년부터는 30~39세가 19~29세를 앞지르면서 2021년 30~39세의 월간음주율은 65.6%로 전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월간음주율(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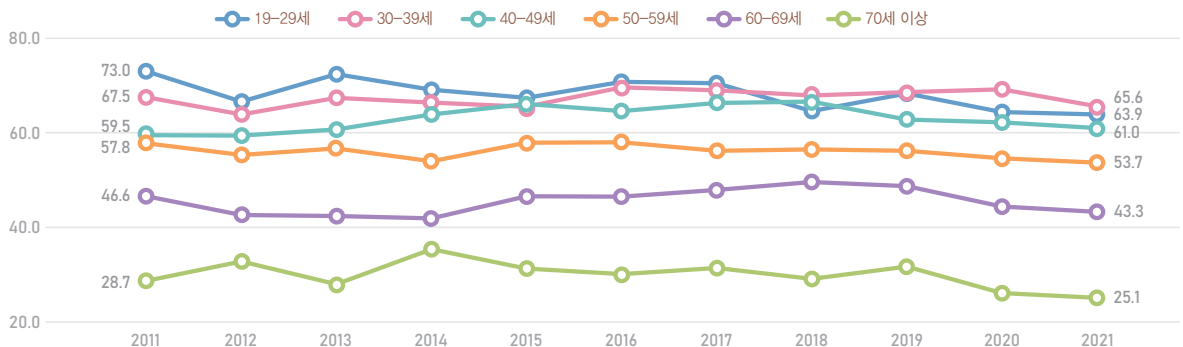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별 월간음주율(2011~2021)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



지표정의 연간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접수한 진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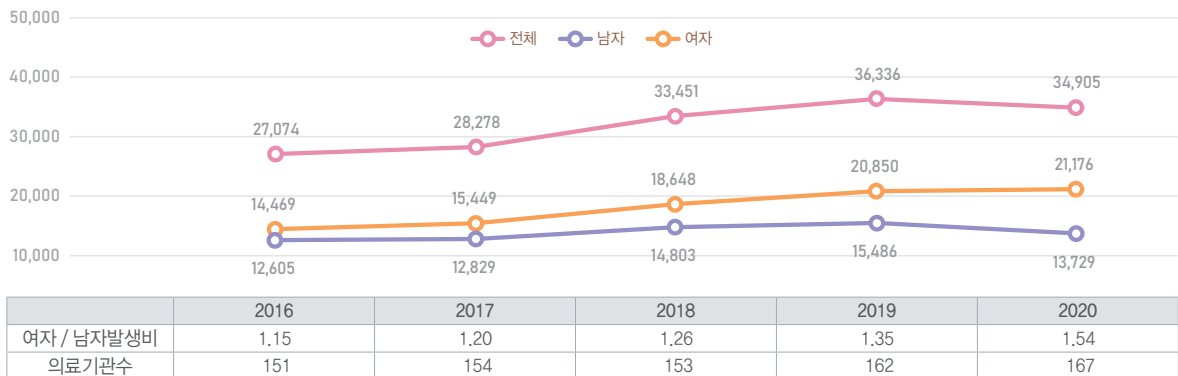
측정방법 전국의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자해 및 자살 시도 진료 건수

●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는 최근 4년간 지속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34,905건으로 전년(36,336건) 대비 1,431건 (3.9%) 감소하였다. 남자는 전년대비 1,757명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전년대비 326명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여자의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가 매년 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남녀간 발생 비는 1.54로 2016년 1.15배에서 2020년 1.54배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2016년은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이후부터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2020년은 전년대비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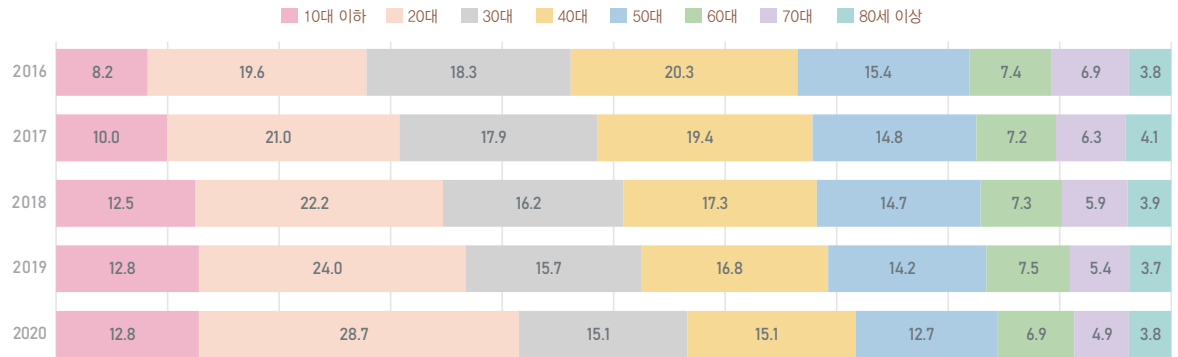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2022」

연령별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 점유율(2016~2020)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2022」

제 3장 대응역량



경찰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경찰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경찰 공무원 수
(단, 경찰 공무원에는 별정직·일반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전경 및 의경, 해양경찰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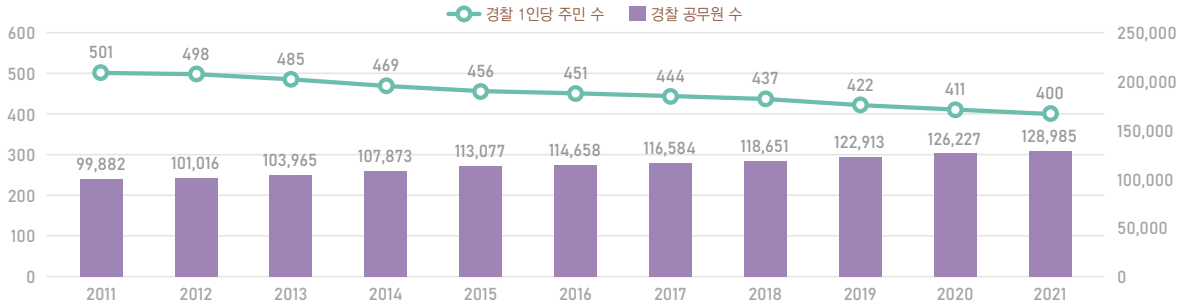
-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인력으로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치안환경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경찰 1인당 주민 수가 적을수록 경찰이 치안 유지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찰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2021년 경찰인력은 129천 명으로 전년보다 약 3천명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주민수는 전년(411명)보다 11명 감소한 4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10년 전 2011년

501명에 비해서는 100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인력은 약 3만 명 가량 증원되었다.

- 관할 시도청 별로는 서울(318명), 전남(320명), 제주(328명) 순으로 담당 주민수가 적으며, 경기남부(557명), 경기북부(532명), 세종(479명) 순으로 담당 주민수가 많다. 전년과 비교하여 경찰 1인당 주민 수가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8.9%) 울산(-5.2%), 제주(-4.4%)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1인당 주민수(2011~202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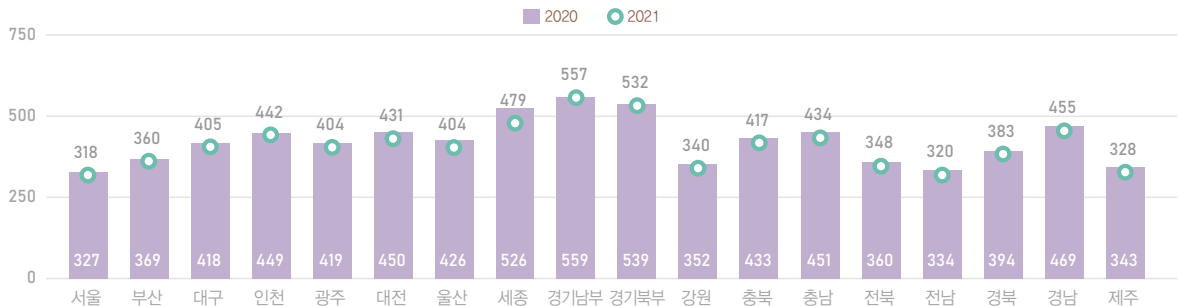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별정직·일반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전경 및 의경, 해양경찰은 경찰 수에서 제외

관할 지역별 경찰 1인당 주민 수(2020·2021)

(단위: 명)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별정직·일반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전경 및 의경, 해양경찰은 경찰 수에서 제외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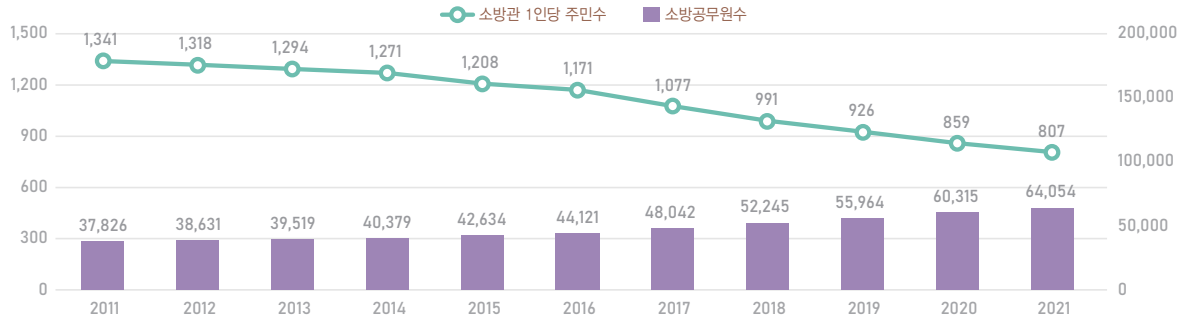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소방 공무원 수

-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접점하는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적을수록 국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방공무원 수는 2021년 64,054명으로 전년(60,315명)보다 6.2% 증가하였다.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역시 2020년 859명에서 2021년 807명으로 낮아져 소방력 확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관할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도 지역보다 매우 높지만, 관할 지역의 지리적 특징 또는 소방서비스 수요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1인당 주민수(354명)는 서울(1,289명)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산불재난, 대설피해 등 지역 특성 재난 발생과 이에 따른 원거리 출동 등에 많은 소방력이 요구된다.

소방관 1인당 주민 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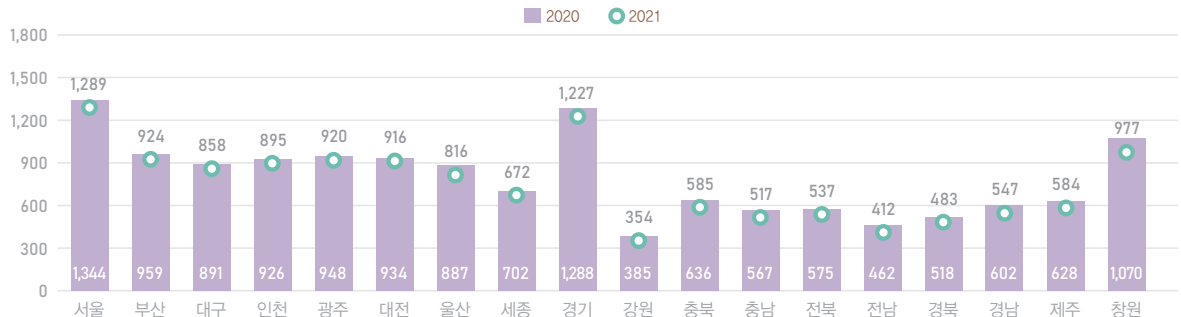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관할 지역별 소방관 1인당 주민 수(2020·2021)

(단위: 명)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119 구조 및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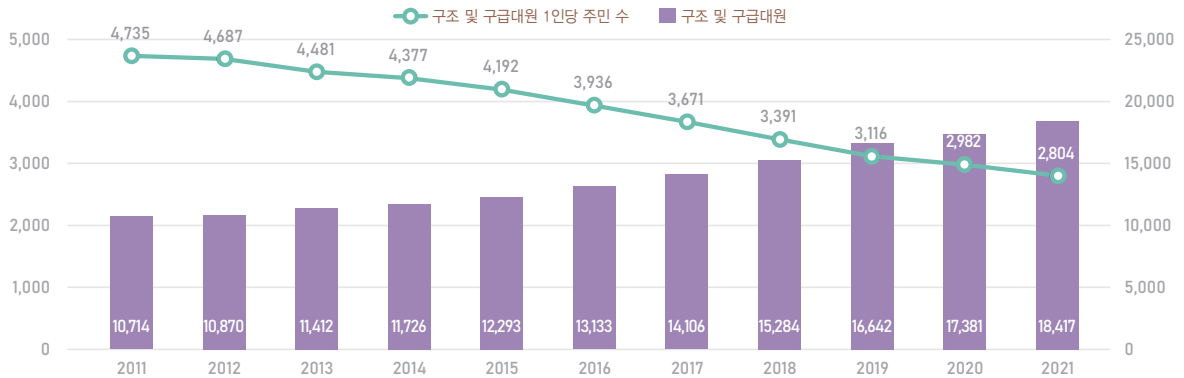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119 구조 및 구급대원 수

- 2021년 119 구조 및 구급대원 수는 18,417명으로 전년 (17,381명)보다 1,036명 증원되었다. 따라서, 대원 1인당 주민수는 2020년 2,982명에서 2021년 2,804명으로 178명, 6.0% 감소하여 구조 및 구급 대응력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2021년 구조 및 구급 출동건수는 총 4,212천 건으로, 전년 (3,604천 건)보다 16.9% 증가하였다. 구급은 3,149천 건, 구조는 1,063천 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3.9%, 26.8% 증가하였다.

119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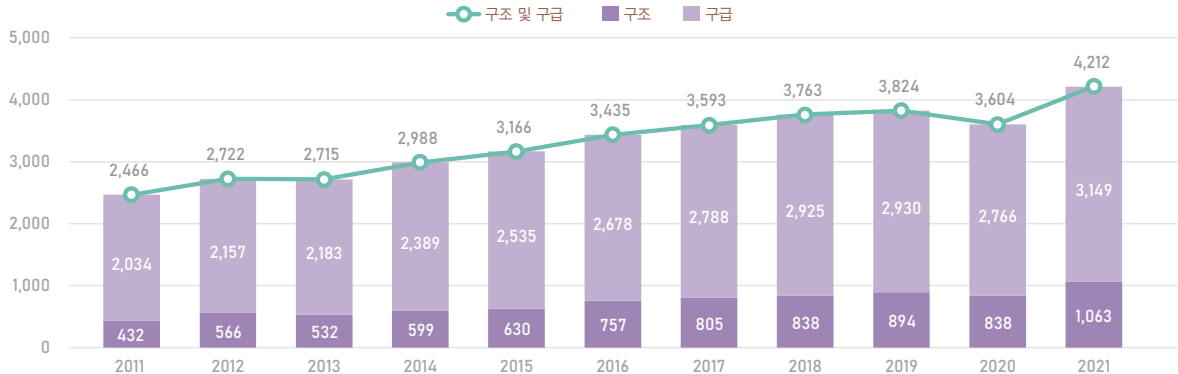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19 구조 및 구급 출동건수(2011~2021)

(단위: 천 건)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총 병원 병상 수



지표정의 인구 천명 당 병원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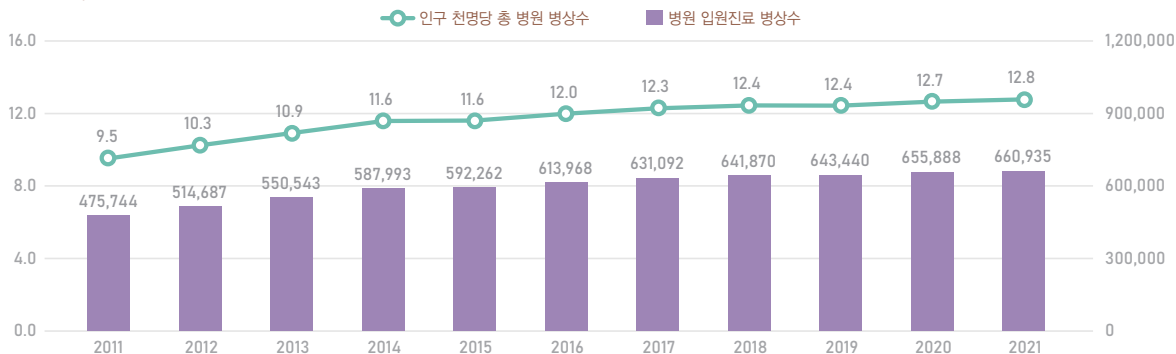
측정방법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 ÷ 장래추계인구) × 1,000

- 총 병원 병상 수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의 척도로서, 수치가 클수록 인구대비 병상 수가 많은 것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전체 병원급 입원진료 병상 수는 2021년 660,935개로 전년(655,888개)보다 0.8% 증가하였다.

인구 천명 당 총 병원 병상 수는 12.8개로 전년(12.7개)보다 0.1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4.3개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1년 병원 이외에 의원, 조산원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722,813개이며,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14.0개로 나타났다.

총 병원 병상 수(2011~2021)

(단위: 병상, 병상/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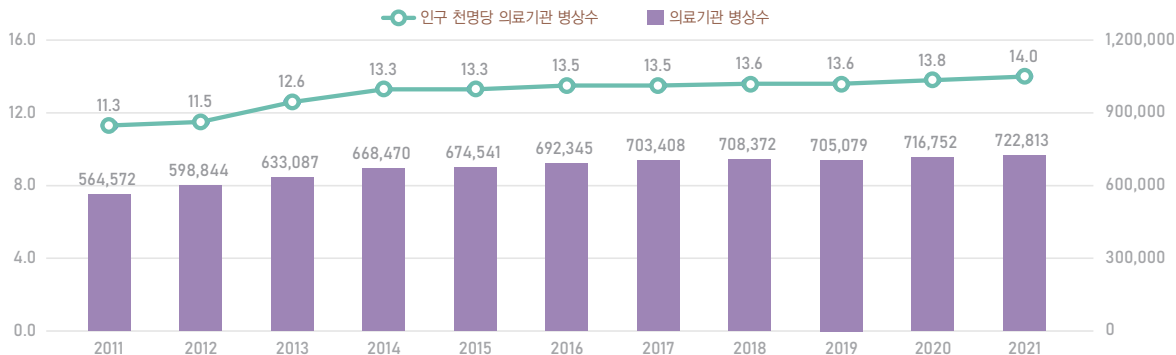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을 대상으로 함

의료기관 병상 수(2011~2021)

(단위: 병상, 병상/천명)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포함

안전띠 착용률



지표정의 운행 중 차량 내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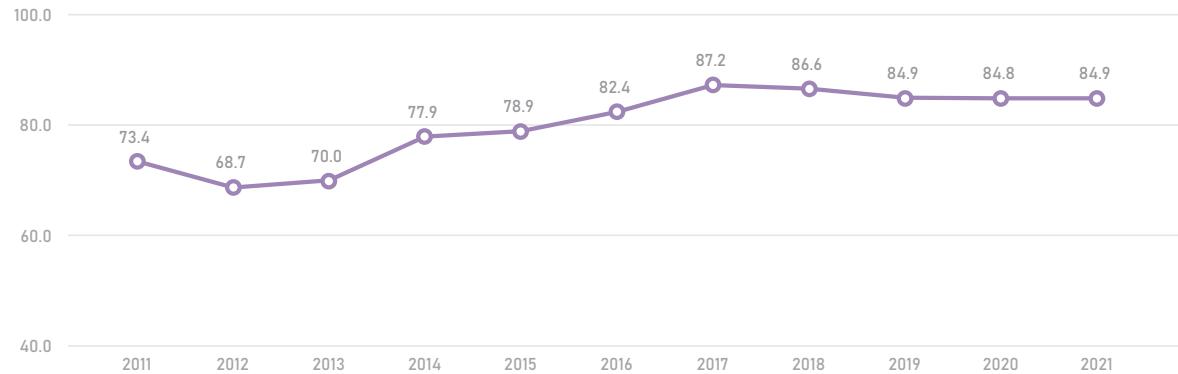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자동차의 승차자 수 대비 안전벨트 착용 승차자 비율

● 자동차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도 있듯이 안전띠 착용은 자동차 승차자 안전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안전띠 착용률은 2012년 68.7%에서 지속 상승하여 2017년 87.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한 안전띠 착용률은 2021년 현재까지 약 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8년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착용률(32.4%)은 전년(37.2%) 대비 4.8%p 감소하였으며, 특히 앞좌석 착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안전띠 착용에 대한 계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띠 착용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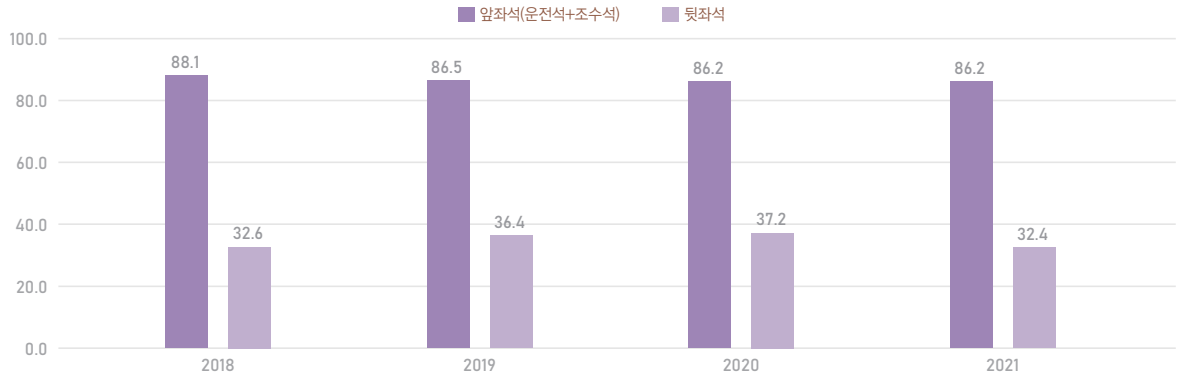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좌석 위치별 안전띠 착용률(2018~2021)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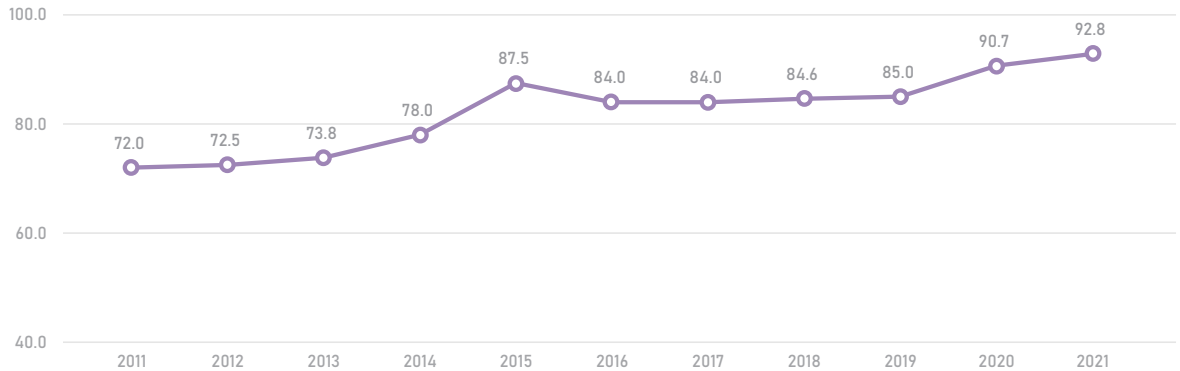
지표정의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규정된 안전모 착용률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이륜차의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비율

- 2021년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2.8%로 전년(90.7%) 대비 2.1%p 상승하였다. 이는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이 상당 수준으로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치구나 시 지역의 경우 모두 90% 이상의 안전모 착용률을 보이는 반면, 군 지역은 80%에 못 미치는 착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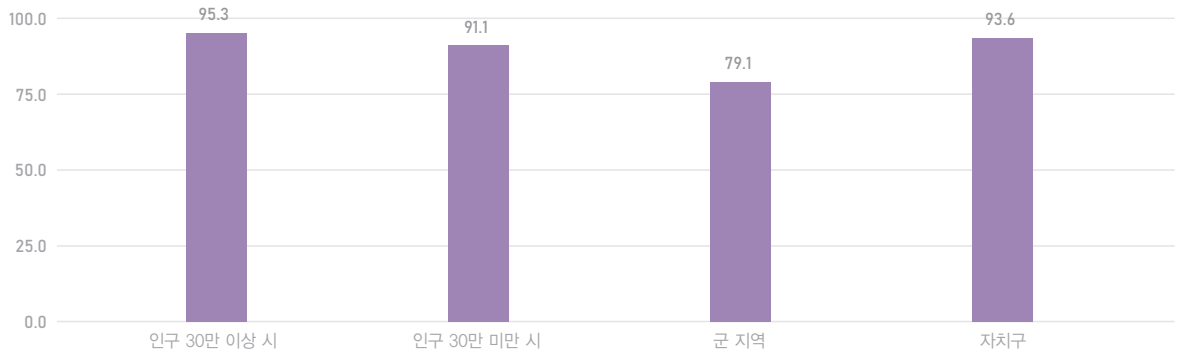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도시 규모별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21)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지표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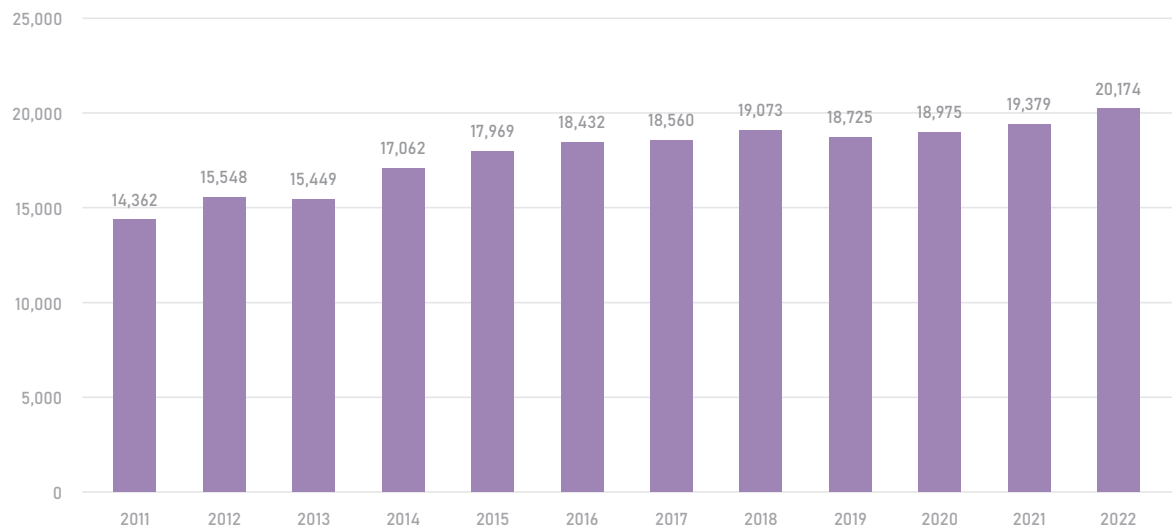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

- 2022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20,174천명으로 전년 (19,379천명) 대비 4.1% 증가하였고, 2013년 15,449천명에 비교하면 30.6%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노력의 결과로서, 그 중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적용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6개 직종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재보험 적용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2011~2022)

(단위: 천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지표정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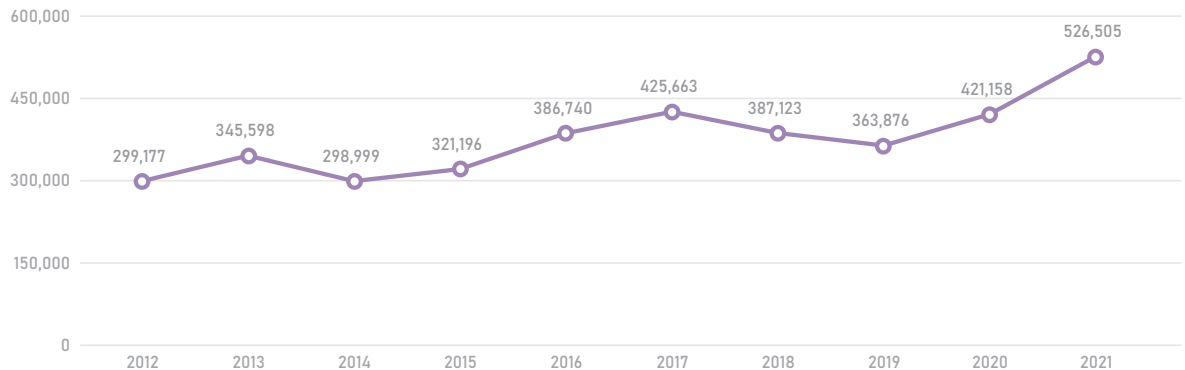
측정방법 각년도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소상공인업장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 2021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총 526,505건으로 전년 (421,158건) 대비 20.0% 증가하였고,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와 태풍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2020년은 자연재난 피해액이 1조 3,182억원으로 최근 10년 간 가장 큰 피해

액을 기록함에 따라 2021년 풍수해 보험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을 장소별로 보면 주택이 487천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상공인업장이 28,655건(5.4%), 비닐하우스(온실)가 10,542건 (2.0%)이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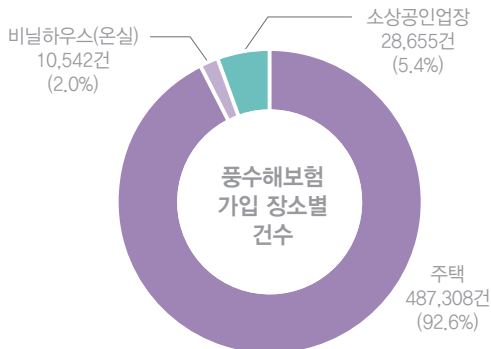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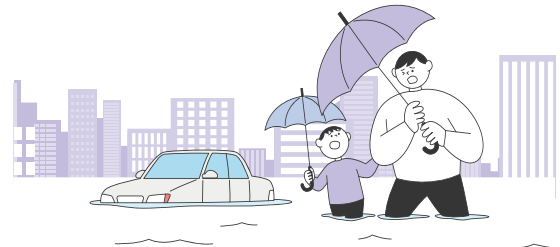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풍수해보험 가입 장소별 건수(2021)

(단위: 건)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아동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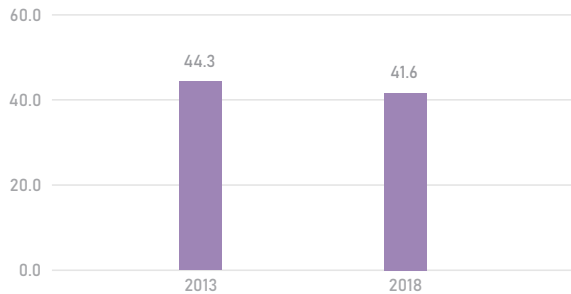
측정방법 만9세~17세 아동 중 최근 1년 동안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 아동은 안전사고 노출시 그 피해정도가 성인에 비해 더욱 크며 영구장애로 이어질 확률 또한 크다. 아동기는 모든 생활습관의 기초를 완성하는 시기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최적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8년 아동의 안전교육 경험률은 41.6%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교육 경험률이 더 낮았다. 주무부처인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육 및 교육기관은 수년간 아동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해당통계의 작성주기가 5년이므로 정책효과가 반영된 통계는 다음 연도에 확인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실시한 학교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2022년 각 학교에서는 연간 평균 약 4회의 재난안전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안전교육 및 학생안전의 만족도 역시 지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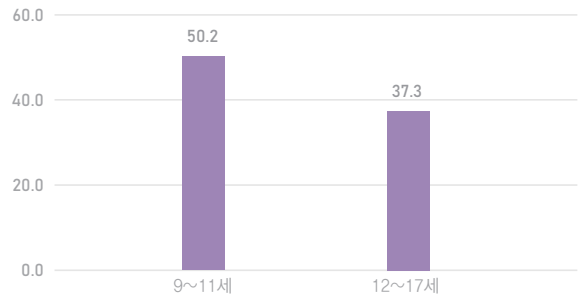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 연령별 안전교육 경험률(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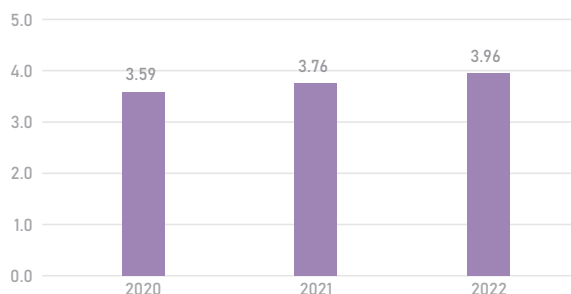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학교 재난대비 훈련 실시 횟수(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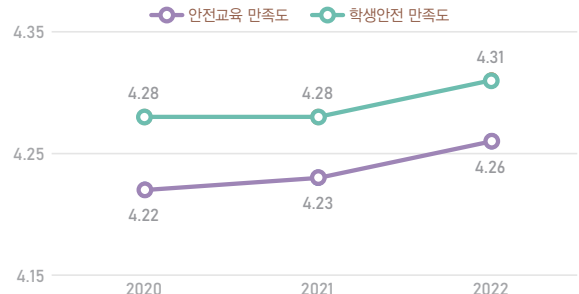
(단위: 건/년)



출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학생안전 만족도(2020~2022)

(단위: %)



출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실태조사」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지표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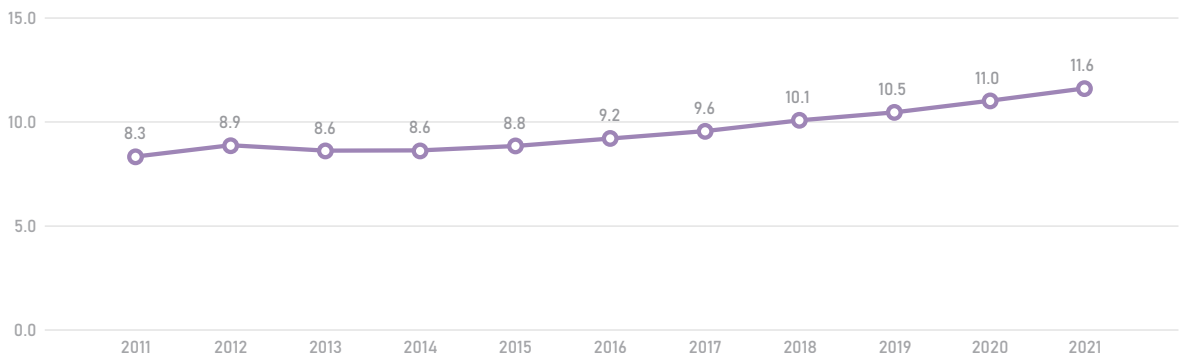
측정방법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인구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이며,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도시공원과 공공녹지의 조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재해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1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1.6㎡로 2020년 11.0㎡에 비해 0.6㎡ 증가하였다.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015년까지는 8㎡대를 보이다 이후 2016년부터 9㎡대에 진입하여 지속 증가추세이다. 도시공원의 면적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녹지면적은 2011년 182㎢에서 2017년 237㎢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1년 203㎢로 나타났다.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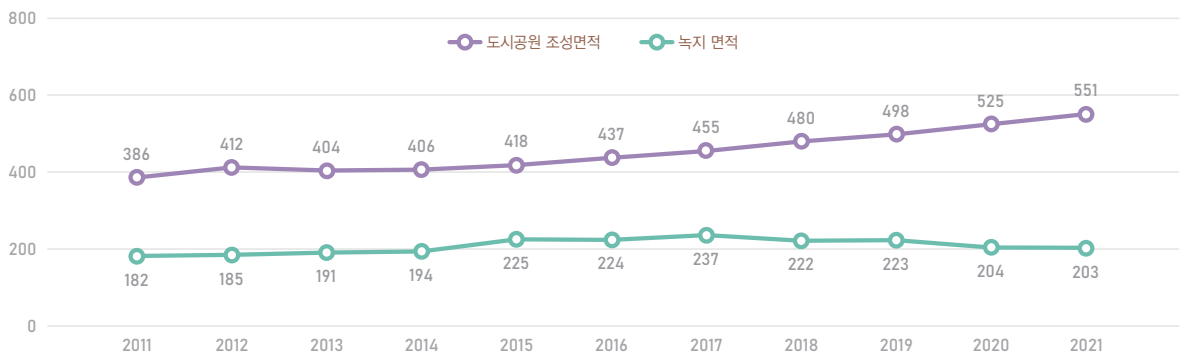
(단위: ㎡/인)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도시공원 조성면적과 녹지면적(2011~2021)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주: 조성면적 = 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제 4장

피해(영향)요인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손상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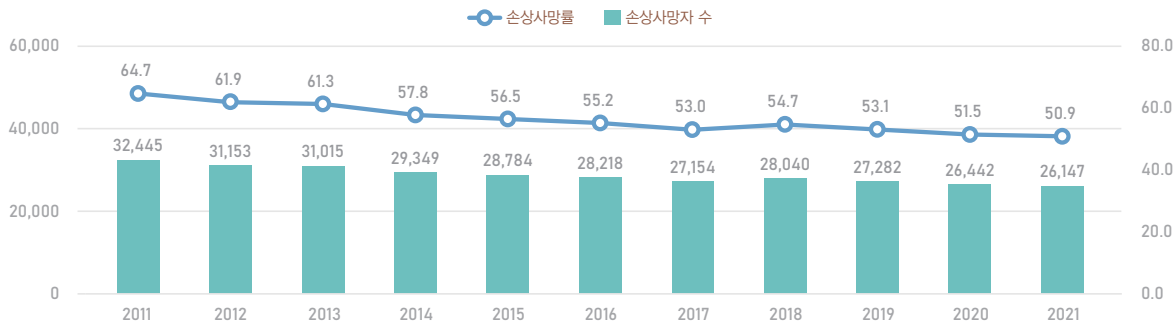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사망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사망자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1년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질병이외의 원인인 경우, 즉, 사고사 등에 의한 손상사망자 수는 26,147명으로, 2020년 손상사망자(26,442명)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전체 사망자(317,680명)의 8.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도 비중 8.7%보다도 0.4%p 감소하였다.
- 인구 10만명당 손상 사망자 수인 손상사망률은 2021년 50.9명으로 2020년 51.5명보다 0.6명(1.1%) 감소하였다.
- 2021년 손상사망률(50.9명) 대비 13.8명(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사고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021년 남자 10만명당 손상사망률은 69.5명으로 전년(70.4명)보다 0.9명 감소하였다. 여자는 32.5명으로 전년(32.7명)보다 0.2명 감소하였다. 남자의 손상사망률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사 등 질병이외의 사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사 등에 의한 손상사망률과 손상사망자(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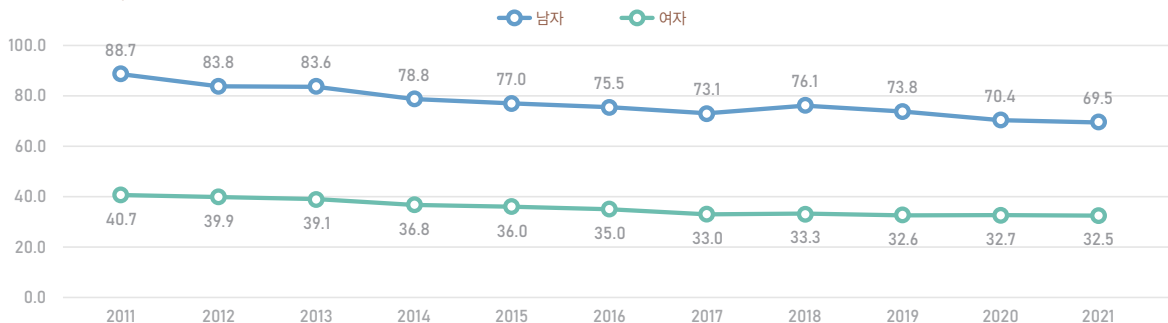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별 손상사망률(2011~2021)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운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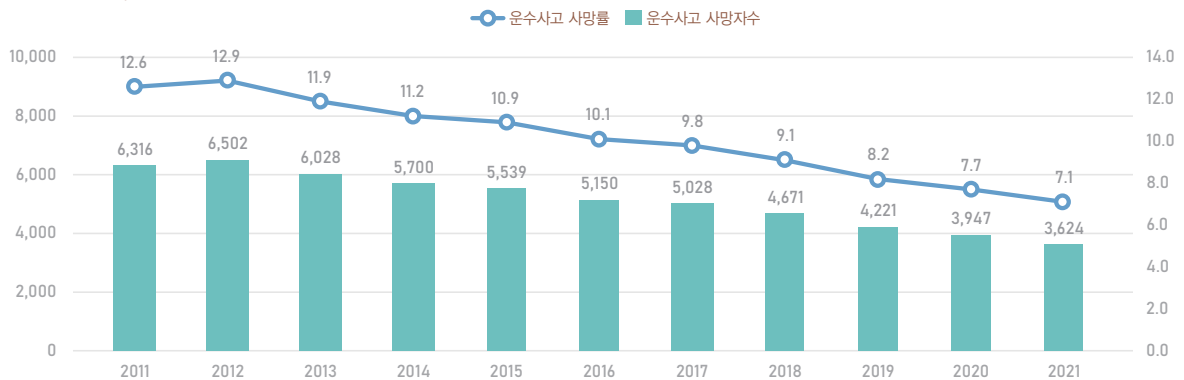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년 (7.7명)보다 0.6명, 7.8% 감소하였다. 전체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전년(3,947명)보다 8.2%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운수사고 사망자는 육상사고(3,537명), 수상사고(79명), 항공 및 기타사고(8명)순으로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였다.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차, 자전거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운수사고 사망률과 사망자 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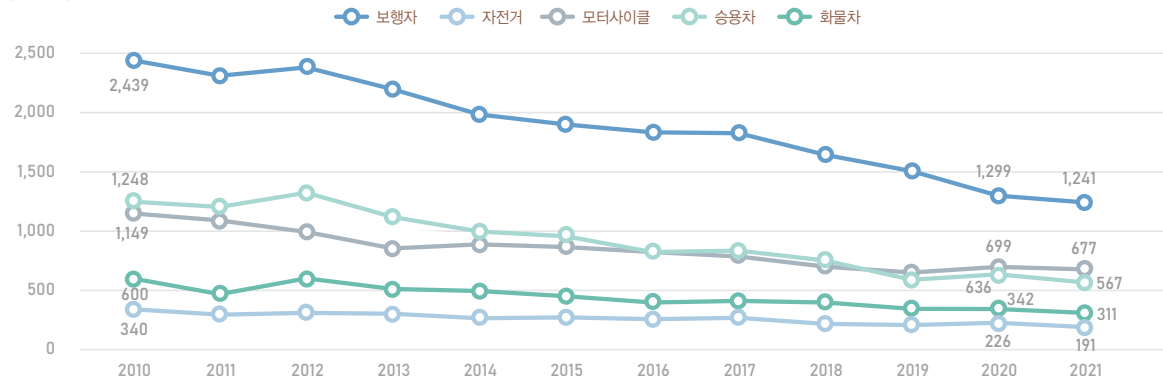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운송수단별 운수사고 사망자(2010~2021)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낙상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낙상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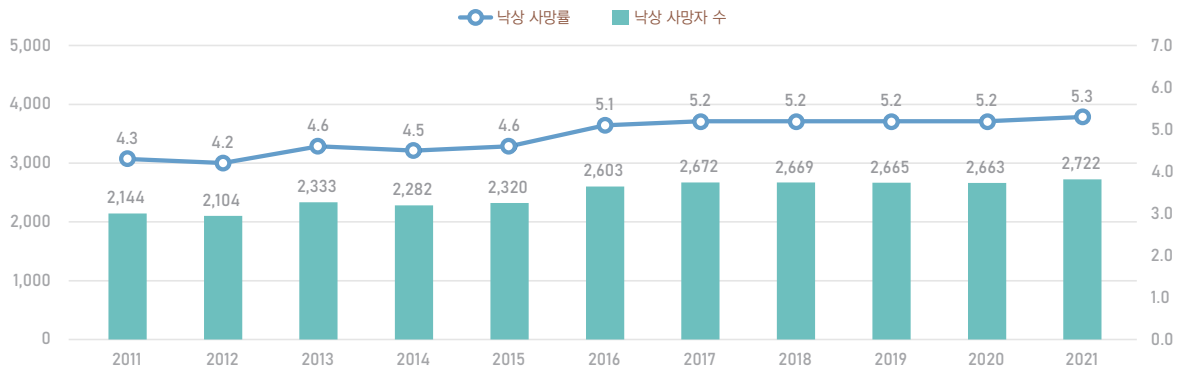
측정방법 (낙상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2021년 5.3명으로 2020년 5.2명보다 0.1명 증가하였다. 2011년 4.3명 수준이었던 낙상 사망률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낙상 사망 증가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별 낙상사망률을 살펴보면, 2021년 영아

기인 0세의 낙상 사망률은 10만명당 1.5명이며,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노인연령층으로 가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져 90세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10만명당 81.1명이 낙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사망률과 낙상 사망자 수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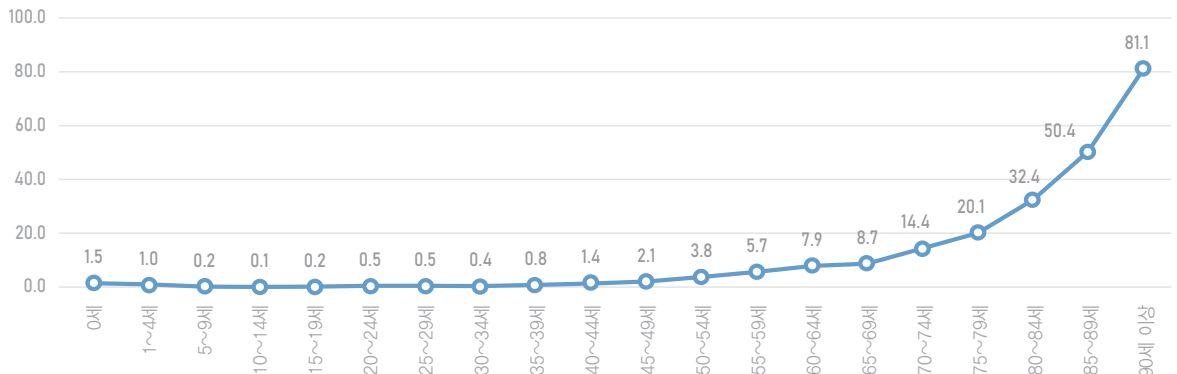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별 낙상 사망률(2021)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익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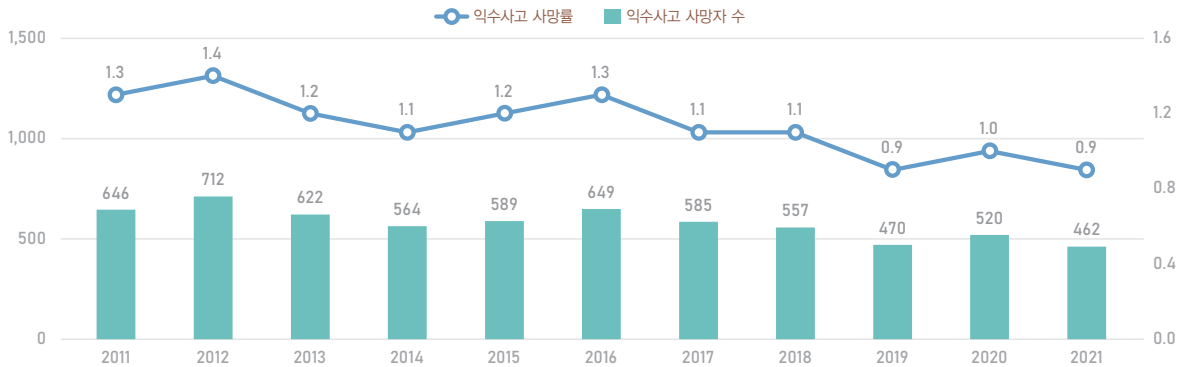
측정방법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1년 우발적 익사 및 익수에 의한 사망률은 0.9명으로 2020년(1.0명) 대비 0.1명 감소하였다. 익수사고 사망자수는 462명으로 전년(520명)보다 58명, 11.2% 감소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2021년 남자는 351명, 여자는 111명이

사망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모두 전년보다 사망자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익수사고 사망자의 73.8%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은 3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수사고 사망률과 익수사고 사망자 수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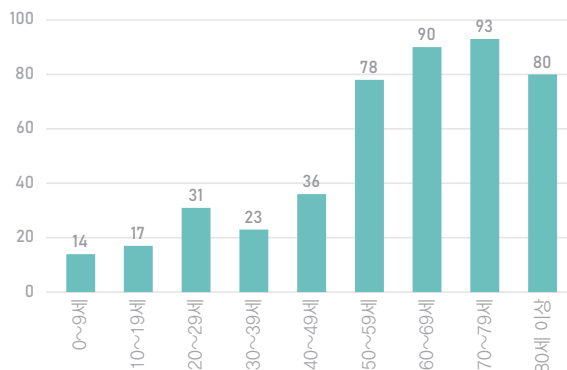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별 익수사고 사망자 수(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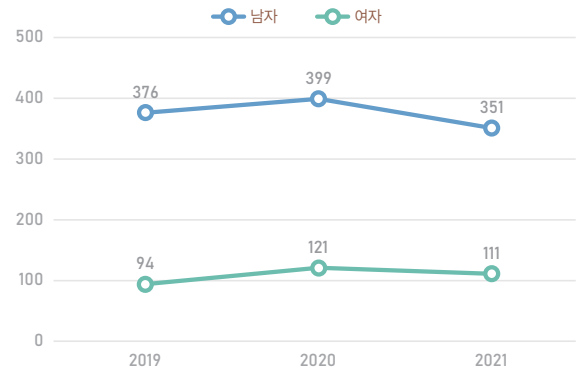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별 익수사고 사망자 수(2021)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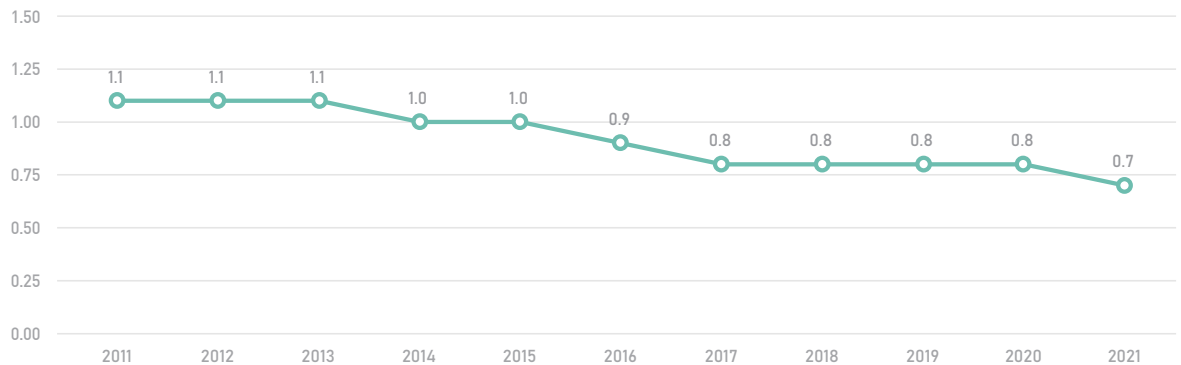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1년 가해(범죄)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7명으로 2020년(0.8명)보다 0.1명 감소하였다. 가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6명으로 연간 하루평균 1명꼴로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년(386명)보다는 7.8% 감소한 수치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0년전인

2011년(552명)과 비교해보면, 전체 범죄피해 사망자는 35.5% 감소하였으며 수단별로는 목매, 압박 및 질식 사망의 경우 2011년 96명에서 2021년 58명으로 39.6% 감소하였고, 예리한 물체에 의한 사망은 178명에서 120명으로 32.6% 감소하였고, 기타수단은 278명에서 178명으로 36.0% 감소하였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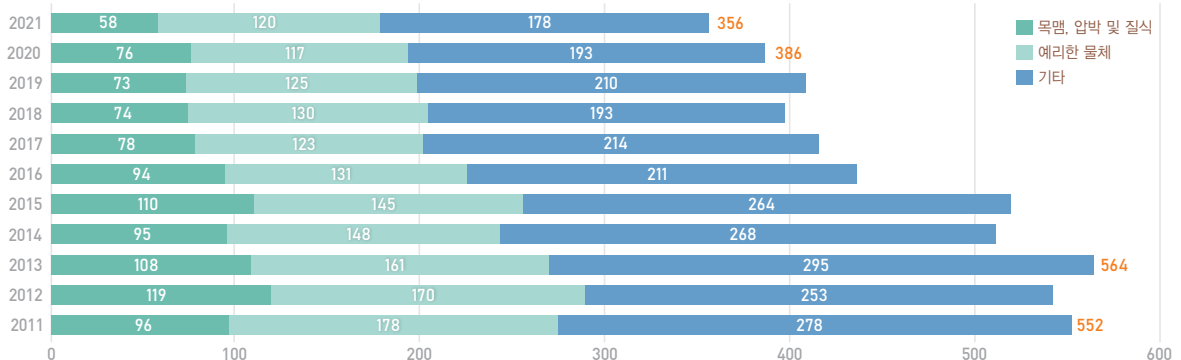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가해수단별 사망자 수(2011~2021)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중독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유독성 물질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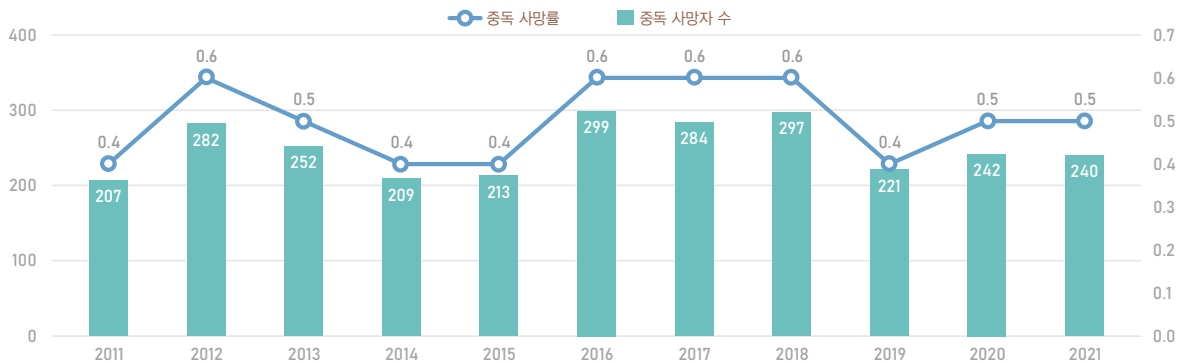
● 2021년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는 240명,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0.5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독 원인별로는 화학물 및 독성물질 중독 사망자가 182명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 중독 사망자는 58명으로 24.2%에 해당된다. 화학물 및 독성물질 중독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반면,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 중독 사망자 수는 9.4% 증가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2021년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독성 물질 중독 사망자는 남녀 모두 3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나, 화학물 및 독성 물질 중독 사망의 경우, 남자 사망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였다. 남자가 더 많은 중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독 사망률과 사망자 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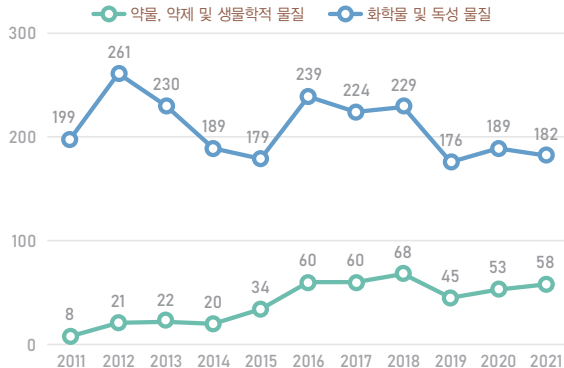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중독 원인별 사망자(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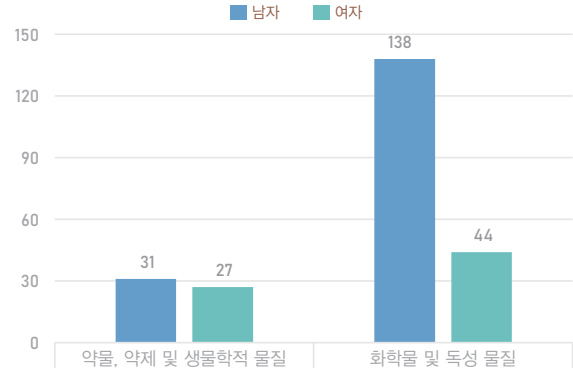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성별 중독 원인별 사망자(2021)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화재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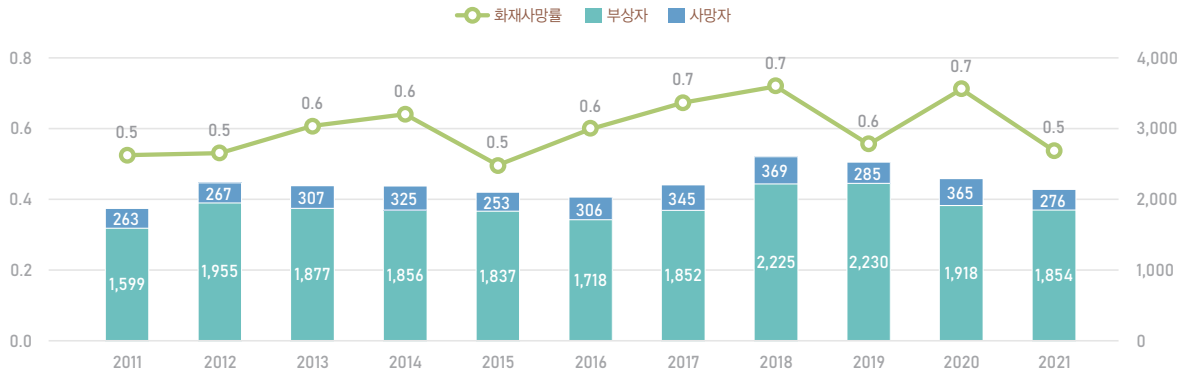
측정방법 (화재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1년 인구 10만명당 화재사망률은 0.5명으로 전년 0.7명보다 0.2명 감소하였다.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전년(365명)대비 24.4%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는 1,854명으로 전년(1,918명)대비 3.3% 감소하였다.
- 화재 발생건수는 2021년 36,267건으로 전년(38,659건)보다

6.2% 감소하였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체 화재의 46.5%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26.1%), 기계적 요인(11.1%)에 의한 화재 순서로 많이 발생하였다.

화재 사망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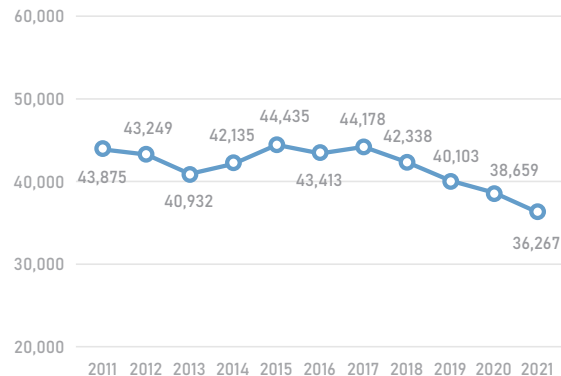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명)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화재 발생건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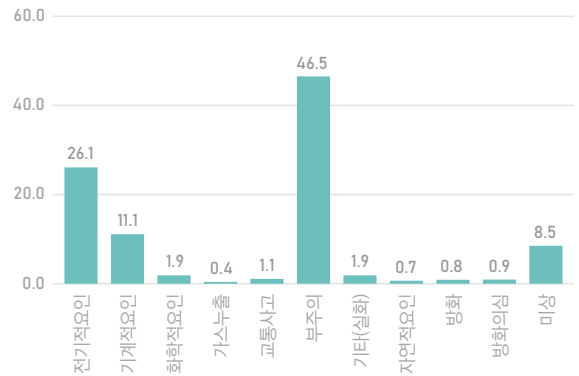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화재 원인별 발생현황(2021)

(단위: %)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자살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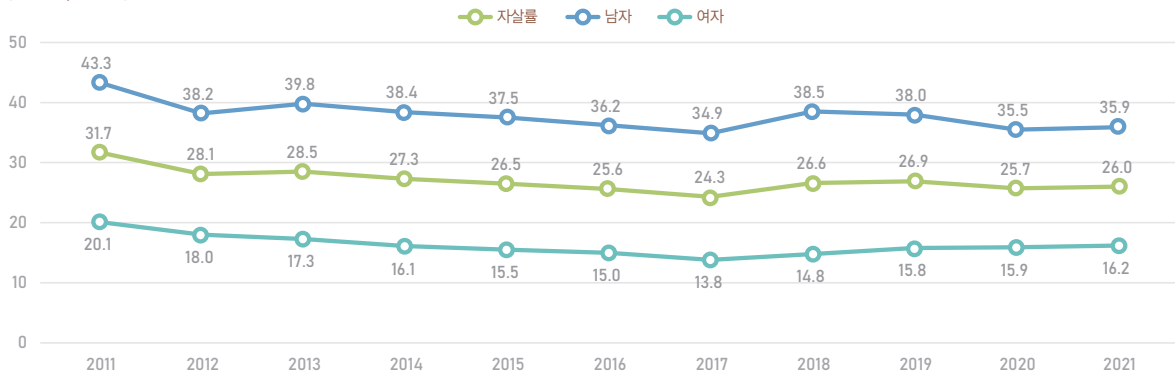
측정방법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1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352명으로 전년(13,195명) 대비 157명(1.2%) 증가하였으며, 자살률은 26.0명으로 전년(25.7명)보다 0.3명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년보다 자살률이 증가한 가운데, 남자의 자살률은 35.9명으로 여자(16.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2021년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61.3명으로 매우 높으나, 전년(62.6명)보다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청년세대의 자살률은 증가하였는데, 10~19세 자살률은 7.1명, 20~29세 자살률은 23.5명으로서 전년대비 각각 10.1%,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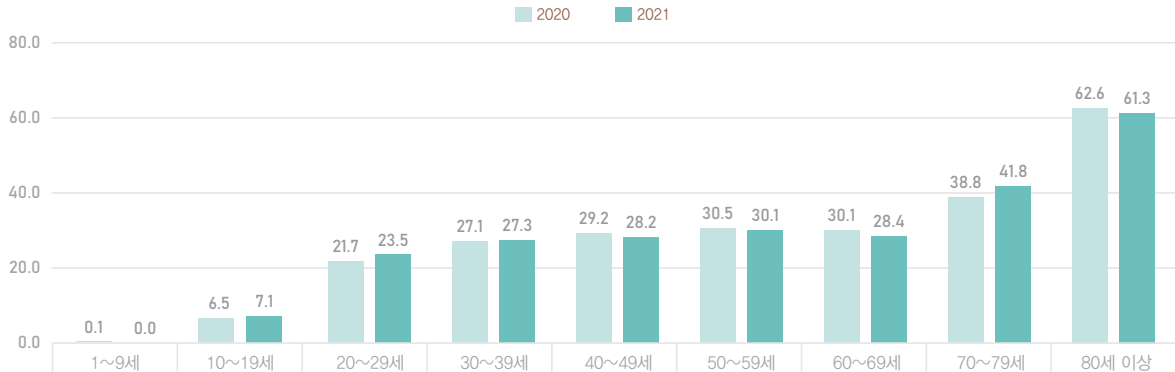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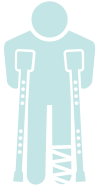
연령별 자살률(2020·2021)

(단위: 명/10만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손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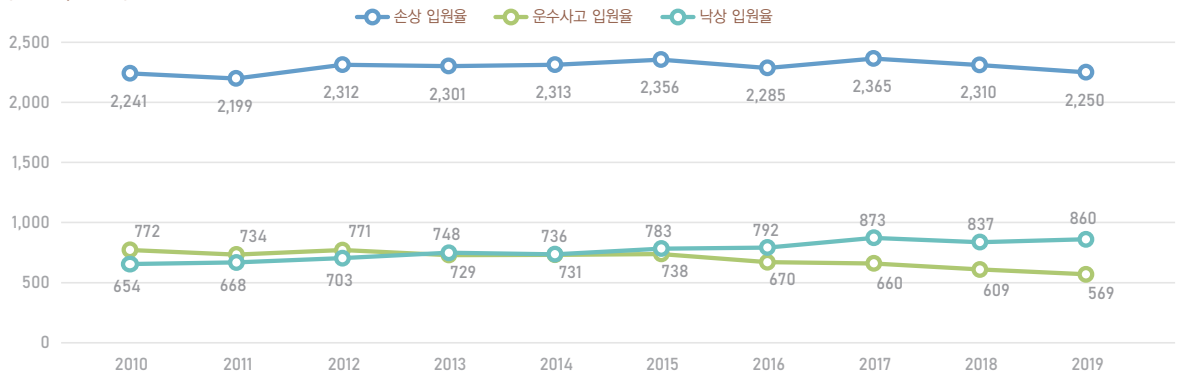
- 2019년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2,250명으로 전년(2,310명)보다 2.6% 감소하였다. 사고 입원율은 운수사고와 낙상에 의한 입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0년전에는 운수사고 입원율이 낙상입원율보다 높았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고령화로 인한 낙상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교통문화 개선으로 운수사고 입원율은 낮아지면서 낙상

입원율이 운수사고 입원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성별 손상 입원율은 2019년 남자는 10만명당 2,391명, 여자는 10만명당 2,10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손상에 의한 입원율이 13.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에 의한 평균 입원일 수는 12.6일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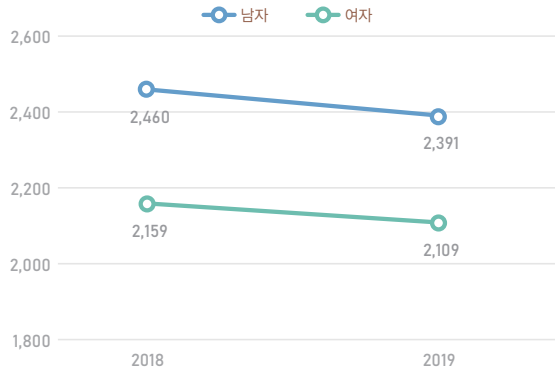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성별 손상 입원율(201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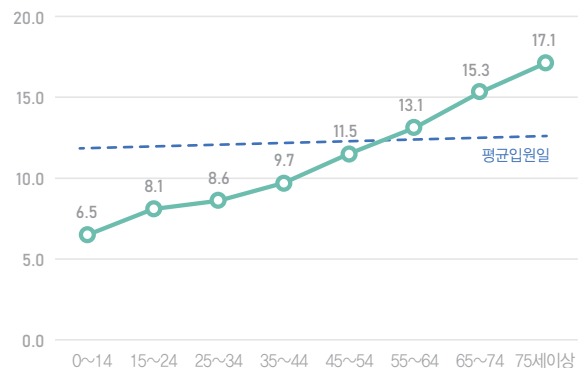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연령별 평균 손상 입원일(2019)

(단위: 일/연간)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낙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추락 및 낙상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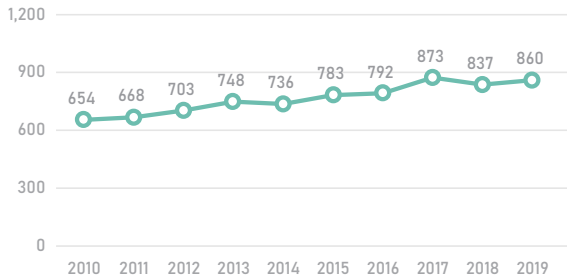
측정방법 (추락 및 낙상 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19년 낙상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860명으로 전년(837명)보다 2.7% 증가하였다. 낙상 입원율은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 2010년(654명)보다는 31.5%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낙상 입원 요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인구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2019년 낙상 환자의 31.6%는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였다.

낙상 입원율(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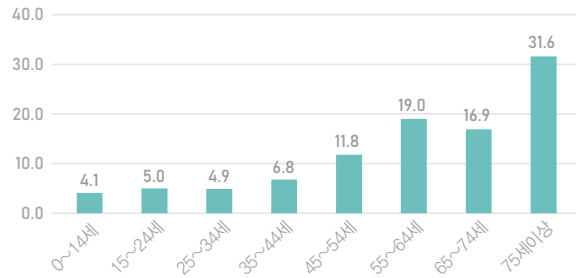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낙상 입원 환자 연령별 구성비(2019)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운수사고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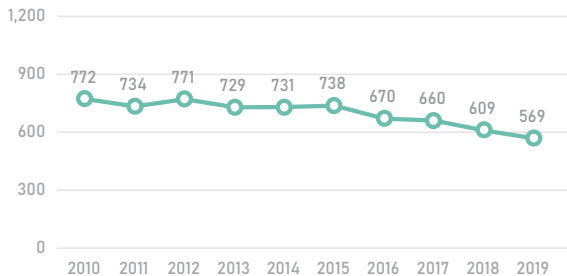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19년 운수사고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569명으로 전년(609명)보다 6.6%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승용차

(52.4%), 보행자(14.4%), 오토바이(12.1%) 자전거(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고 입원율(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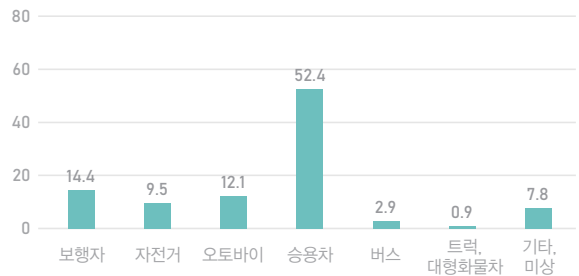
(단위: 명/10만명)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운수사고 유형별 입원 환자 구성비(2019)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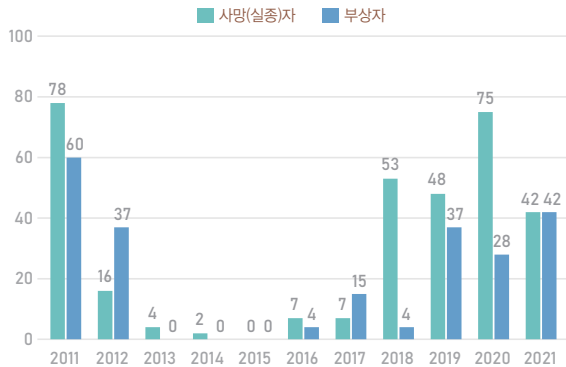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수

-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포함)는 총 42명으로, 2020년(75명)보다 44.0% 감소하였으나, 부상자는 42명으로 전년(28명)보다 50.0% 증가하였다. 2020년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사망자(실종자 포함)가 44명 발생하는 등 자연재난 인명피해가 매우 컸다. 그에 비해 2021년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39명 발생하여 전년(29명)보다 34.5% 증가하였다. 이재민의 경우 호우피해가 크지 않았던 탓에 2015년(92명) 이후 가장 적은 2,261명이 발생하였다. 10년전인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 강남지역 침수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자연재난 인명피해(2011~2021)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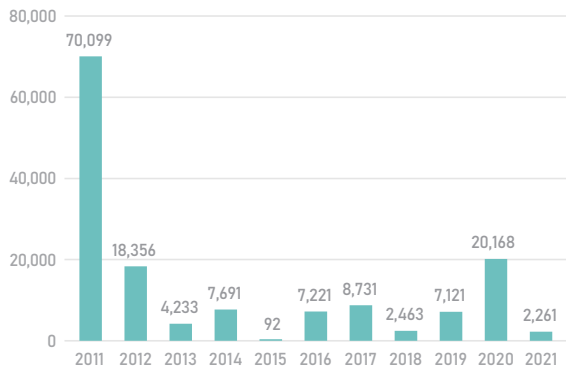
자연재난 원인별 사망자(실종자 포함)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태풍	1	14	-	-	-	6	-	2	18	2	-
호우	77	2	4	2	-	1	7	2	-	44	3
태풍 호우	-	-	-	-	-	-	-	1	-	-	-
폭염	미산정							48	30	29	39

자연재난 이재민 수(2011~2021)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자연재난 피해액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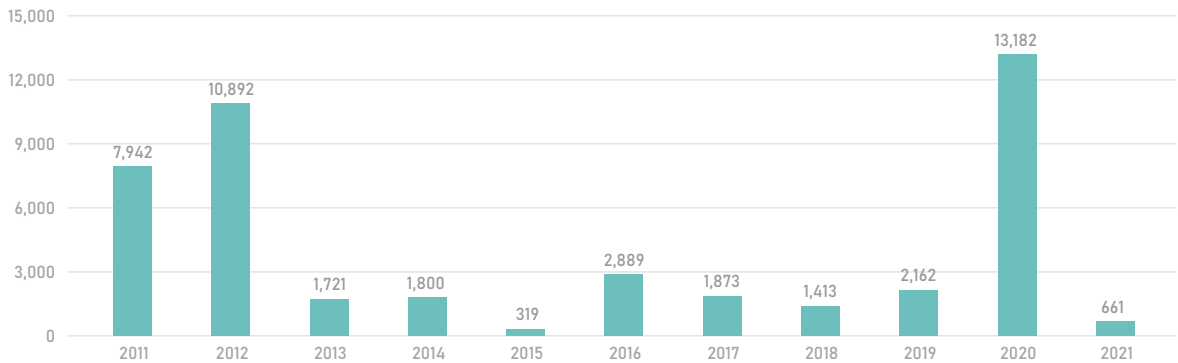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 2021년 자연재난 피해액은 661억원으로 전년(1조 3,182억원) 대비 95.0% 감소하였다. 2020년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자연재난 피해액이 1조 3,182억 원에 달하여 최근 10년 간 가장 큰 자연재난 피해액을 기록한 바 있다. 그에 비하여 2021년은 지난 10년간 두 번째로 자연재난 피해액이

적은 한해였다. 피해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호우 61.5%, 태풍 31.9%, 대설 5.3% 순으로 많았으며, 피해 종목별로는 공공시설 77.6%, 사유시설 8.4%, 농경지 8.0%, 건물 5.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자연재난 피해액(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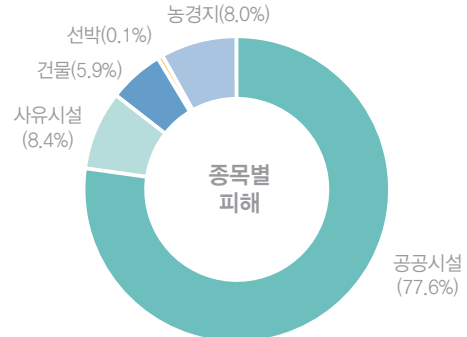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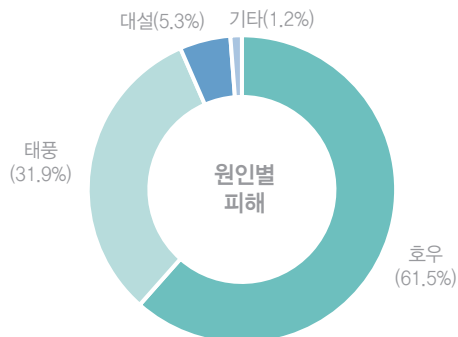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연재난 원인별 종목별 피해 현황(2021)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사회재난 인명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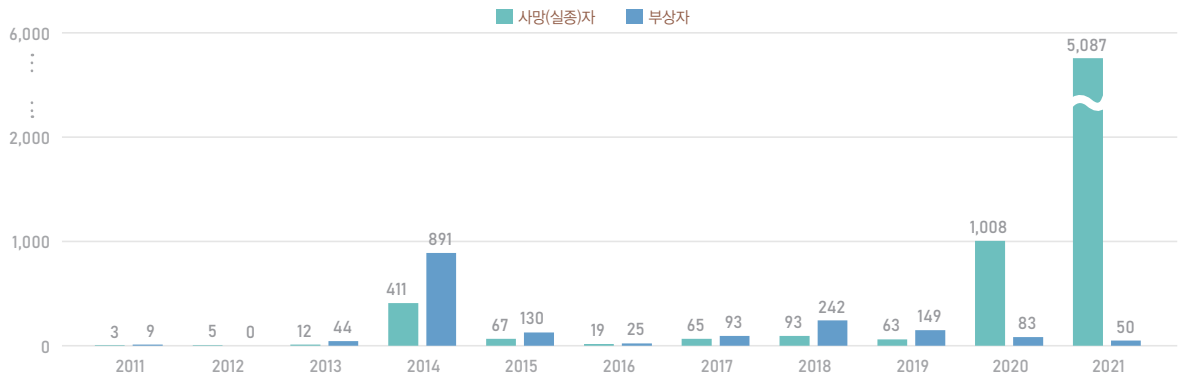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수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수

- 2021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5,087명으로, 2020년(1,008명) 대비 약 5배 증가하였다. 사망(실종)자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5,054명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부상자 수는 전년(83명)보다 약 40% 감소한 50명으로 나타났다.
-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23건으로 전년(25건)보다 2건 감소하였는데, 유형별로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와 전력사고는 전년에는 발생이 없었으나, 2021년에는 각 1건씩 발생하였다.

사회재난 인명피해(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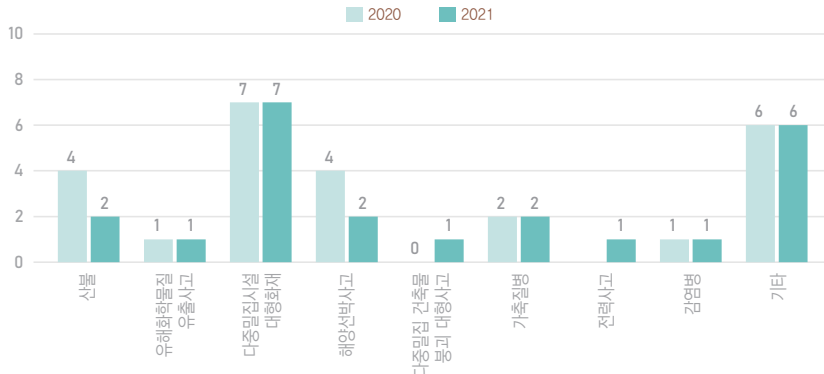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건수(2020·2021)

(단위: 건)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사회재난 피해액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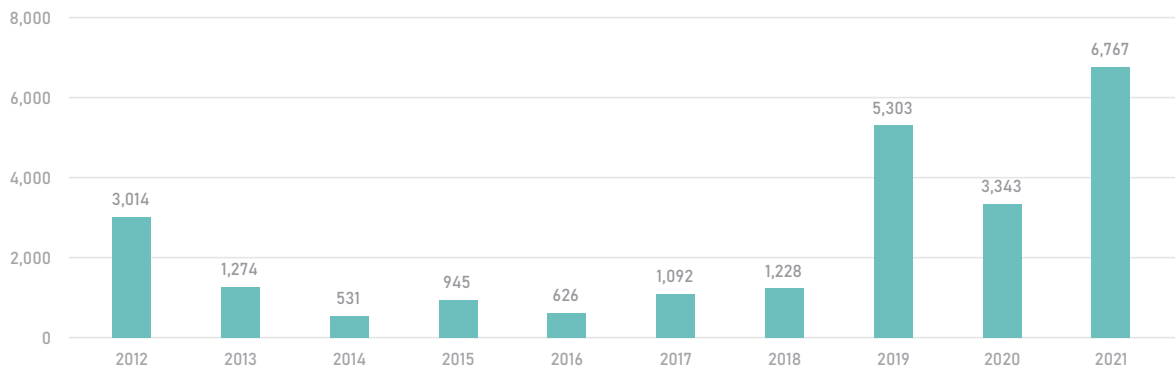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 2021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6,767억 원으로, 2020년(3,343억 원)대비 피해규모가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에서 5,178억 원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축질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닭·오리 828만수와

돼지 9,472두 매몰 등 1,29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0년 천 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던 산불의 경우, 2021년에는 그 피해액이 177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피해액(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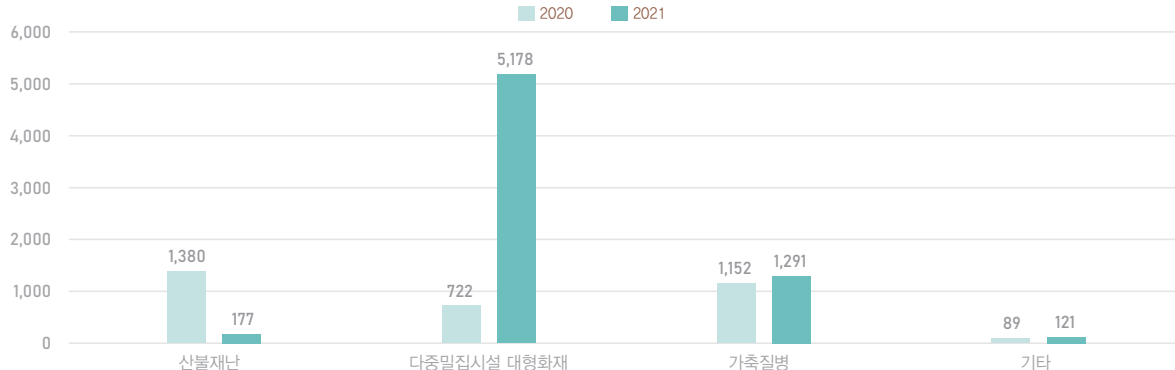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사회재난 유형별 피해액(2020~2021)

(단위: 억원)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산업재해 사망률



지표정의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1만명당 업무와 관련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 ÷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수)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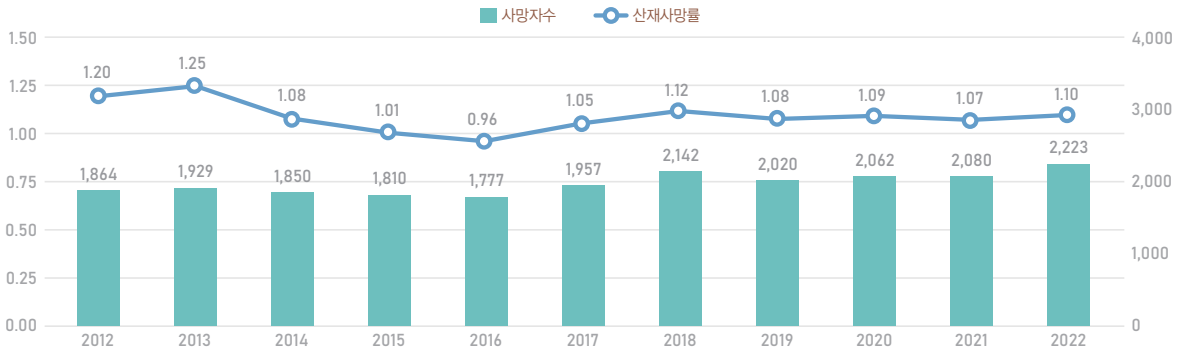
- 산업재해 사망률(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를 의미하며, 이때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고사망자는 제외한다.
- 2022년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 (1.07명)보다 0.03명(2.8%) 증가하였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2018년 1.12명에서 2021년 1.07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시 1.10명대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22년 2,223명으로 전년(2,080명)보다 143명(6.9%) 증가하였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1,372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여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 질병을 제외한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은 2022년 0.43명으로 전년(0.43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와 사망률(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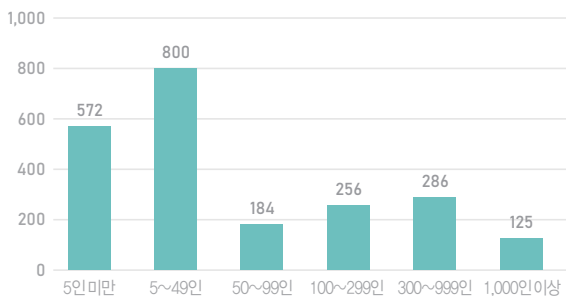
(단위: 명/근로자만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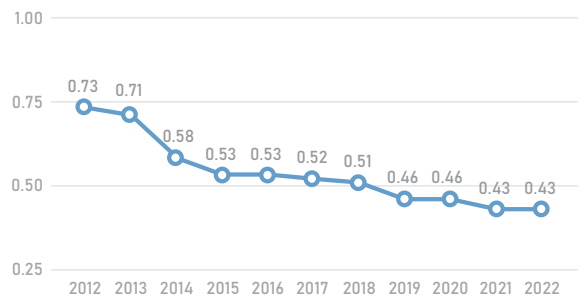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사고사망 만인율(2012~2022)

(단위: 명/근로자만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산업재해율



지표정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100명 당 재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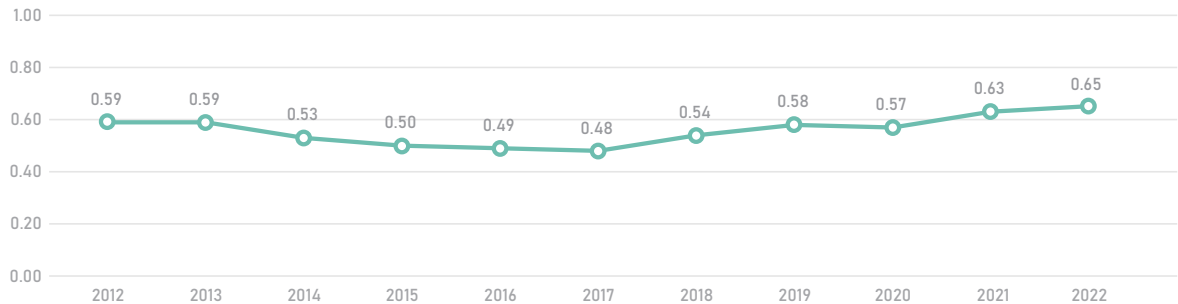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또는 질병이환자 수)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 × 100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00명 당 재해자 수를 의미하는 산업재해율은 2022년 0.65%로서 전년(0.63%)보다 0.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율은 과거 1990년 1.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0.48%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재해자 수는 2022년 130,348명으로 전년(122,713명)보다 7,635명(6.2%)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율(2012~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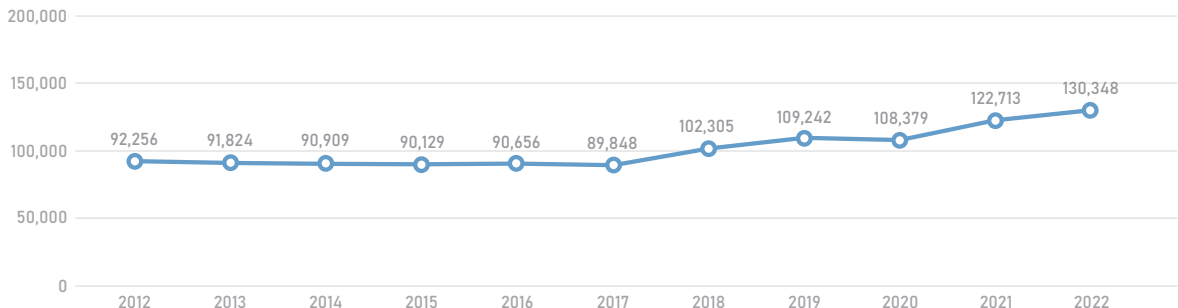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1: 산업재해율=(재해자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 100

재해자 수(2012~2022)

(단위: 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 수

산업재해 통계 작성대상 재해

각년도 1~12월까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재해 포함)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표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수법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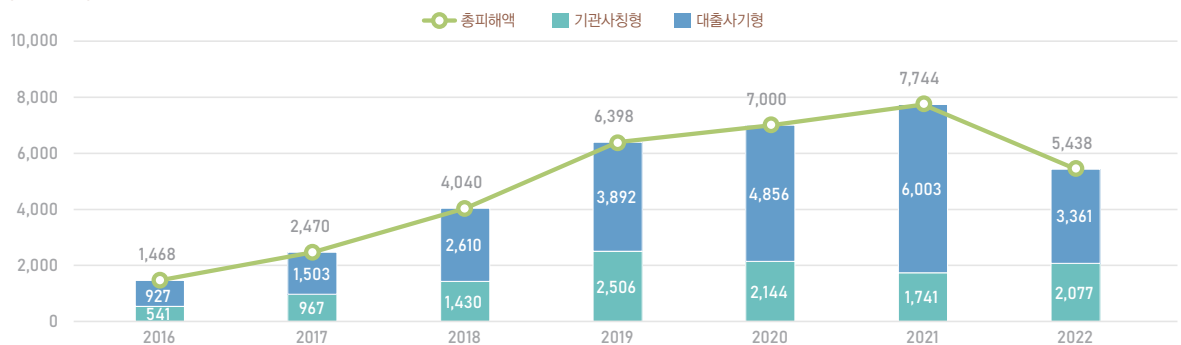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및 대출사기형 피해금액 합(기관사칭형은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발생한 금액, 대출사기형은 금융회사를 빙자한 사기범이 정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며 대출심사 명목의 개인정보 및 선납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대출 권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을 통한 대출빙자형 사기 등 피해자로부터 편취 후 잠적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

-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총 피해가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 범정부와 일반시민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22년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보다 29.8% 감소하였다. 대출사기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기관사칭형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액(201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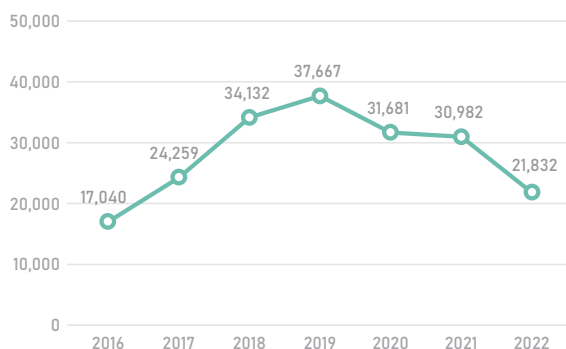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201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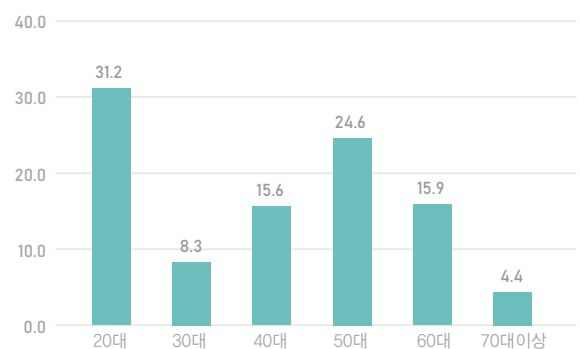
(단위: 건)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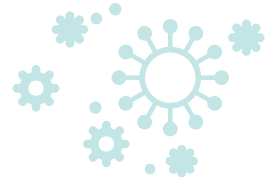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 구성비(2022)

(단위: %)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지표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 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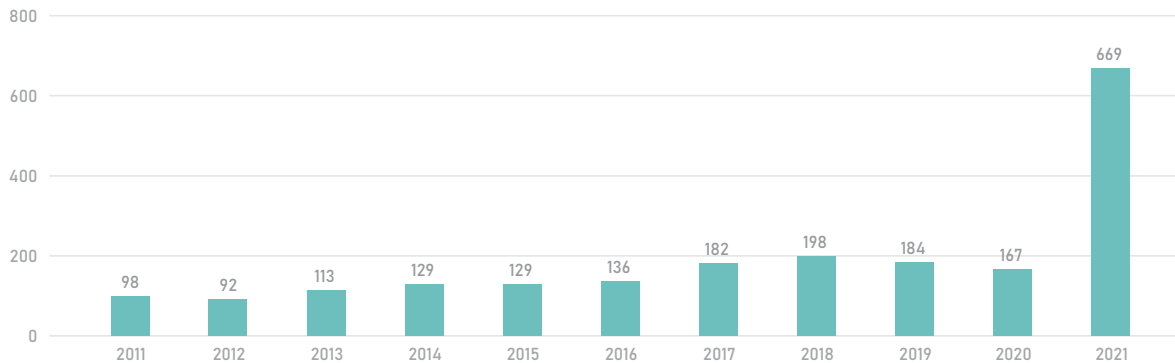
측정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등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1년간 발생한 환자수

- 202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669천 건으로 2020년 167천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감염병 급별로 보면, 2~4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1급 감염병은 570천 건으로 전년(61천 건)대비 약 9배 증가하였다. 이는 1급 감염

병인 코로나19의 발병 첫 해인 2020년에는 환자수가 61천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여름 휴가철인 7월 부터 크게 확산되어 전년의 9배이상인 570천명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였기 때문이다.

법정감염병 발생건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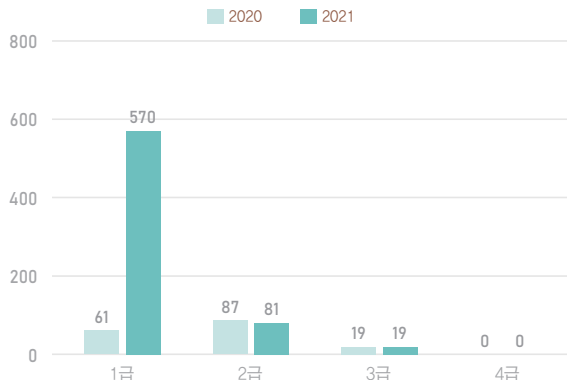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법정감염병 급별 발생건수(2020·2021)

(단위: 천 건)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법정감염병은 2020년부터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및 격리수준을 고려하여 1~4급으로 개편되었다. 과거 유행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02~'03년, 'SARS'), 신종인플루엔자('09~'10년,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15년, '메르스')는 모두 2019년 이전(1~4급 체계)에는 4급에 속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인 1급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1급 전염병으로 지정된지 2년여만인 2022년 4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대응수단이 강화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2022년부터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식중독 발생건수



지표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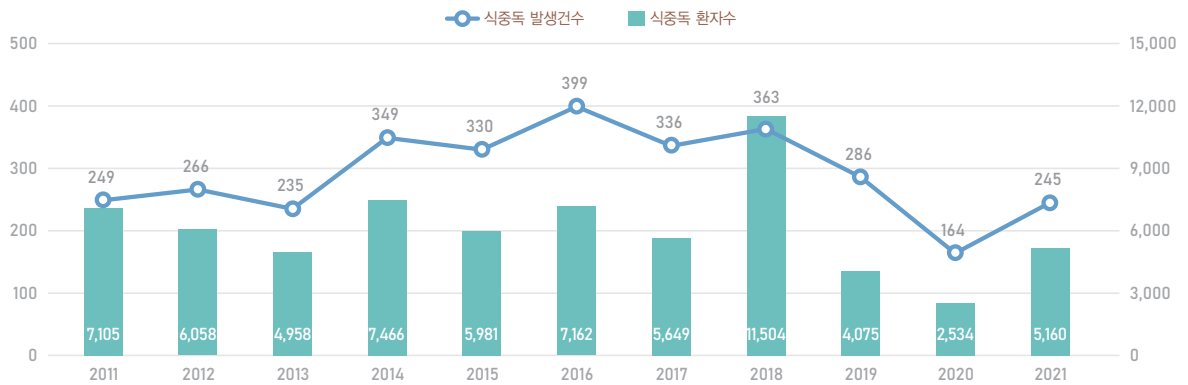
측정방법 동일한 식품 섭취로 인하여 2명 이상에서 유사한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 집단발생한 신고 건수

- 2021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245건으로 전년(164건)보다 49.4% 증가하였으며, 식중독 환자는 5,160명으로 전년(2,534명)보다 103.6% 증가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6·11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발생환자가 증가

하였는데 특히, 7~8월 환자수는 전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식중독 환자의 약 90%는 음식점(2,705명, 52.4%)과 집단급식소(1,935명, 37.5%)에서 발생하였다.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 수(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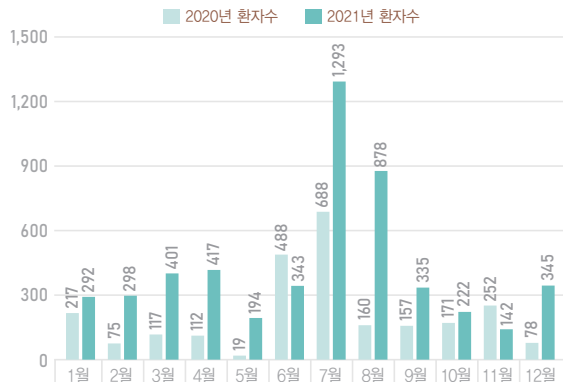
(단위: 건, 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월별 식중독 환자수(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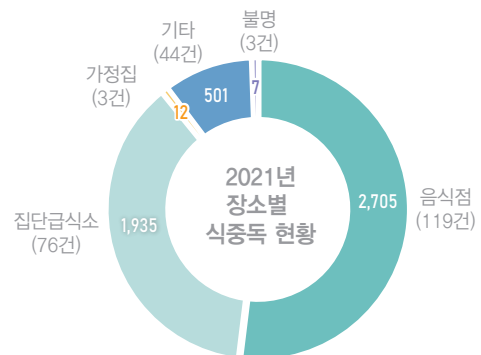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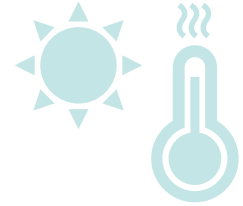
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2021)

(단위: 건, 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온열질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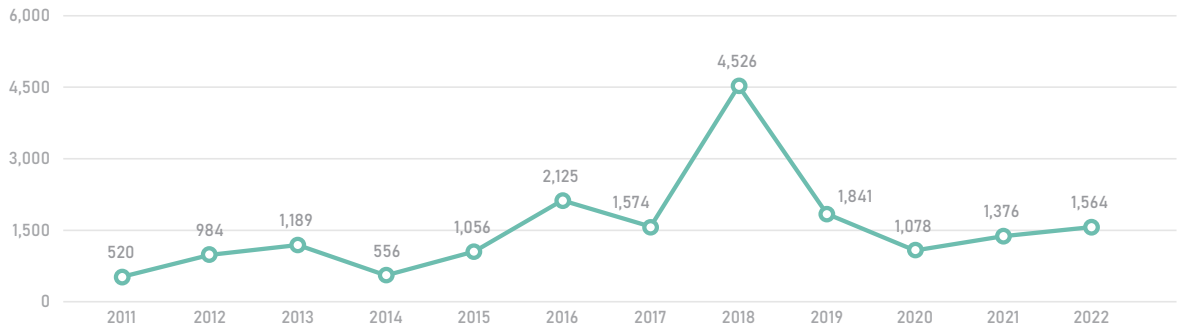
지표정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

측정방법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내 해당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 2022년('22.5.20~'22.9.30.)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으로 전년(1,376명) 대비 13.7% 증가하였다.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22.0%), 60대(18.0%), 40대(15.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장소로는 실외작업장(37.1%), 논밭(14.7%), 길가(10.3%), 실내작업장(8.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자 수(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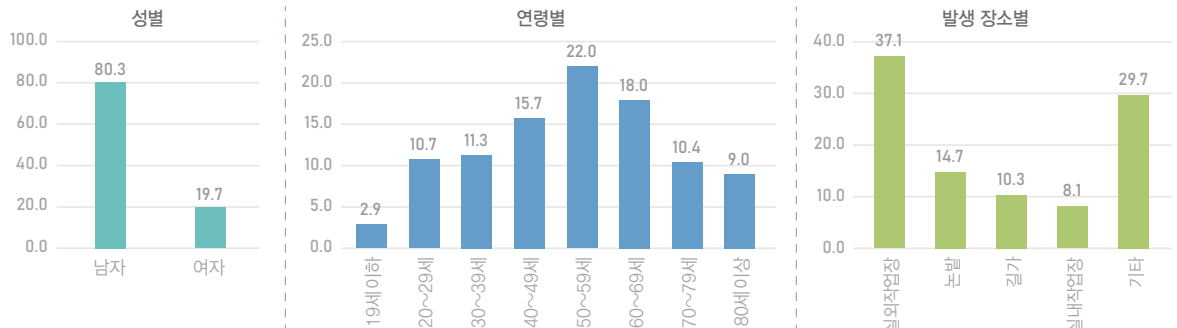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온열질환자 발생현황(2022)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매년 여름철 전국 약 5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여 발생특성 정보를 일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인지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단, 속보성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이므로 공식적인 폭염 피해 사망자 수는 익년도에 공표되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른다.

PART 3

부록

1. OECD 국제비교	78
2. 안전지표 자료출처	92
3. 참고문헌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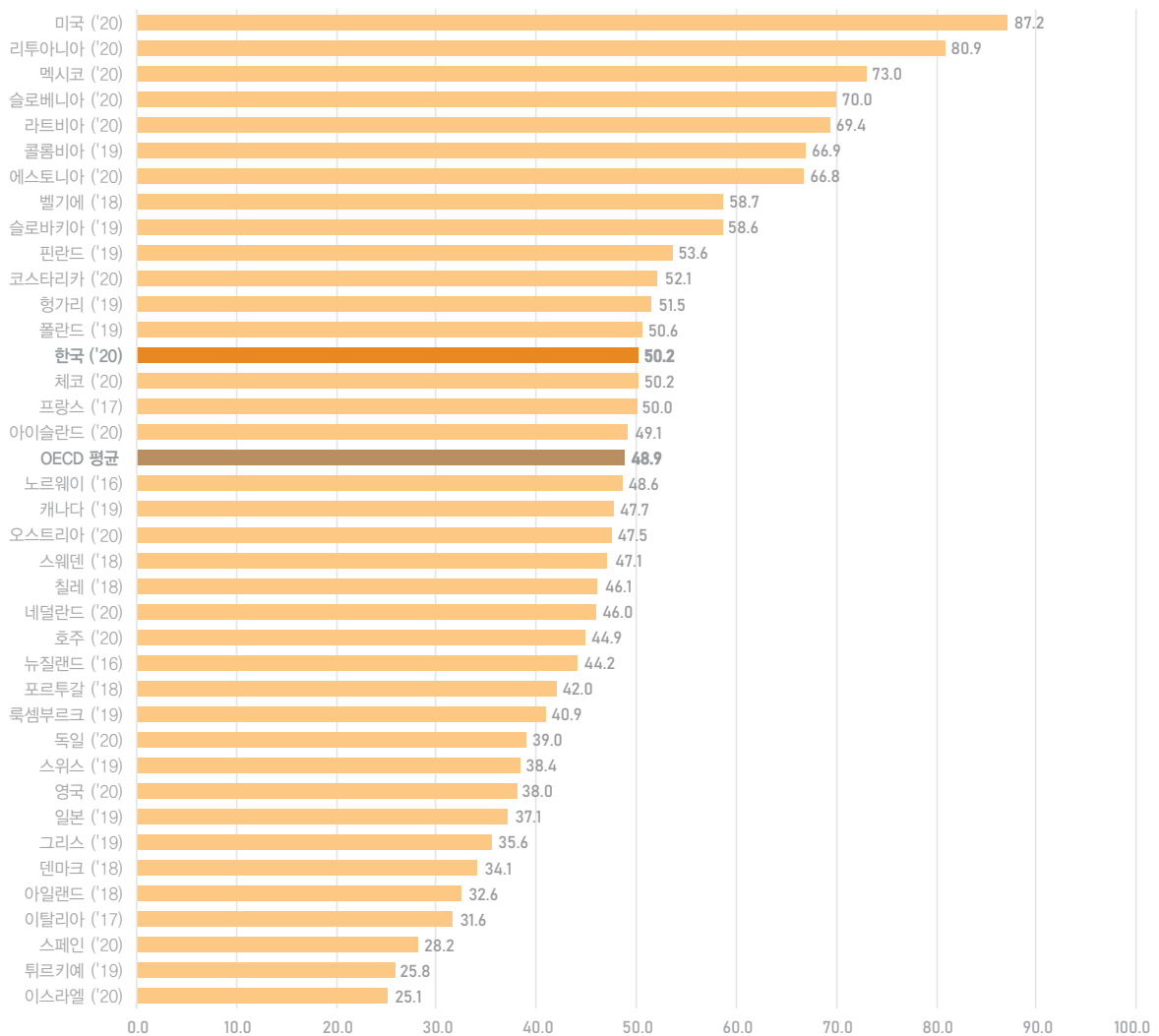
1. OECD 국제비교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한국의 질병이외의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50.2명으로 OECD 국가 평균(48.9명)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체코와 공동 15위권으로, 2019년(50.3명, 12위)보다는 손상사망 위험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국가별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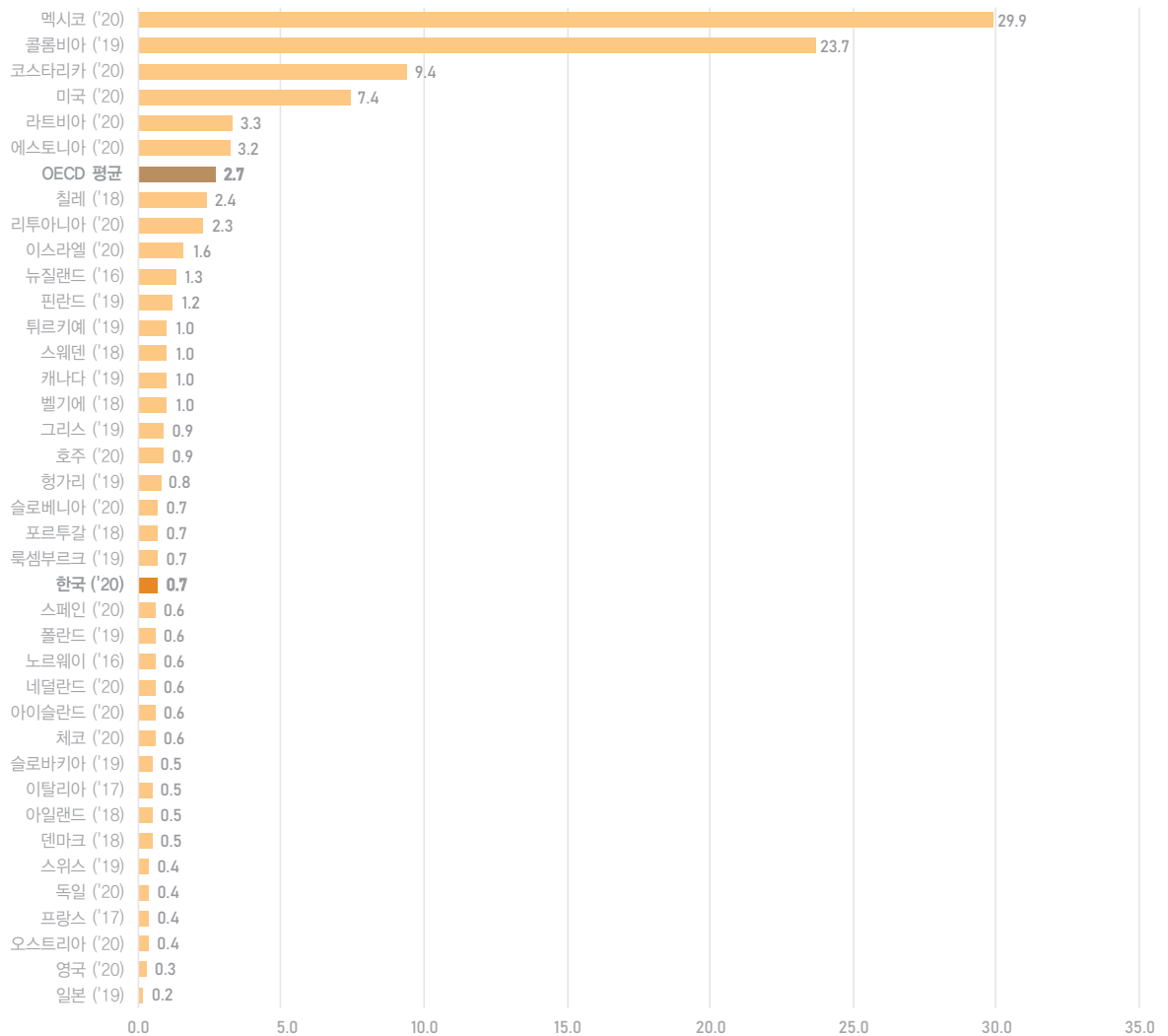


가해에 의한 사망률

한국의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0.7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체코와 함께 19위권(전년도 20위)이다. OECD 38개 국가 평균사망률은 2.7명으로 사망률이 2.0명 이상인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하나, 멕시코(29.9명), 콜롬비아(23.7명), 코스타리카(9.4명), 미국(7.4명) 등의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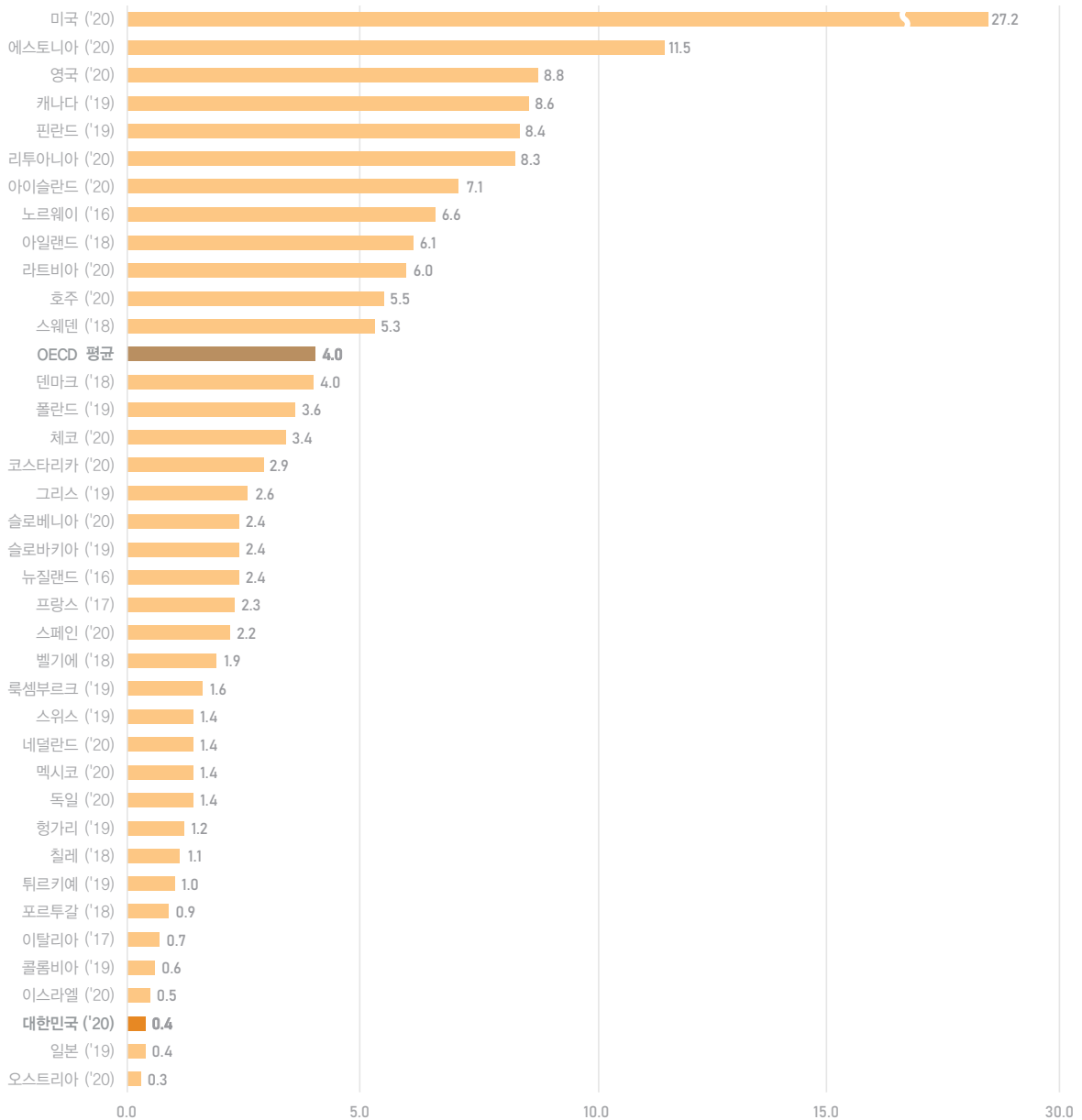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중독 사망률

한국의 중독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0.4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일본(0.4명)과 함께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0.3명)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27.2명)으로 두 번째로 중독사망률이 높은 에스토니아(11.5명)와도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별 중독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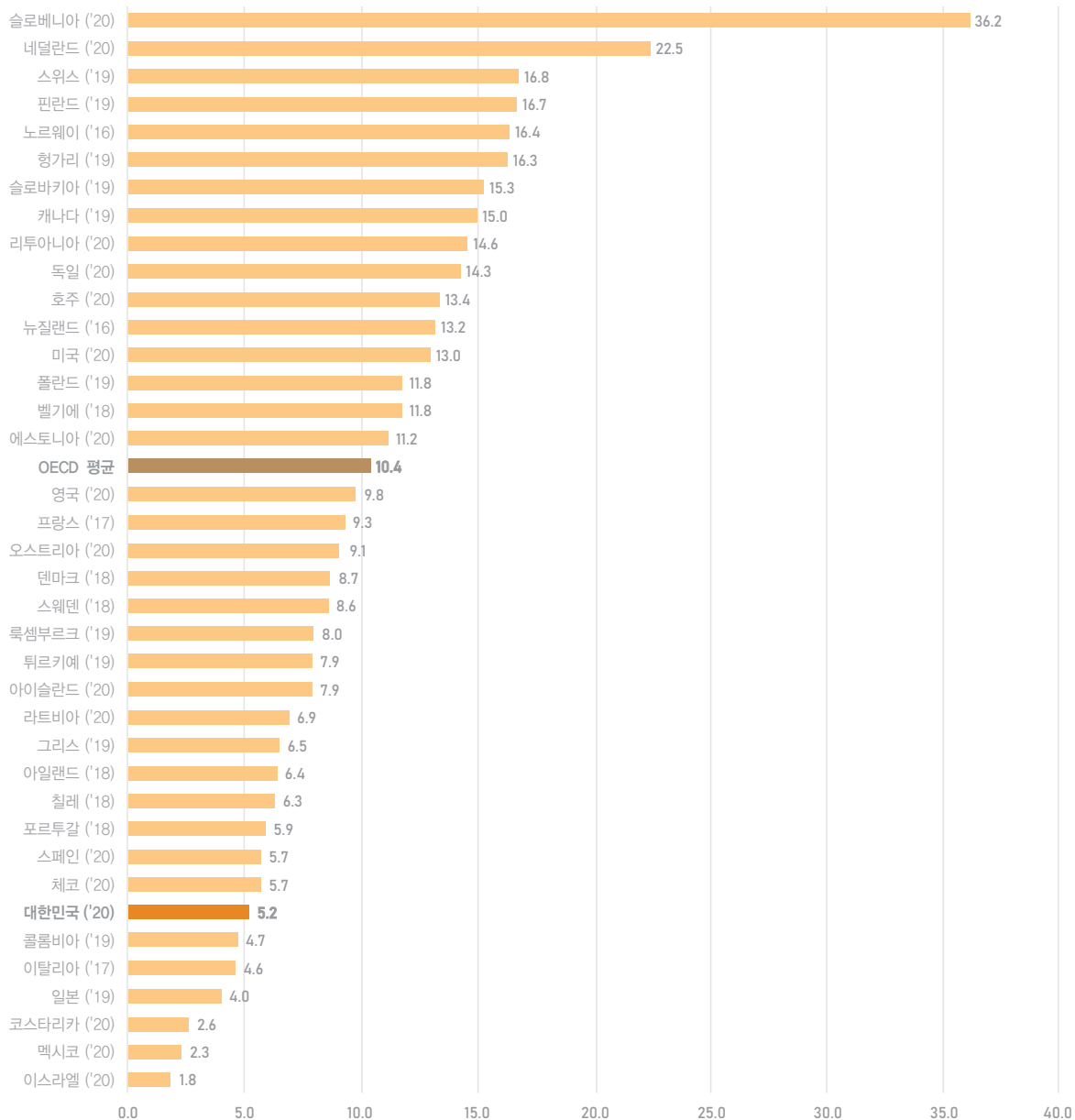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한국의 낙상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 낙상사망률(10.4명)의 절반수준으로 낮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독일(14.3명), 미국(13.0명), 영국(9.8명), 프랑스(9.3명)는 한국보다 높고, 일본(4.0)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낙상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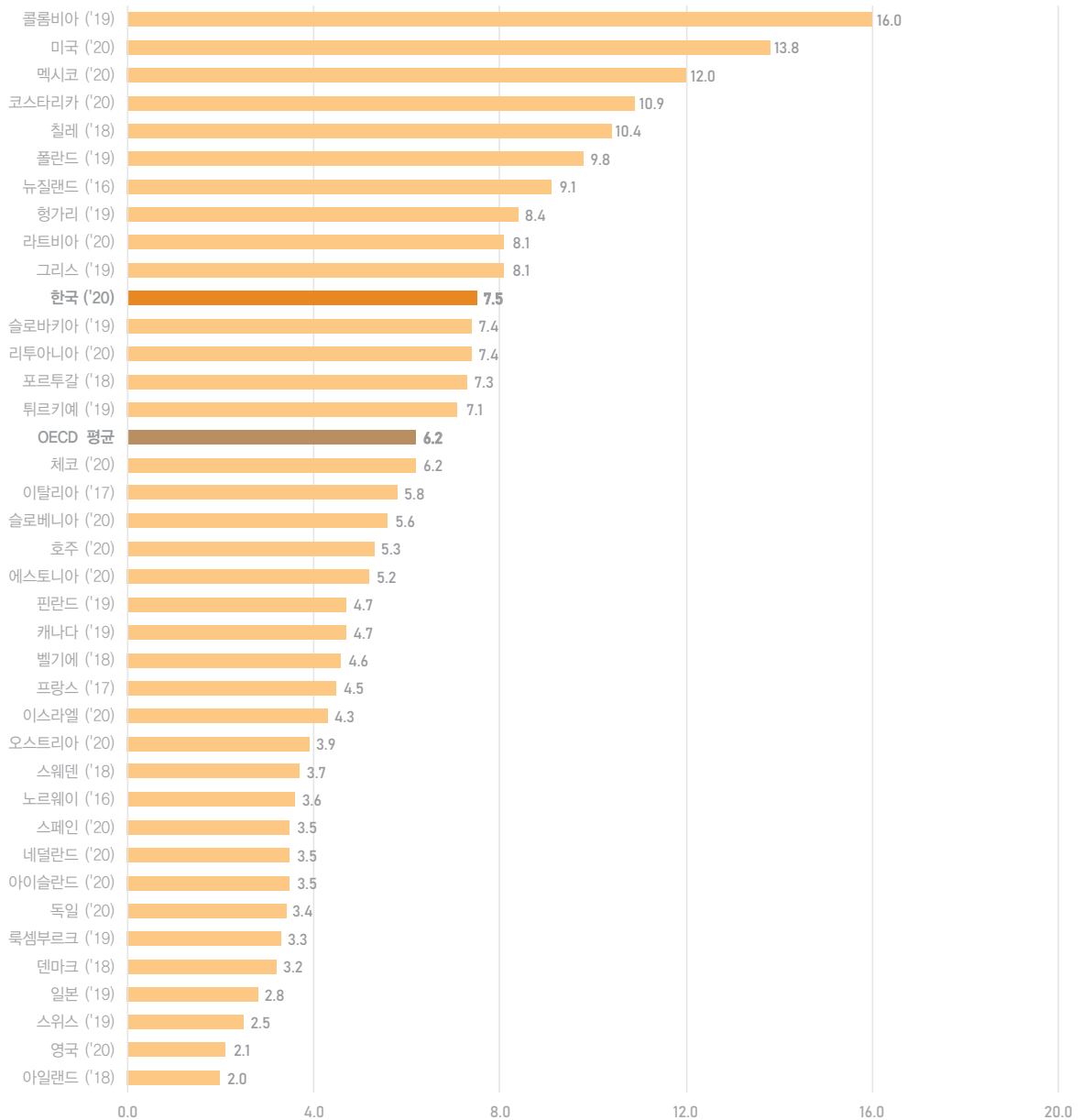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운수사고 사망률

한국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7.5명으로 OECD 평균(6.2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13.8명)은 한국보다 높고, 영국(2.1명), 일본(2.8명), 프랑스(4.5명), 독일(3.4명) 등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운수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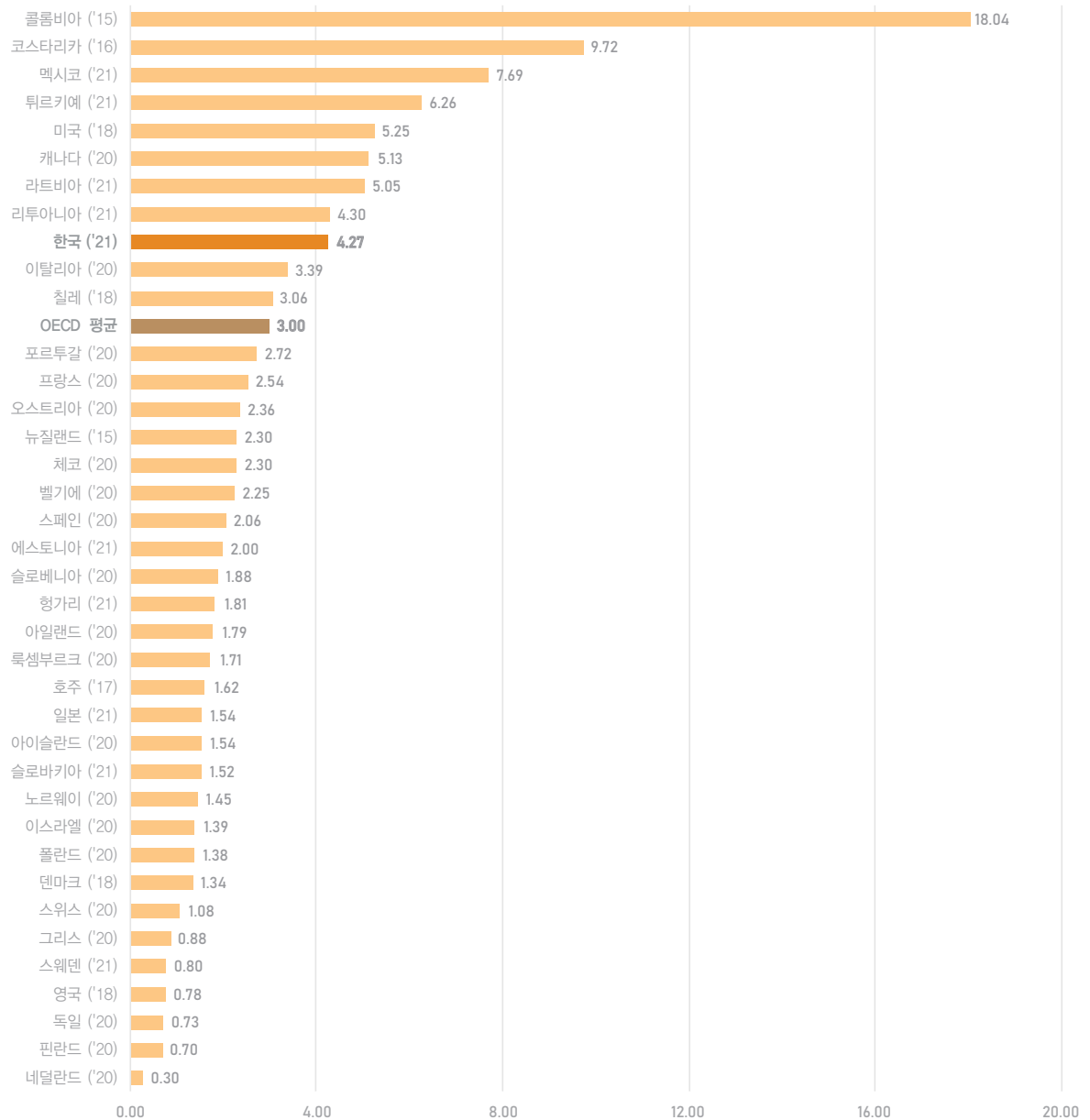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산업재해 치명률

한국의 산업재해 치명률은 2021년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이다. 산업재해 통계 작성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OECD 회원국 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한국의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OECD 국가별 산업재해 치명률(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사망자수)

(단위: 명/근로자10만명)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ILO Stat』 2022.12월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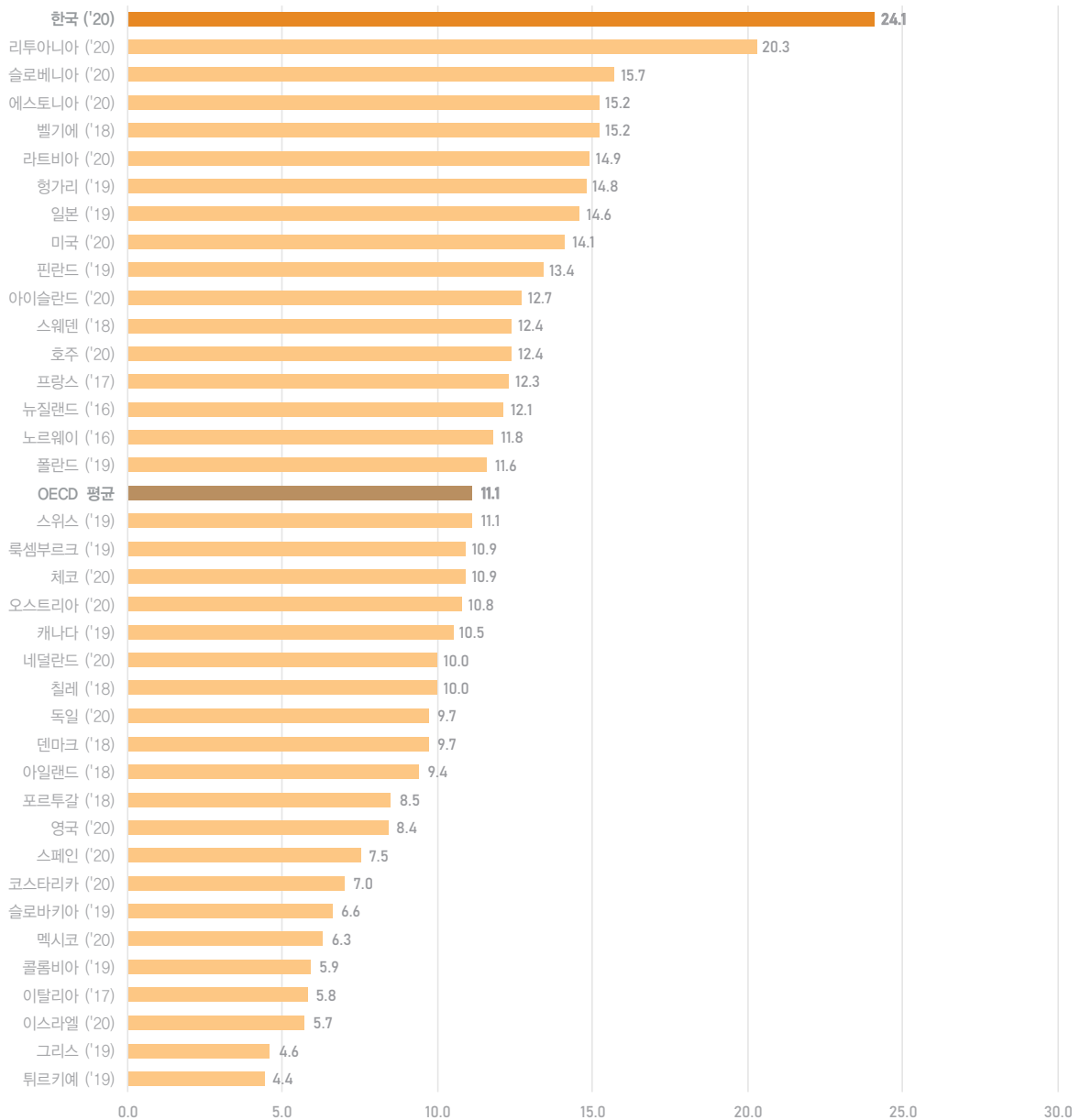
주1: 산업재해 치명률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자 수를 의미함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로 산업재해 사망통계 작성 기준이 상이한 점에 유의

한국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OECD 평균(11.1명)의 2배 이상 높으며,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20.3명)와도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별 자살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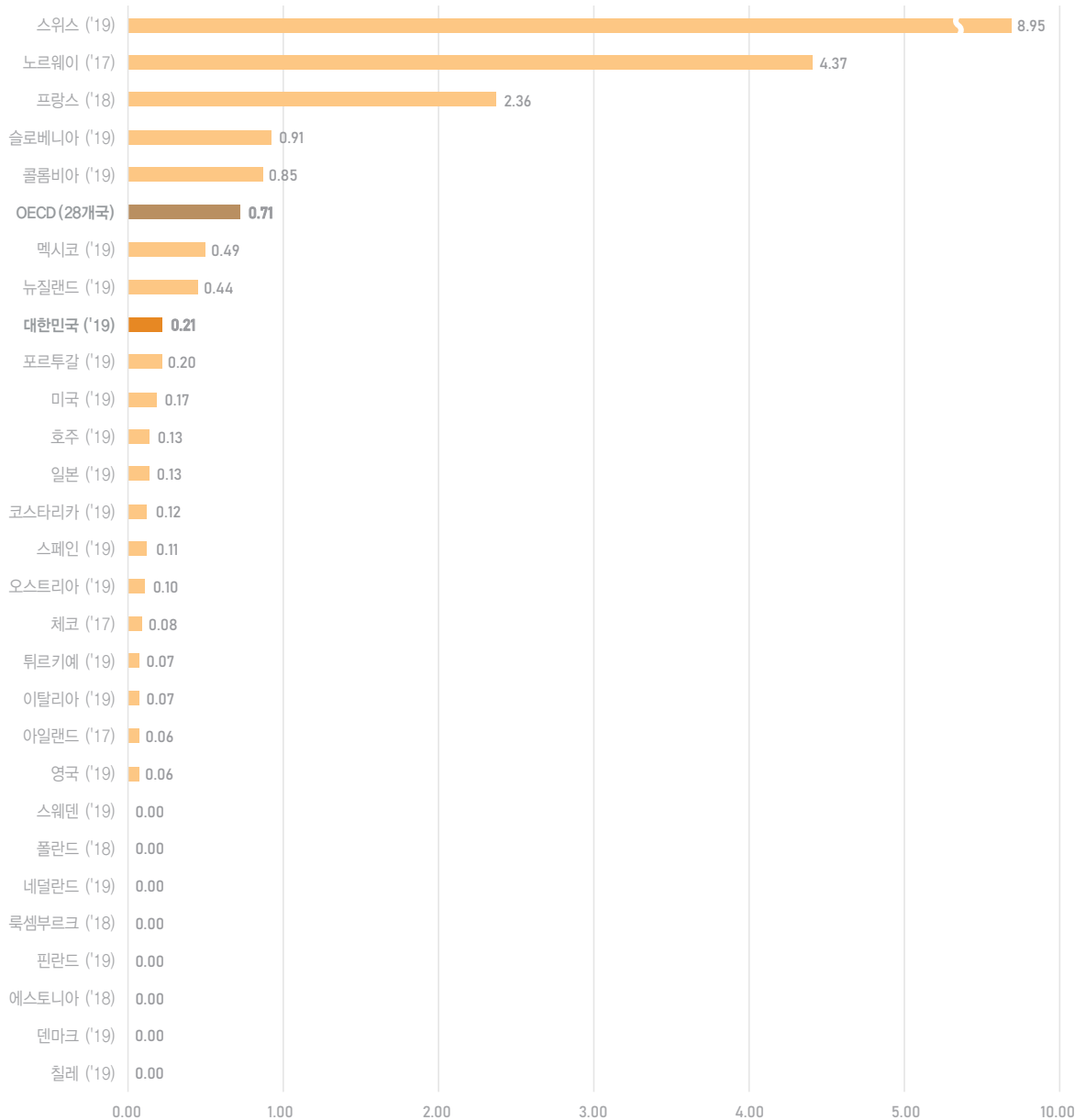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재난사고 사망률

한국의 2019년 재난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21명으로 자료를 제공한 OECD 회원국(28개 국)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프랑스(2.36명)는 한국보다 높고, 미국(0.17명), 일본(0.13명), 영국(0.06명)은 한국보다 낮다.

OECD 재난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명당)



출처: UNISDR, SDGs Indicator 11.5.1, 2022.12월 인출

주1: SDGs Indicator 11.5.1.은 인구 10만명당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실종자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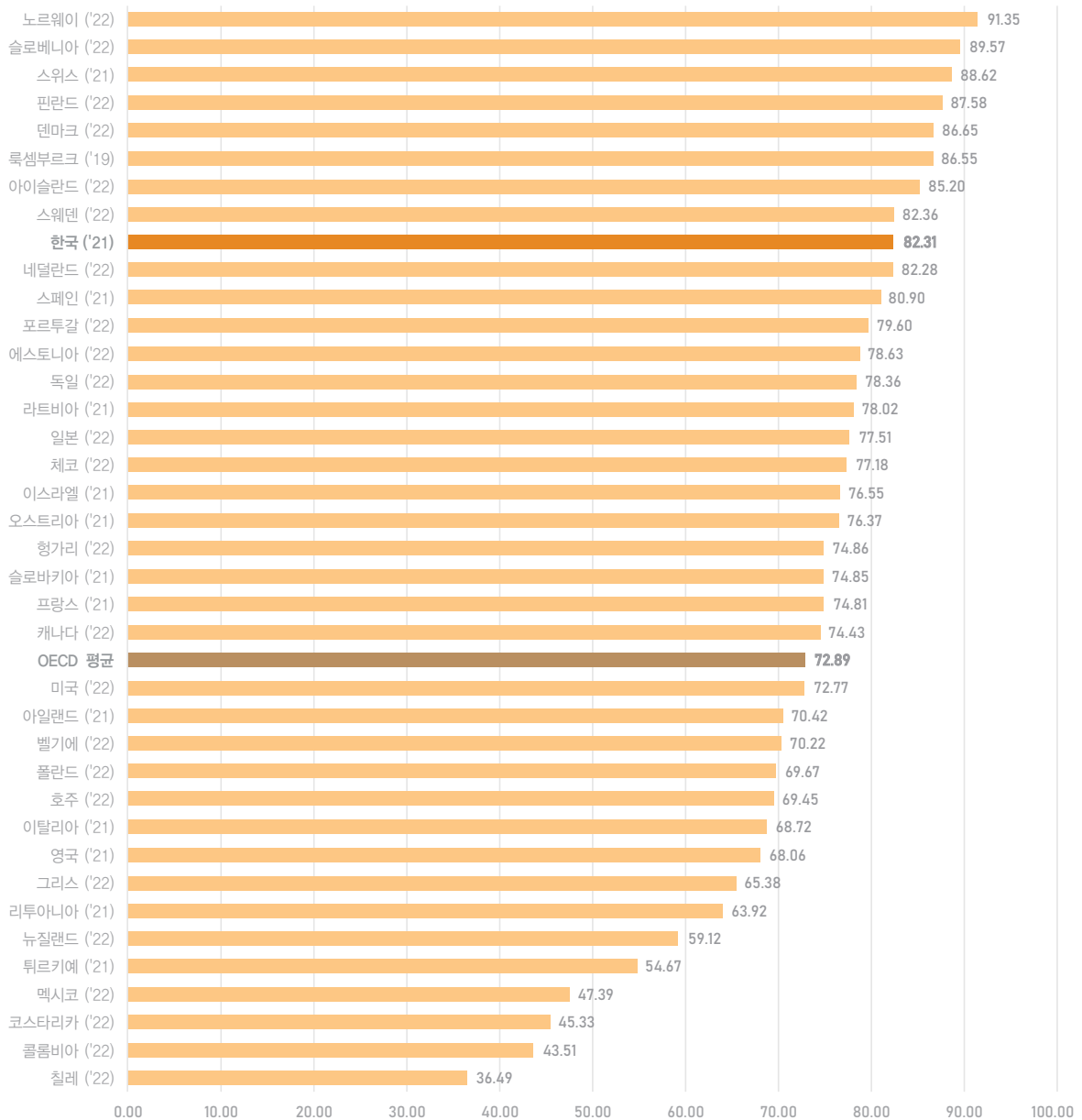
주2: 2020년 이후 일부 국가의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나, 코로나19 사망자 포함 여부가 달라 국가간 자료의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함.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을 기준년도로 수록함

야간보행 안전도

한국의 야간보행 안전도는 2021년 82.31%로 OECD 평균(72.89%)보다 높으며,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아 비교적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OECD 국가별 야간보행 안전도

(단위: %)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1: OECD How's wellbeing 자료로 15세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통계청 사회조사(13세이상)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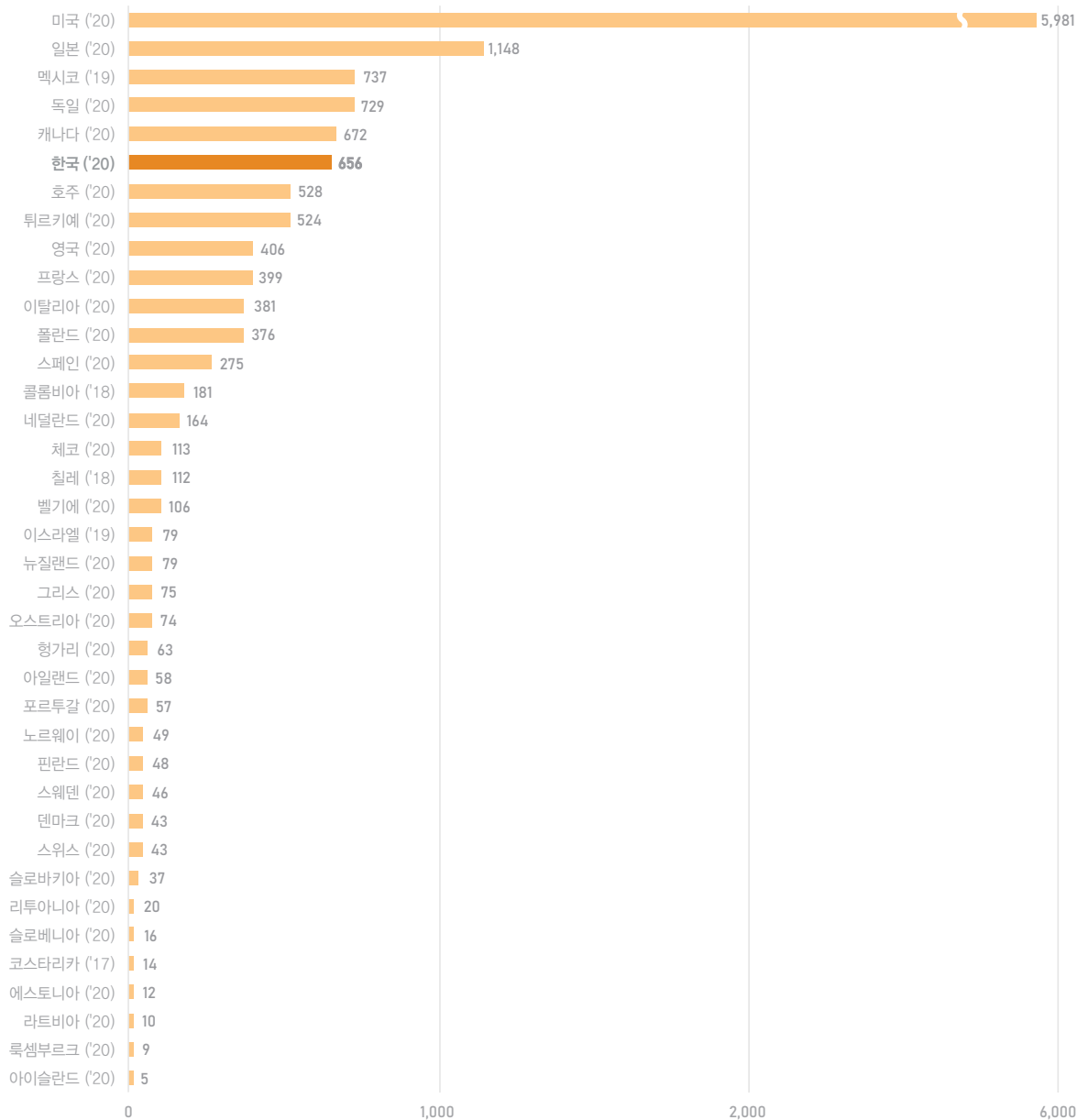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온실가스 총 배출량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656백만톤CO₂eq.으로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한 국가는 미국(5,981백만톤CO₂eq.)으로 두 번째로 높은 일본(1,148백만톤CO₂eq.)보다도 5배이상 많은 양이다.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단위: 백만톤CO₂eq.)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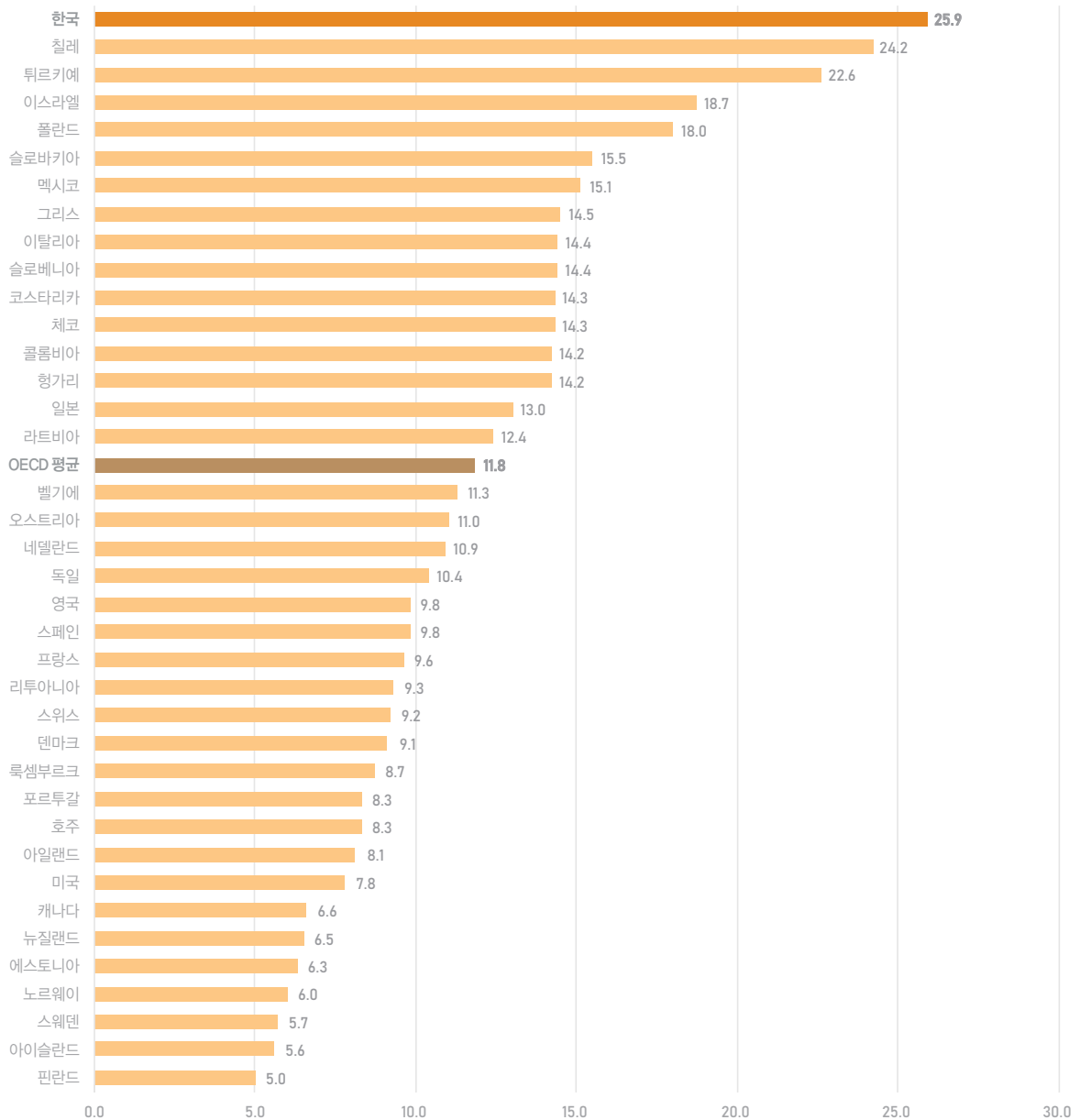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미세먼지(PM2.5) 농도

OECD에서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미세먼지(PM2.5) 농도를 보면, 한국은 $25.9\mu\text{g}/\text{m}^3$ 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을 제외하고 $20\mu\text{g}/\text{m}^3$ 이상인 국가는 칠레와 튀르키예뿐이며, 한국과 인접한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도 $13.0\mu\text{g}/\text{m}^3$ 로 한국의 절반수준이다.

OECD 국가별 미세먼지(PM2.5) 농도(2020)

(단위: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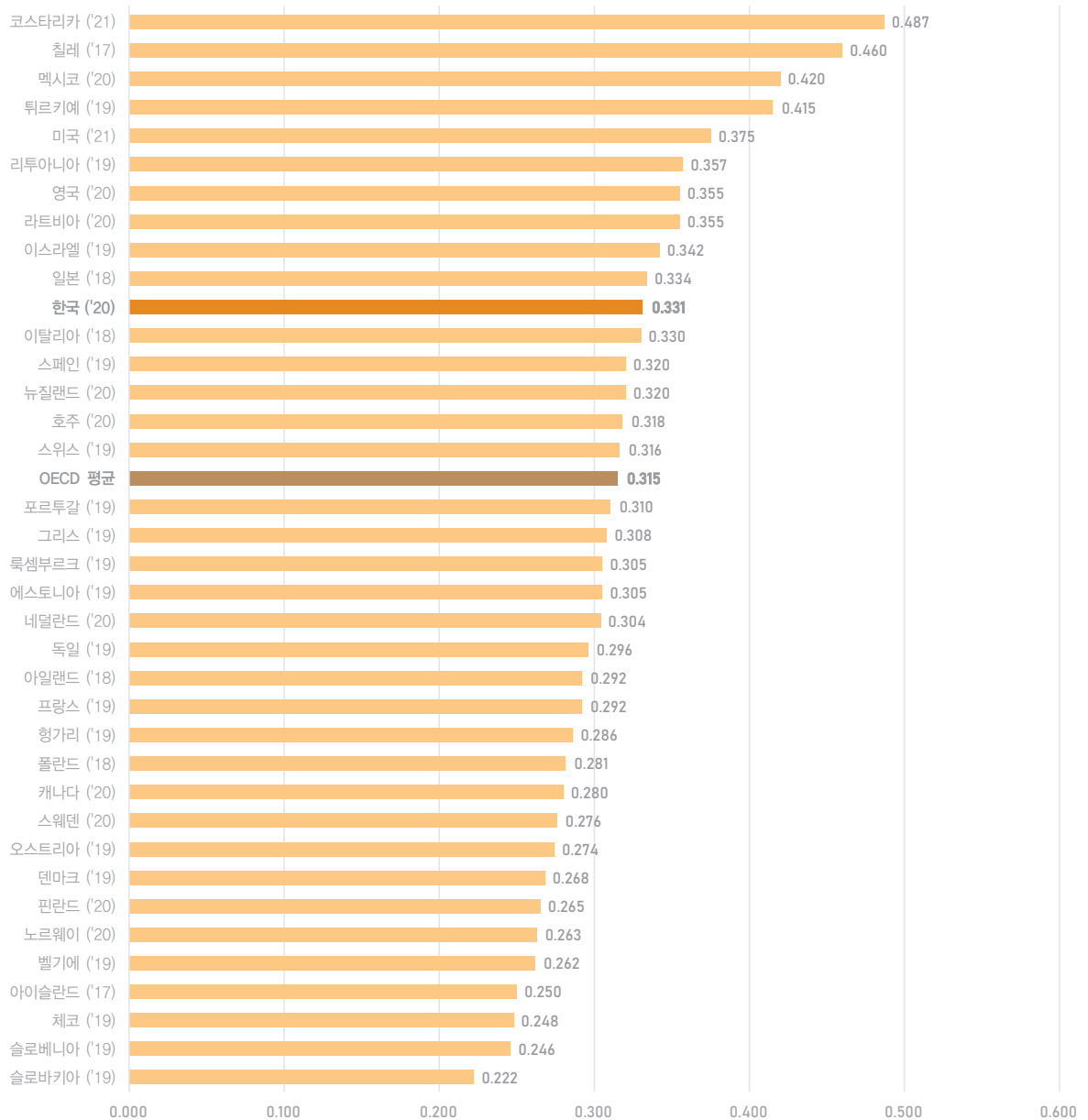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위성관측 자료와 화학수송모형(chemical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추정치임

지니계수

한국의 지니계수는 2020년 0.331로 OECD 회원국 중 열 한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0.315) 보다 다소 높다. 미국(0.375), 영국(0.355), 일본(0.334) 등은 한국보다 높고, 독일(0.296), 프랑스(0.292) 등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지니계수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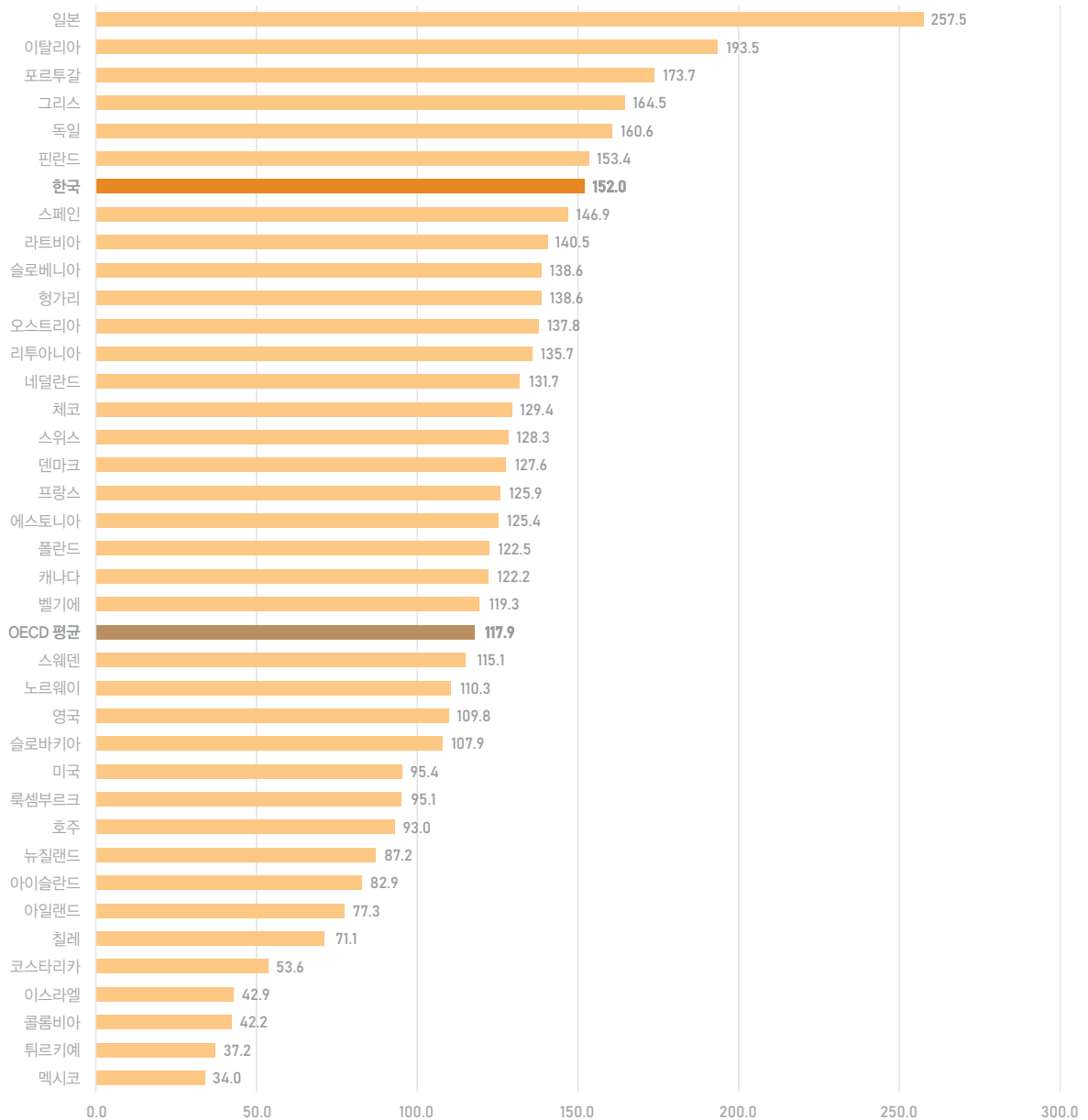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라트비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미국은 잠정치임

노령화지수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2.0으로 유소년인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약 1.5배많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일본(257.5), 독일(160.6)은 한국보다 높고, 프랑스(125.9), 영국(109.8), 미국(95.4)은 한국보다 낮다.

OECD 국가별 노령화지수(2022년)

(단위: 명/유소년인구 100명)



출처: UNF「<https://population.un.org/wpp>,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2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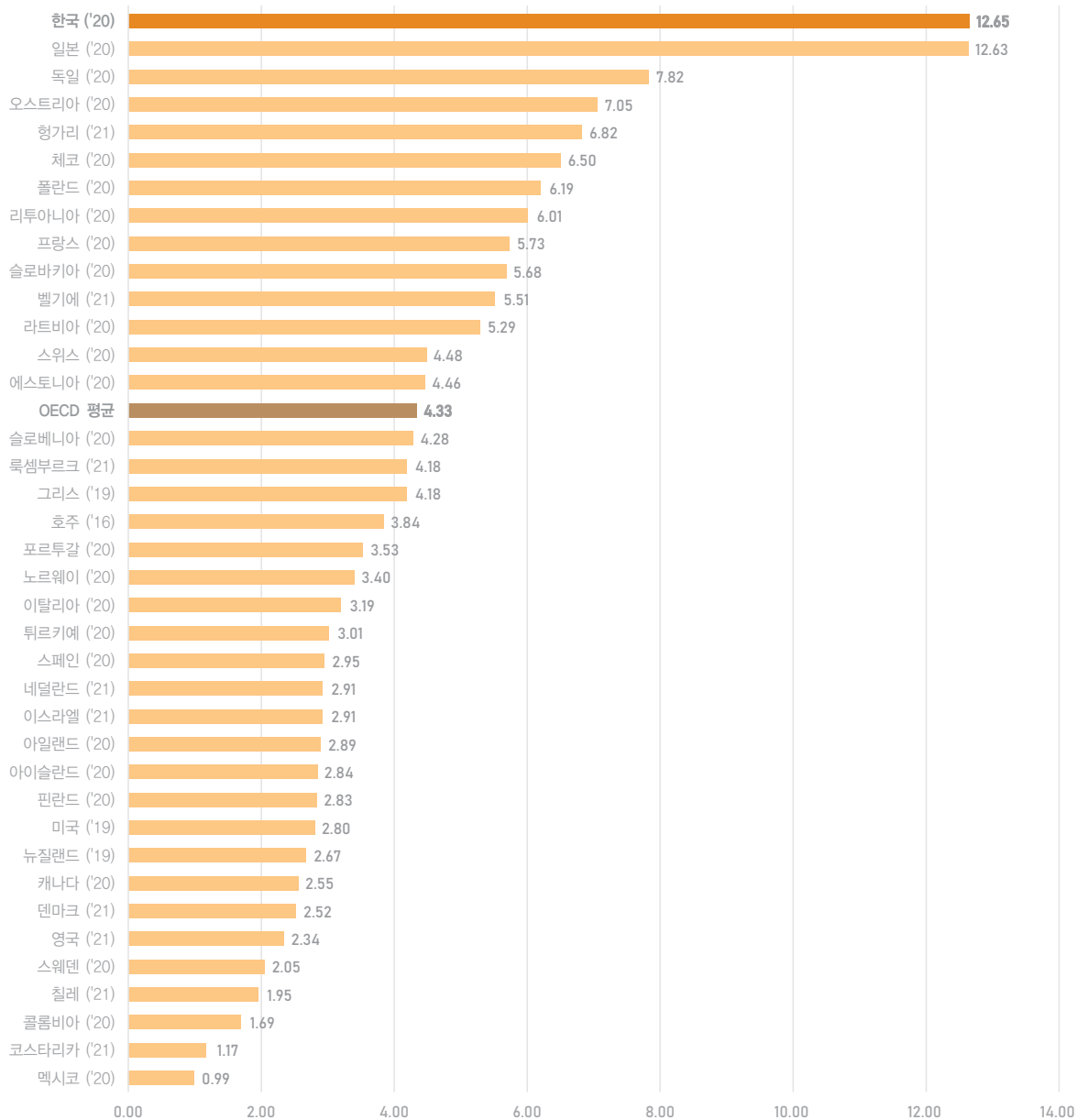
주: 노령화지수= 노인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총 병원 병상 수

한국의 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만명당 12.65개로서, 일본(12.63개)과 근소한 차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4.33개) 보다 2.9배 많은 수준이다.

OECD 국가별 총 병원 병상수

(단위: 개/인구 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칠레, 덴마크,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잠정치임

2. 안전지표 자료출처

범죄발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
측정방법	(형법범죄 발생건수 ÷ 장래추계인구) × 100,000
자료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1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지표정의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됨
측정방법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불법콘텐츠범죄 발생건수의 합
자료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작성주기	1년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지표정의	인터넷 이용자 중 지난 1년간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측정방법	최근 1개월내 인터넷 이용자(만12~69세) 중 지난 1년간 사이버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성폭력 발생건수

지표정의	경찰에 대한 신고 등에 의한 연간 성폭력 발생건수
측정방법	연간 시도 경찰청에 신고된 성폭력 발생건수의 합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화재 건수

지표정의	연간 전국 화재사고 발생 건수
측정방법	연간(1.1~12.31.) 전국 소방서 관할에서 발생하는 건축물화재, 차량, 선박, 항공기화재, 옥외화재 등 모든 화재
자료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작성주기	1년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표정의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 ÷ 장래추계인구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1년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정의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 총량
측정방법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계
자료출처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작성주기	1년

위험기상일수

지표정의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가 평년값 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를 보인 강풍, 폭염, 한파, 호우 일수
측정방법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일수, 한파 10월에서 익년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일수, 호우는 시간당 강우량이 30mm이상인 일수, 강풍은 최대풍속이 14m/s이상인 일수
자료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작성주기	1년

미세먼지(PM2.5) 농도

지표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 μ m 이하의 먼지)의 농도로 측정
측정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작성주기	1년

대기 중 오존 오염도

지표정의	연간 대기 중 평균 오존(O ₃) 농도
측정방법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으로 측정된 연간 평균 오존(O ₃) 농도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작성주기	1년

1인당 일평균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지표정의	1인당 하루평균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측정방법	연간 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량 ÷ 장래추계인구 ÷ 365
자료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1년

체내 환경유해물질(중금속) 노출 수준

지표정의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환경오염물질(납, 수은, 카드뮴) 노출 수준
측정방법	성인 기준 혈액 및 소변 검사에 의한 납, 수은, 카드뮴 농도의 기하평균값
자료출처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작성주기	3년

야간보행 안전도

지표정의	야간보행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작성주기	2년

사회안전 인식도

지표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작성주기	2년

등록장애인 수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애인등록 인구
자료출처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작성주기	1년

노령화지수

지표정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노인(65세 이상) 인구
측정방법	$(\text{노인(65세 이상) 인구} \div \text{유소년(0~14세) 인구}) \times 100$
자료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1년

독거노인 비율

지표정의	65세 이상 추계인구 중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측정방법	$(\text{65세 이상 1인 가구수} \div \text{6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자료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작성주기	1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지표정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 수의 합
자료출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지니계수

지표정의	0~1사이의 값을 가지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측정방법	X축에 인구를 소득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누적비율로 표시하고 Y축에 이들의 소득누적 점유율을 표시하여 이를 대응시킨 점들의 궤적(로렌츠곡선)과 대각선(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눔
자료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작성주기	1년

실업률

지표정의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방법	$(\text{만 15세 이상 실업자 수} \div \text{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자료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주기	1년

범죄피해율

지표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 발생 건수
측정방법	$(\text{범죄피해건수(추정)} \div \text{만 14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000$
자료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작성주기	2년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지표정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측정방법	만 19세이상 응답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작성주기	3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지표정의	해당연령 인구 대비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인구 수
측정방법	$(\text{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div \text{18세 미만 추계인구}) \times 100,00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작성주기	1년

우울감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측정방법	19세 이상 응답자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작성주기	2년

사회적 고립도

지표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작성주기	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지표정의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방법	$(\text{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div \text{총 가구 수}) \times 100$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음주운전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작성주기	1년

월간 음주율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측정방법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작성주기	1년

자해 및 자살 시도 건수

지표정의	연간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접수한 진료 건수
측정방법	전국의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자해 및 자살 시도 환자 진료 건수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2022」
작성주기	1년

경찰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경찰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div$ 경찰 공무원 수 (단, 경찰 공무원에는 별정직·일반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전경 및 의경, 해양경찰은 제외함)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주기	1년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소방 공무원 수
자료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주기	1년

구조 및 구급대원 1인당 주민 수

지표정의	119 구조 및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 119 구조 및 구급대원 수
자료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주기	1년

총 병원 병상 수

지표정의	인구 천명 당 병원 병상 수
측정방법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 ÷ 장래추계인구) × 1,000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안전띠 착용률

지표정의	운행 중 차량 내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률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자동차의 승차자 수 대비 안전벨트 착용 승차자 비율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이륜자 안전모 착용률

지표정의	이륜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규정된 안전모 착용률
측정방법	교통관측 대상 이륜차의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비율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작성주기	1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지표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근로자 수
측정방법	각년도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작성주기	1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지표정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측정방법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합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안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
측정방법	만9세~17세 아동 중 최근 1년 동안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작성주기	5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지표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측정방법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인구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작성주기	1년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손상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사망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사망자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운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낙상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낙상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낙상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익수사고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가해(범죄피해)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중독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유독성 물질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화재 사망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화재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작성주기	1년

자살률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측정방법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작성주기	1년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 당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질병 이외 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작성주기	1년

낙상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추락 및 낙상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추락 및 낙상 사고에 의한 손상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작성주기	1년

운수사고 입원율

지표정의	인구 10만명당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측정방법	(운수사고에 의한 입원 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작성주기	1년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수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자(실종자 포함) 및 부상자수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작성주기	1년

자연재난 피해액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작성주기	1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수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각년도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수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작성주기	1년

사회재난 피해액

지표정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측정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각년도 피해액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작성주기	1년

산업재해 사망률

지표정의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1만명당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 ÷ 산업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 수) × 10,000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작성주기	1년

산업재해율

지표정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100명 당 재해자 수
측정방법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또는 질병이환자 수) ÷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 × 100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작성주기	1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표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수법으로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측정방법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및 대출사기형 피해금액 합(기관사칭형은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발생한 금액, 대출사기형은 금융회사를 빙자한 사기범이 정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며 대출심사 명목의 개인정보 및 선납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권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을 통한 대출빙자형 사기 등 피해자로부터 편취 후 잠적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
자료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작성주기	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지표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 환자수
측정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등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1년간 발생한 환자수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작성주기	1년

식중독 발생건수

지표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신고 건수
측정방법	동일한 식품 섭취로 인하여 2명 이상에서 유사한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 집단발생한 신고 건수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작성주기	1년

온열질환자 수

지표정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
측정방법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내 해당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작성주기	1년

3. 참고문헌



경찰청, 2022, 경찰백서

경찰청, 2022, 경찰통계연보 2021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2021

고용노동부, 2022,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명 돌파 임박, 보도자료(2022.7.25.)

과학기술부, 2022, 2021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국무조정실, 2023, 2022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2023.2.1.)

국토교통부, 2023, 자동차 등록 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보도자료(2023.1.26.)

기상청, 2022, 기상연감 2021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보건복지부, 2022, 자살예방백서 2022

소방청, 2022,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청, 2022, 2022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질병관리청, 2022,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보도자료(2022.10.7.)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1

통계개발원, 2022, 안전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안전지표 체계 개편 연구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1

통계개발원, 2023, 국민 삶의 질 2022

통계청, 2022,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보도자료(2022.9.27.)

통계청, 2022,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2022.12.1.)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2, 2022 학교안전 실태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2022, 2021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2022, 2021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2022,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환경부, 2022, 2021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2022, 2021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보도자료(2021.8.13.)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집필진 민경아(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조진혜(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송나경(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보조원)

발행 2023년 4월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 (042) 366-7100, FAX.(042) 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인쇄처 나라기획 (042) 226-2568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Safety Report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8F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